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단절의 시대,

통일의식 변화

2020
한국인의
통일의식

일시 10월 13일 (화)
14:00-17:40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0 한국인의 통일인식

단절의 시대, 통일인식 변화

제1부 조사결과

발표1	조사개요	5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2	통일에 대한 인식	9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발표3	북한에 대한 인식	29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4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45
	이종민 (한국은행)	
발표5	주변국 관계에 대한 인식	57
	최규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토론	황지환 (서울시립대), 박종철 (통일연구원)	

제2부 심화분석

발표6	한국인의 정치적 정향과 통일인식	89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발표7	단절 시대의 통일 감정	101
	김희정 (인하대)	
발표8	복합갈등시대의 '신뢰'와 평화 프로세스	115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토론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성희 (수원대)	

2020 한국인의 통일인식

단절의 시대,
통일인식 변화

제1부 조사결과

발표1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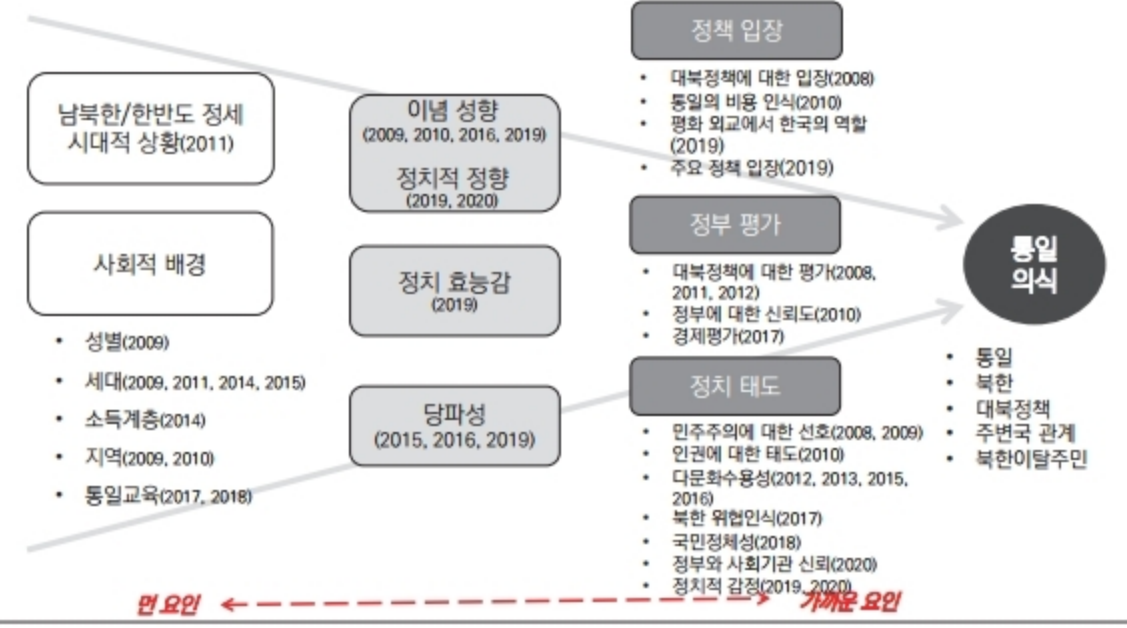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0 통일의식조사

단절의 시대, 통일의식 변화



통일의식조사 분석틀 (인과성 갈때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의 개요

- 연혁** : 2007년 7월 첫 조사를 시작하여 매년 1회 실시.
- 조사의 취지** : 통일, 북한, 대북정책, 북한이탈주민, 국제환경, 사회의식 등에 대해 우리사회의 여론과 국민 의식을 파악, 분석하여 효율적인 통일 논의를 창출하며 정책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 마련
- 조사 방법** : 통일의식조사는 전국 16개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1,200명을 다단계무작위추출법으로 표집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1:1 개별면접조사 방법으로 실시.
- 조사 분야** : 설문지의 내용은 통일에 대한 인식, 대북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주변국과의 관계인식 등 총 다섯 분야로 구성.
- 결과 발표** : 통일의식조사의 1차 분석결과는 9~10월에 학술세미나를 통해 발표되고, 최종분석결과는 12월 단행본을 통해 발표.

2020년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 일지

시기	내용
1월	•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과 발표 (1.1) •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1.14) • 코로나바이러스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 까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잠정 중단 협의(1.30)
2월	• 한미 연합사령부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연기 결정(2.27)
3월	• 대통령, 3.1 독립운동 101주년 기념사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3.4) • 북한-트럼프 미 대통령 친서 교환(3.22) • 대통령,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3.26)
5월	•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인간안보, 생명 공동체)(5.10) • GP 총탄 발사 관련 유엔사 논평(정전협정 위반)(5.26)
6월	•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배라, 연락사무소)(6.4, 6.13) • 북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6.16) • 대통령, 6.25 전쟁 제 70주년 기념사(6.25)
7월	•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7.10) • 대통령, 제21대 국회 개원연설(7.16)
8월	• 대통령,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8.15) •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 7기 제 6차 전원회의 진행('21년 1월 제8차당대회 소집 결정, 8.20)
9월	•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9.21)
10월	•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10.11)

단절의 시대,
통일의식 변화

제1부 조사결과

발표2

통일에 대한 인식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2020 통일외식조사 진행 일지

시기	내용
2-3월	• 2020 통일외식조사 집필진 구성
4월	• 1차 집필진 회의 개최(3.24) 및 설문지 수정
5월	• 서울대학교 IRB(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의뢰
6월	• 한국갤럽 측과 설문내용 및 조사방법 논의(6.7)
7-8월	• IRB 심의 승인 (7.14) • 7월 22일 ~ 8월 17일 (27일간) 설문조사 진행 • 설문조사 결과 산출 및 집필진 송부(9.1) • 2차 집필진 회의 개최(9.11)
10월	• 결과발표회 개최(10.13)
11-12월	• 단행본 집필 및 발간
2021.8월	• 2020 통일외식조사 원자료 사회과학자료원(KOSSDA) 기탁

2020 통일외식조사 기본 내용

〈 표본 〉

- 모집단: 전국 17개 시도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 표본크기: 1,200명 (유효표본)
- 표본추출방법: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 표본오차: ± 2.8% (95% 신뢰수준)

〈 조사 방법 〉

- 조사방법: 전문 면접원에 의한 1:1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 조사기간: 2020년 7월 22일 ~ 8월 17일 (27일간)
- 가중치: 시/도별(16개), 성별(2개), 연령별(5개)로 모집단(2019년 5월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분포를 반영하여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이 일치하도록 보정하는 가중치 부여

| 통일에 대한 인식 (요약) |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1. 통일의 이미지, 필요성과 이유

1) 통일의 이미지

통일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이미지는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으로 그 비중은 2018년 58.1%, 2019년 60.6%에서 2020년 62.9%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궁극적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즉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자유롭게 왕래·교류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을 통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통일의 필요성

통일 필요성과 관련하여 2020년 조사에서 “매우”와 “약간 필요하다”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2.8%로 2019년 53.0%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었던 2018년 59.8%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들었다. 반면 통일이 “별로”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둘을 합해 2018년 16.1%, 2019년 20.5%에서 2020년 24.7%로 증가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층에서 이 비중은 각각 35.3%와 30.8%로 40대 19.3%, 50대 18.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10월 스톡홀름에서의 북미협상 결과와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이 사라짐에 따라 더욱 신중해진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통일의 이유

통일의 이유와 관련하여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남북한 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0년 조사의 경우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중이 2019년 34.6%에서 37.3%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2008년 최고치인 57.9%에 비하면 20% 이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남북한 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2008년 14.5%에서 2020년 37.9%로 두 배 이상 증가하여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미세하나마 “같은 민족이니까”를 넘어섰다. 한편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9년 18.9%에서 2020년 15.3%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전쟁위협 해소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두 범주를 합할 경우 53.2%로 2019년 51.5% 보다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민족적 당위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줄어드는 대신 전쟁위협 해소라는 안보문제 해결, 또는 한국이 보다 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통일의 추진 방식과 가능 시기

1) 통일의 추진 방식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추이를 보면 통일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남북관계가 급변한 2018년과 응답 항목을 구분한 2019년을 제외할 때 지난 10여 년간 점진적 통일을 선호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반면 "현재대로가 좋다"라는, 즉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대로가 좋다"라는 응답의 비중 또한 2018년 16.8%에서 2019년 19.7%로 상승한데 이어 2020년에는 21.4%로 더욱 상승하였다.

2) 통일의 가능 시기

통일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2018년 조사에서는 "5년 이내"로 응답한 비중이 6.3%, "10년 이내"로 응답한 비중이 25.7%로 둘 합해 32.0%에 달하였으나, 2019년 조사에서는 "5년 이내"로 응답한 비중이 3.6%, "10년 이내"로 응답한 비중이 17.9%로 둘 합해 21.5%로 줄어들었고 2020년 조사에서는 "5년 이내"로 응답한 비중이 2.4%, "10년 이내"로 응답한 비중이 11.7%, 둘 합해 14.1%로 2018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었던 2018년의 낙관적 분위기가 사라지고 2020년 6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여겨져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사회 전반에 증가하고 있는 최근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통일의 편익에 대한 기대

1) 통일의 이익 기대감: 개인과 공동체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통일이 남한 전체에 이익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2020년의 경우 58.5%로 2019년의 61.8%에 비해 다소 줄어들긴 하였으나 이는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수치가 가장 높았던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통일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반면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빈부격차, 지역갈등, 표현의 자유 제약과 관련한 개선 기대감은 2019년에 비해 8.7%, 7.0%, 5.8%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며, 악화에 대한 우려는 빈부격차(17.3%), 지역갈등(15.6%), 범죄문제(13.8%), 이념갈등(13.8%) 순으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4. 통일한국의 체제와 통일정책의 시급성

1) 통일 한국의 체제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와 관련하여 2020년 조사 결과는 2007년 조사 이래 다수 국민이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택한 응답은 지난 10여년 간 큰 변동 없이 대체로 43~49% 사이에서 움직여 왔으며 2020년의 경우 47.0%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남북한 체제의 절충"을 선택한 응답은 2009년 최고치인 39.1%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알 수 있으며 "남북한 두 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2) 통일 정책의 시급성

국민들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북한 비핵화, 군사적 긴장해소, 북한의 인권 개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의 순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순위는 2018년 이후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는 순위로 북한 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통일을 이루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남북한 경제협력, 정기적인 남북한 회담 개최 등에 대한 시급성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결론: 주요 특징 및 경향

2020년 조사 결과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었던 2018년의 낙관적 분위기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2020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사그라들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사회 전반에 증가하고 있는 최근 분위기를 반영하여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 통일 이후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 등에 있어 신중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통일의 이유와 통일 한국의 체제와 관련하여서는 민족적 당위 보다는 실용적 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향과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난 2007년 첫 조사 이래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20년 조사에서 통일의 이유로 "남북한 간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미세하나마 "같은 민족이니까"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전쟁위험 해소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두 범주를 합할 경우 53.2%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사실이다.

통일에 대한 인식

김범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통일의 이미지

통일의 이미지	2018	2019	2020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58.1	60.6	62.9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	14.8	15.0	13.3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19.3	20.0	17.7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	7.5	4.1	5.8
기타	0.3	0.3	0.3
합계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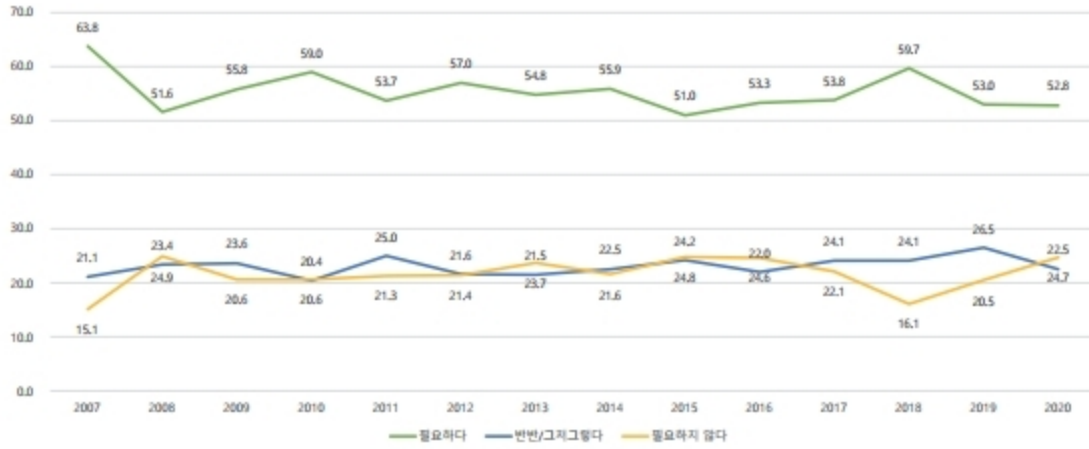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

- 2018년 2월: 북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 2018년 9월 19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 2019년 2월 27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 (베트남 하노이)
- 2019년 6월 30일: 제3차 북미정상회담 (판문점 평화의집)
- 2019년 10월 5일: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
- 2020년 1월 22일: 북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폐쇄 시작 (외국인관광객)
-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2020년 6월 17일: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병력 배치
- 2020년 7월 22일~8월 17일: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필요성 주요 특징

- 우선 통일 필요성과 관련하여 2020년 조사에서 "매우"와 "약간 필요하다"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2.8%로 2019년 53.0%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었던 2018년 59.8%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들음
- 반면 통일이 "별로"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둘을 합해 2018년 16.1%, 2019년 20.5%에서 2020년 24.7%로 증가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섬. 특히 20대와 30대 젊은층에서 이 비중은 각각 35.3%와 30.8%로 40대 19.3%, 50대 18.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
- 2020년 조사는 2019년 10월 스톡홀름에서의 북미협상 결렬과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이 사라짐에 따라 더욱 신중해진 분위기를 반영

통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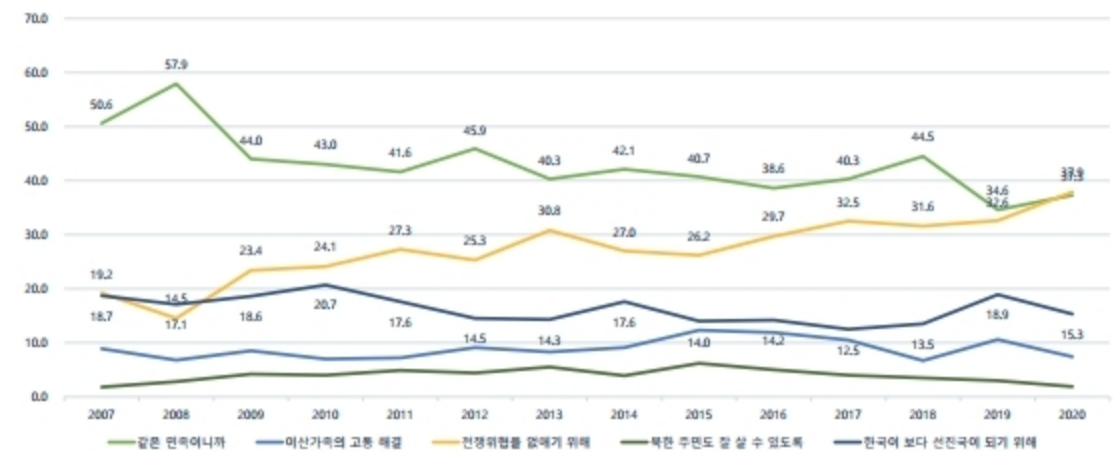
통일의 이유 주요 특징

- 통일의 이유와 관련하여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남북한 간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
- 특히 2020년 조사의 경우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중이 2019년 34.6%에서 37.3%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2008년 최고치인 57.9%에 비하면 20% 이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반면 "남북한 간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2008년 14.5%에서 2020년 37.9%로 두 배 이상 증가하여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미세하나마 "같은 민족이니까"를 넘어섬
- 한편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9년 18.9%에서 2020년 15.3%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전쟁위험 해소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두 범주를 합할 경우 53.2%로 2019년 51.5% 보다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섬
- 이러한 결과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민족적 당위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줄어드는 대신 전쟁위험 해소라는 안보문제 해결, 또는 한국이 보다 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

통일의 필요성과 세대별 응답 비율

연령대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9~29세	13.3	14.4	7.6	40.8	26.7	27.7	28.3	33.7	29.5	14.0	17.6	28.6	3.6	7.7	6.7
30대	17.3	11.7	16.8	35.6	26.5	26.2	27.4	36.9	26.2	17.5	21.5	23.8	2.3	3.4	7.0
40대	23.2	21.7	23.0	35.4	32.3	35.9	26.4	27.0	21.8	13.8	14.4	16.5	1.1	4.6	2.8
50대	27.2	25.9	28.0	42.2	36.1	34.9	16.0	21.0	18.4	13.3	14.6	13.0	1.2	2.5	5.8
60대 이상	24.6	25.1	26.9	37.5	41.7	33.6	23.4	15.6	18.2	9.3	11.4	18.6	5.2	6.2	2.8

통일의 이유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이유

통일 필요성	통일의 이유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 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없다/모름/무응답	합계 (N)
매우 필요		43.8 (110)	3.2 (8)	29.9 (75)	0.8 (2)	21.5 (54)	0.8 (2)	20.9 (251)
약간 필요		39.7 (152)	5.7 (22)	36.3 (139)	2.6 (10)	15.4 (59)	0.3 (1)	31.9 (383)
반반/그저 그렇다		34.4 (93)	11.9 (32)	38.9 (105)	1.9 (5)	13.0 (35)	0.0 (0)	22.5 (270)
별로 필요하지 않다		30.4 (72)	7.2 (17)	48.1 (114)	2.1 (5)	12.2 (29)	0.0 (0)	19.8 (237)
전혀 필요하지 않다		33.9 (20)	17.0 (10)	37.3 (22)	1.7 (1)	10.2 (6)	0.0 (0)	4.9 (59)
합계(N)		37.3 (447)	7.4 (89)	37.9 (455)	1.9 (23)	15.3 (183)	0.3 (3)	100.0 (1,200)

카이제곱 검정 $\chi^2=57.17$ $p<0.01$

통일 필요성과 되지 말아야 할 이유

통일 필요성	통일의 이유	남북간 정치체제의 차이	남북간 사회 문화적 차이	통일의 경제적 부담	통일 이후 사회적 문제	주변국 정세의 불안정	기타/무응답	합계 (N)
매우 필요		24.7 (62)	12.4 (31)	34.3 (86)	22.7 (57)	4.0 (10)	2.0 (5)	20.9 (251)
약간 필요		21.7 (83)	12.8 (49)	37.3 (143)	26.1 (100)	1.8 (7)	0.3 (1)	31.9 (383)
반반/그저 그렇다		18.5 (50)	15.6 (42)	31.5 (85)	32.6 (88)	1.9 (5)	0.0 (0)	22.5 (270)
별로 필요하지 않다		19.8 (47)	11.4 (27)	36.7 (87)	28.3 (67)	3.4 (8)	0.4 (1)	19.8 (237)
전혀 필요하지 않다		18.6 (11)	20.3 (12)	27.1 (16)	32.2 (19)	1.7 (1)	0.0 (0)	4.9 (59)
합계(N)		21.8 (253)	12.6 (151)	37.9 (455)	26.0 (312)	2.6 (31)	0.6 (7)	100.0 (1,200)

카이제곱 검정 $\chi^2=33.37$ $p<0.1$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2018	2019	2020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	19.2	17.9	21.1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13.7	12.7	13.4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35.2	38.8	34.8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26.8	25.4	27.6
통일로 인한 주변국 정세의 불안정	4.5	4.6	2.6
기타	0.2	0.2	0.3
무응답	0.5	0.3	0.3
합계(N)	1,200	1,200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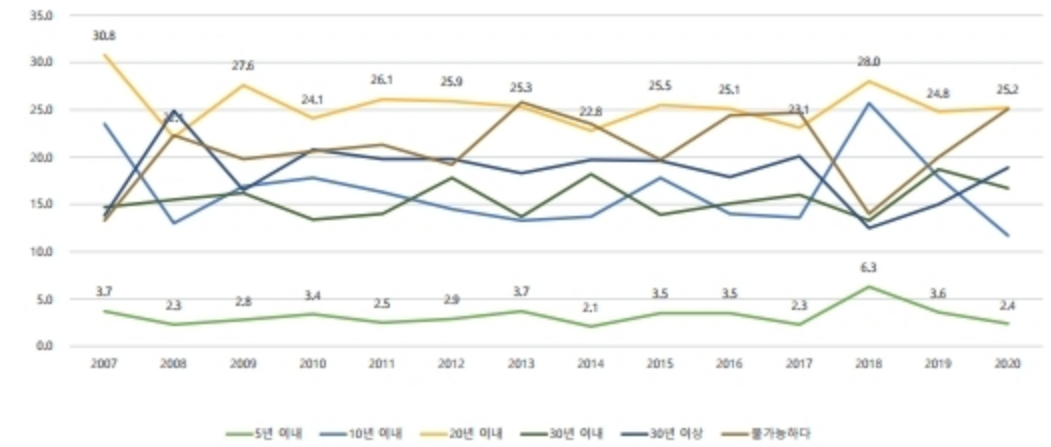
통일 추진 방식 및 가능 시기 주요 특징

- 통일의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현재대로가 좋다"라는 응답의 비중이 2018년 16.8%에서 2019년 19.7%로 상승한 데 이어 2020년에는 21.4%로 더욱 상승
- 통일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2018년 조사에서는 "5년 이내"로 응답한 비중이 6.3%, "10년 이내"로 응답한 비중이 25.7%로 둘을 합해 32.0%에 달하였으나, 2019년 조사에서는 "5년 이내"로 응답한 비중이 3.6%, "10년 이내"로 응답한 비중이 17.9%로 둘을 합해 21.5%로 줄어들었고 2020년 조사에서는 "5년 이내"로 응답한 비중이 2.4%, "10년 이내"로 응답한 비중이 11.7%, 둘을 합해 14.1%로 2018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었던 2018년의 낙관적 분위기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사라지고 2020년 6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사회 전반에 증가하고 있는 최근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통일의 추진 방식

연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대로가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합계 (N)	
2007	10.6	70.6	11.8	7.0	1,200	
2008	9.2	65.8	16.3	8.6	1,213	
2009	8.6	68.3	15.6	7.5	1,203	
2010	10.0	66.9	16.1	6.9	1,200	
2011	9.6	66.9	15.3	8.2	1,201	
2012	9.6	65.1	18.3	7.0	1,200	
2013	11.3	61.8	18.9	8.0	1,200	
2014	12.1	61.3	19.6	7.0	1,200	
2015	11.7	57.5	21.8	9.0	1,200	
2016	13.1	54.2	23.2	9.5	1,200	
2017	12.1	54.7	24.7	8.4	1,200	
2018	9.7	68.0	16.8	5.5	1,200	
연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되는 것이 좋다*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대로가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합계 (N)
2019	4.3	16.7	53.5	19.7	5.8	1,200
2020	3.9	12.3	55.6	21.4	6.8	1,200

통일의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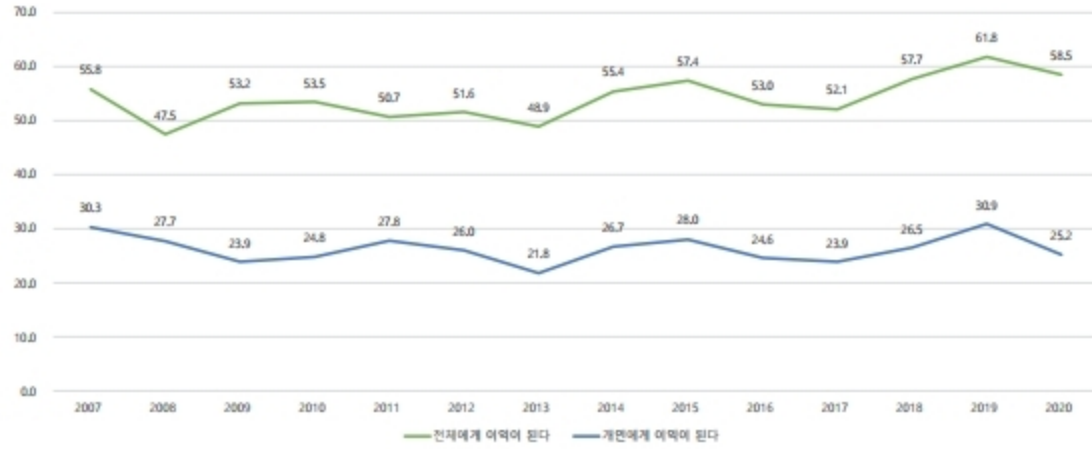
통일의 추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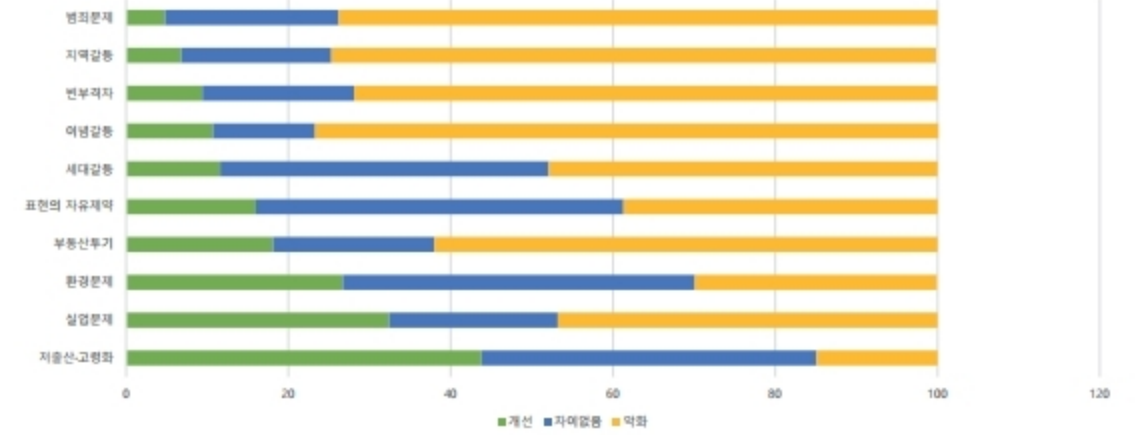
통일의 이익 및 사회문제 개선 주요 특징

- 2020년 조사가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에 대해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신중해진 인식을 드러내주고 있으나 동시에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통일이 남한 전체에 이익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2020년의 경우 58.5%로 2019년의 61.8%에 비해 다소 줄어들긴 하였으나 이는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수치가 가장 높았던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통일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
- 반면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줌
- 특히 빈부격차, 지역갈등, 표현의 자유 제약과 관련한 개선 기대감은 2019년에 비해 8.7%, 7.0%, 5.8%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며, 악화에 대한 우려는 빈부격차(17.3%), 지역갈등(15.6%), 범죄문제(13.8%), 이념갈등(13.8%) 순으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통일의 이익: 전체와 개인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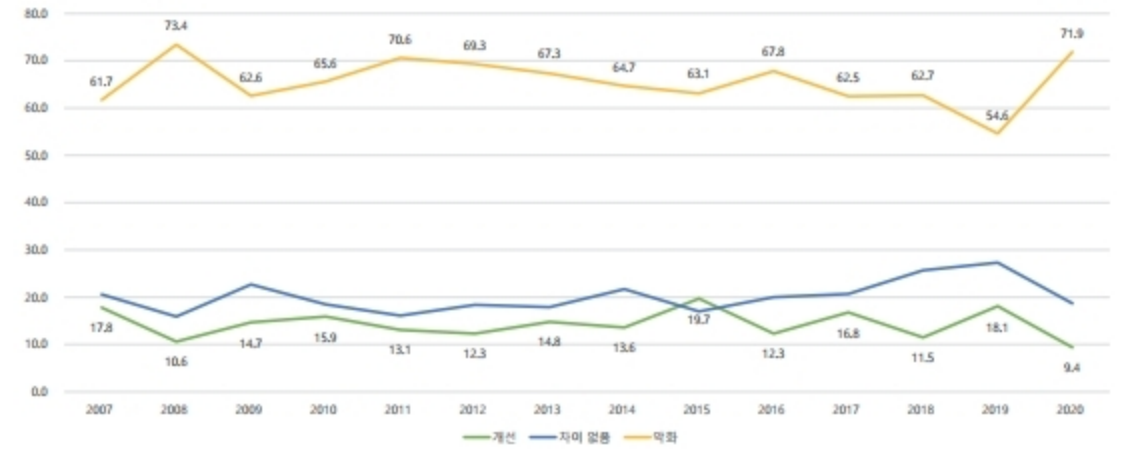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이익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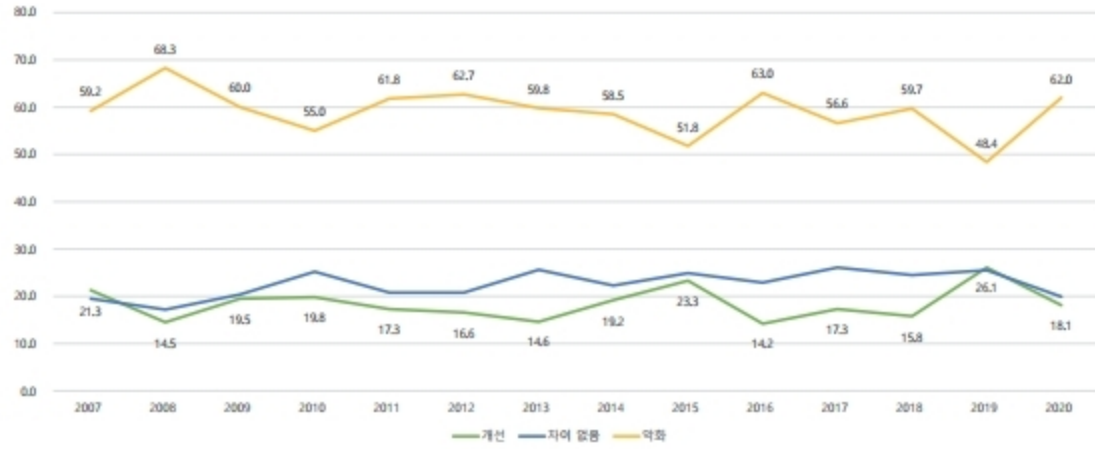
통일의 이익	매우 이익	다소 이익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합계 (N)
통일 필요성					
매우 필요	35.1	48.6	15.5	0.8	20.9 (251)
약간 필요	12.3	56.7	29.2	1.8	31.9 (383)
반반/그저 그렇다	3.3	48.5	41.9	6.3	22.5 (270)
별로 필요하지 않다	2.5	28.3	59.1	10.1	19.8 (237)
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25.4	33.9	40.7	4.9 (59)
합계(N)	12.5 (150)	46.0 (552)	35.3 (424)	6.2 (74)	100.0 (1,200)

카이제곱 검정 $\chi^2=394.76$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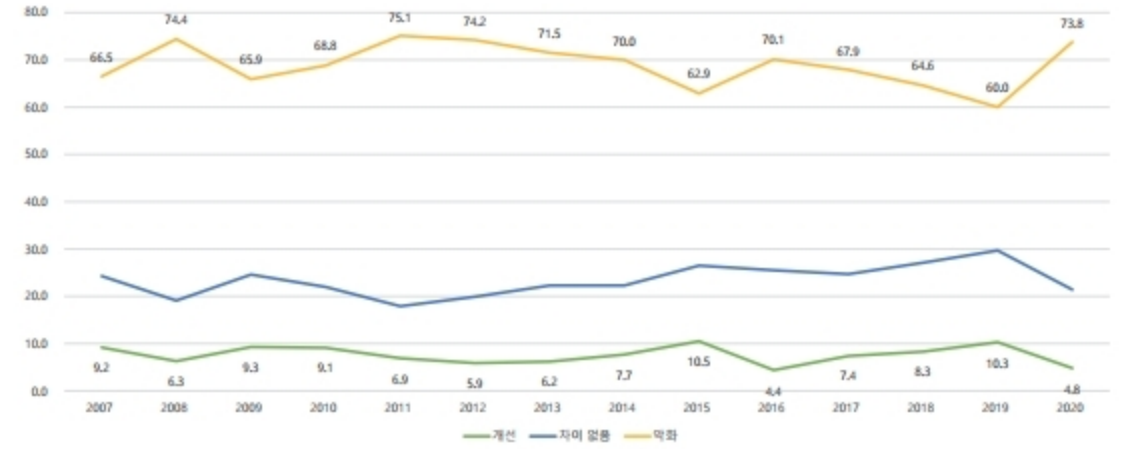
빈부격차 개선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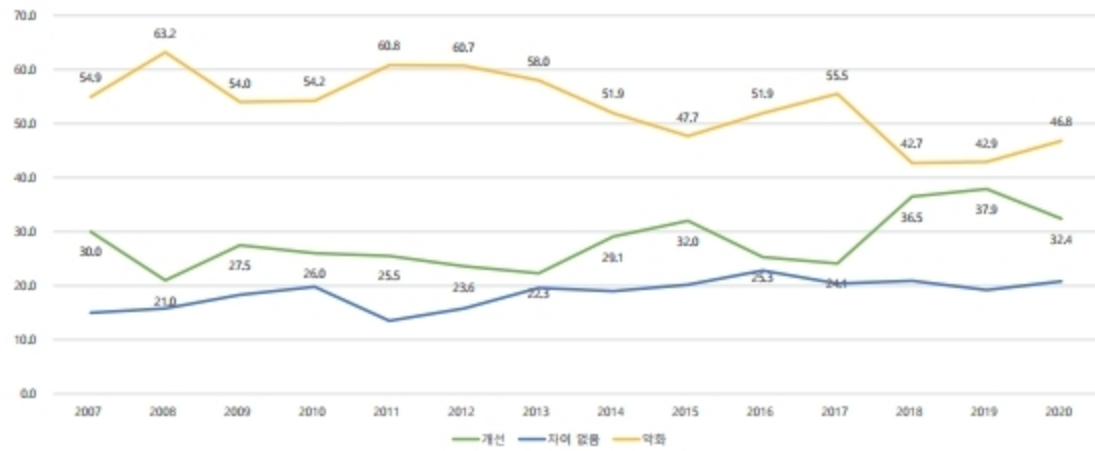
부동산투기 개선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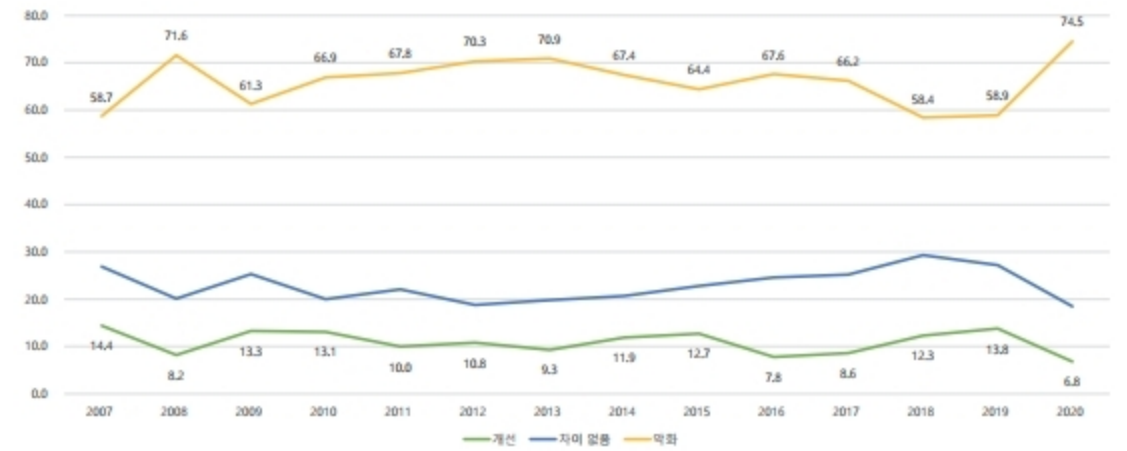
범죄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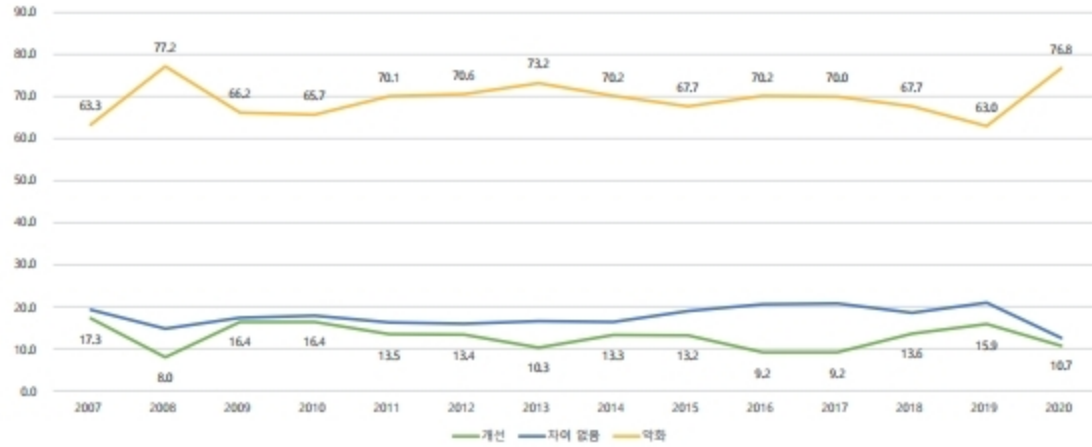
실업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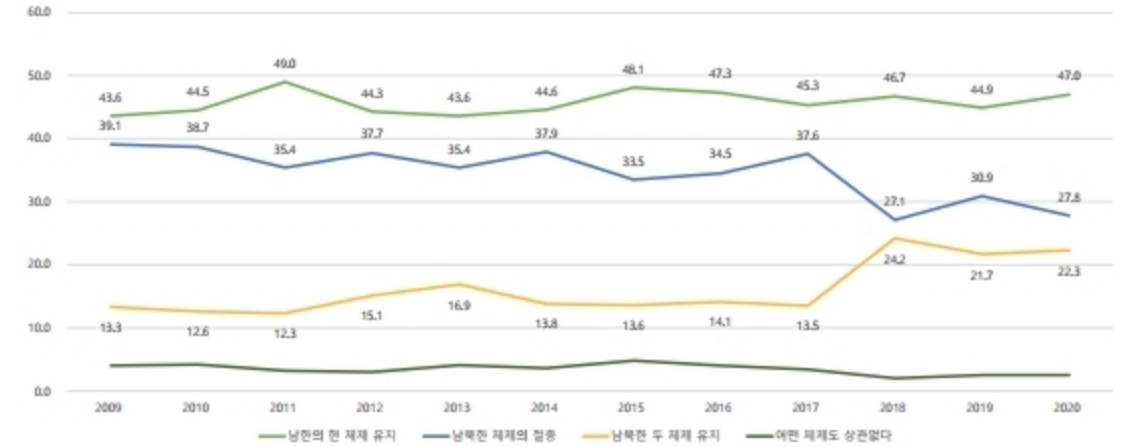
지역갈등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



이념갈등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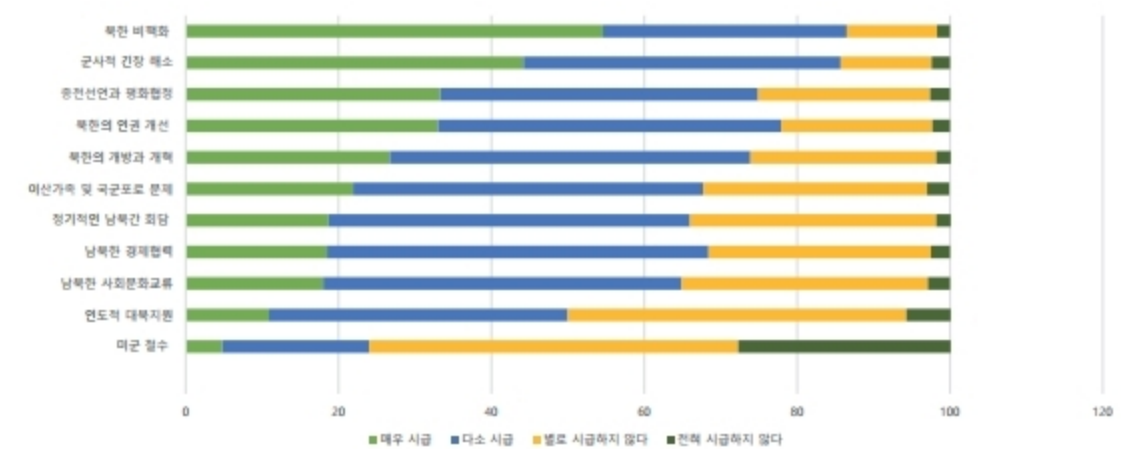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주요 특징

-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와 관련하여 2020년 조사 결과는 2007년 조사 이래 다수 국민이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줌
-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택한 응답은 지난 10여년 간 큰 변동 없이 대체로 43~49% 사이에서 움직여 왔으며 2020년의 경우 47.0%를 기록
- 반면 "남북한 체제의 절충"을 선택한 응답은 2009년 최고치인 39.1%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남북한 두 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지난 10여년 간 "남한의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큰 변동 없이 40% 중반대에서 움직인 반면 "남북한 체제의 절충"과 "남북한 두 체제의 유지"를 선택한 응답의 비중은 대체적으로 전자가 감소한 만큼 후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 특히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호전된 이후 절충형 모델을 선호하는 응답은 대략 10% 정도 감소한 반면 남북한 두 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응답은 비슷한 정도로 증가

대북 사안별 시급성



주요 특징 및 경향 요약

- 2020년 조사 결과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었던 2018년의 낙관적 분위기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2020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사그라들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사회 전반에 증가하고 있는 최근 분위기를 반영하여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 통일 이후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 등에 있어 신중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
- 한편 통일의 이유와 통일 한국의 체제와 관련하여서는 민족적 당위 보다는 **실용적 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향과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난 2007년 첫 조사 이래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20년 조사에서 통일의 이유로 "남북한 간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라고 응답한 비중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미세하나마 "같은 민족이니까"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전쟁위험 해소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두 범주를 합할 경우 53.2%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섬
- 이러한 경향들이 앞으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변화 속에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지켜봐야 함

감사합니다!

단절의 시대, 통일의식 변화

제1부 조사결과

발표3

북한에 대한 인식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북한에 대한 인식(요약) |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1. 2020년에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가 큰 폭으로 하락

- 북한 '협력대상' 인식 54.0%→48.2%, '적대대상' 인식 10.8%→14.8%
-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북한정권신뢰도' 51.6%→33.7%
- "최근 북한 변하고 있다" 70.9%→39.3%

2. 그럼에도 북한의 핵보유 위협 인식 감소,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중간수준 유지 등 북한발 안보불안 의식은 '안정' 기조 유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2018년 남북정상회담 효과 지속.

- 북한 핵에 대한 위협의식 79.2%→76.1
-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58.0%→61.2% 소폭 증가, '중간' 수준 유지.

3. 남북관계 경색 및 교착 국면에서 지역, 세대, 정치성향 등에 따른 인식 분화 진행

- 2018년 관계개선으로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국면에서 대북 의식수렴 이후, 작년부터 의식분화 확대
- o 세대별 차이로는 작년에 20~30대가 먼저 비판적 의식으로 반응하고 금년에 40~60대가 합류, 대북 부정·비판의식 견인. 또한 최근 2~3년 간 20대보다 30대의 대북보수성향이 보이는 바, 보수정부시기(2008-2016)에 대북 강경보수주의식을 형성했던 20대가 2010년대 후반 30대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코호트 현상일 가능성.
- 북한 '협력대상' 인식에서 작년에 20~30대가 먼저 하락, 40~60대는 오히려 상승하였으나, 올해는 40~60대도 모두 하락. '적대대상' 인식에서도 작년 20대가 10.3%→15.5%로 상승한 후 올해는 정체(15.5%→15.9%), 올해는 30~60대에서 적대의식 상승
-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로 연령별 차이 좁혀졌으나, 북한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서 연령별 차이 부분적 존재. 특히 30대가 20대보다 대북보수의견 형성 가능성.

- 지역별로는 대북인식 및 모든 항목에서 뚜렷한 개별 지형 형성
 - 북한 '협력대상' 인식, 호남권(58.0%, 충청권(56.6%), 수도권(49.5%), 영남권(38.6%)
 - 충청권의 급락(67.1%→56.6%)
 - 한반도 위기가 심각했던 시기 지역별 인식 수렴현상, 그 외의 시기에는 대북인식에서 지역별 차이 뚜렷
- 정치적 성향에 따른 대북인식의 차이는 확연히 존재, 북한인식의 차이가 정치적 이념 차이를 낳는 주된 요소, 특히 북한 '정권' 신뢰여부는 진보-중도-보수를 가르는 유력한 기준으로 여전히 통용
 - 북한정권 신뢰도, 진보 51.0% > 중도 28.2% > 보수 19.7%
 - 보수로 기우는 중도
 -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2014년과 2017년에는 '중도의 보수화', 평화 분위기가 극적으로 반전된 2018년에는 '중도의 진보화' 진행

4.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진전 없는 한, 대북 부정적 태도 높아질 것이며, 지역·세대·이념의 차이에 따른 북한인식의 분화 진행 예상,

- 북한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져 연령별 인식의 차이는 부분 수렴.
- 북한에 의한 남한 공무원 피살 사건 등으로 대북 부정여론 더 높아질 것
- 그러나 8차 당대회 등 북한발 정치행사로 상쇄 가능성 공존
- 남북관계 경색 지속 국면과 평화형성 이완기에 나타나는 피로감 및 학습효과 작용으로 대북외식 분화 심화 예상

북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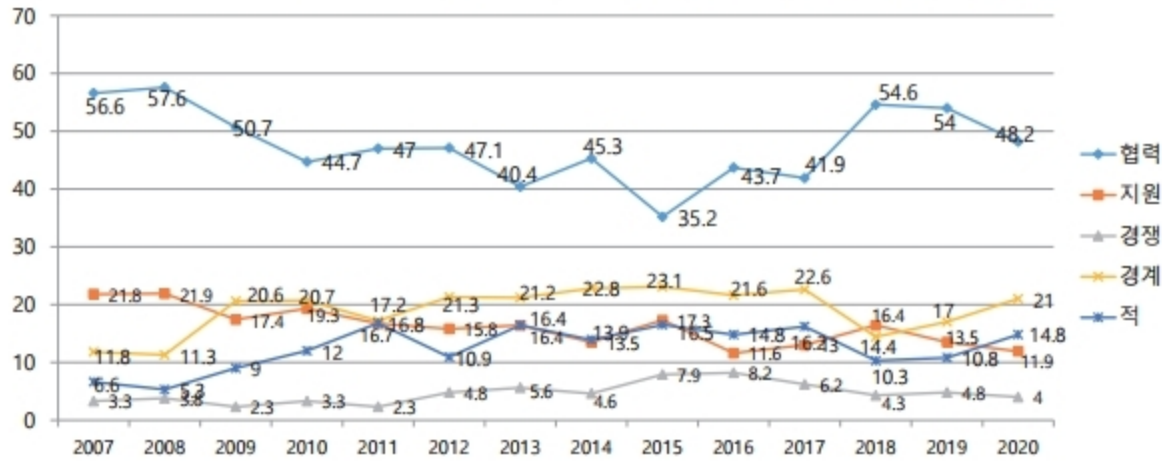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목 차

- I. 북한의 실체와 국가성 인식
- II. 북한정권 신뢰도
- III. 북한발 안보위협 인식
- IV. 북한 변화.인권.핵포기 등
- V. 북한사회 인지도와 이질성
- VI. 결론

I. 북한의 실체와 국가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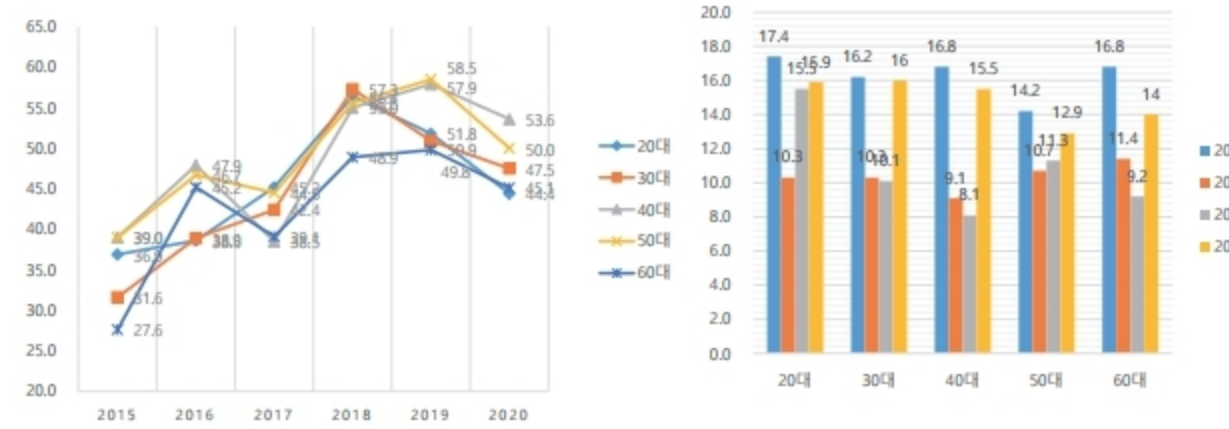
I-1.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단위: %)



- 북한을 협력 및 지원 대상으로 보는 인식 감소, 적대 및 경계 대상 인식 증가
- 최근 2년 경색된 한반도 상황 영향
- 금년 대북전단살포 갈등,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6.16)

I. 북한의 실체와 국가성 인식

I-3. ‘연령대별’ 북한 ‘협력대상’ 및 ‘적대대상’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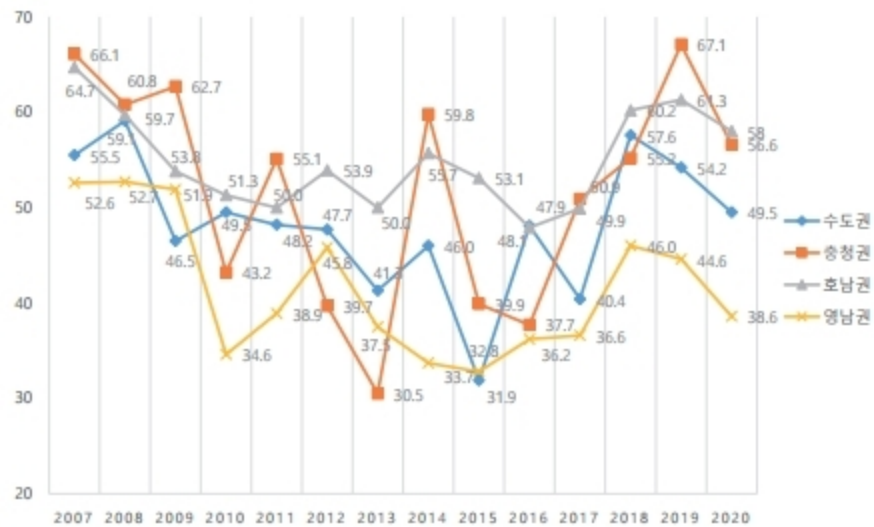


- p=0.017.
- 남북관계 경색 지속 국면에서 세대별 인식분화 진행
- 20~30대 젊은층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민감한 반응, 40-60대 순차 반응 주이

- 전 연령층 대북 적대의식 상승
- 20대는 2019년 적대의식 상승, 가장 민감하게 움직임
- 30-60대 2020년에 반응

I. 북한의 실체와 국가성 인식

I-2. ‘지역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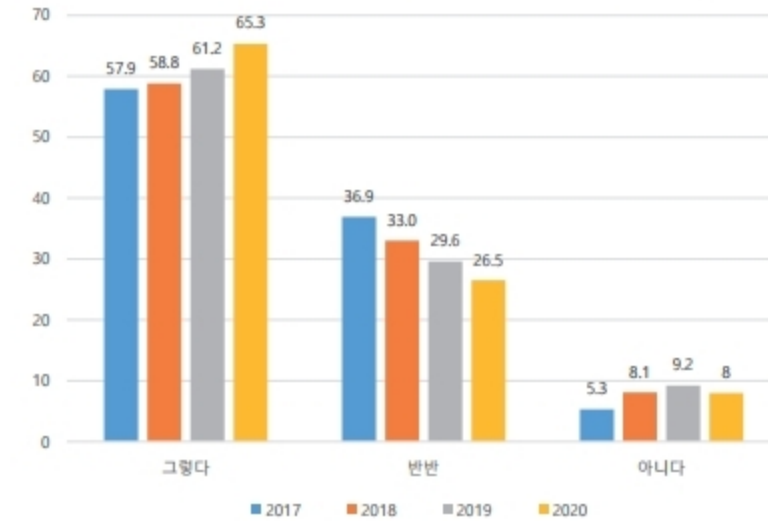


지역, 연령(p=0.017), 종교(p=0.003), 정치성향, 지지정당에 따라 차이 존재
 - 천주교(57.2%)>기독교(50.4%)>무종교(47.6%)>불교(46.0%)

- 충청권 하락폭 10.5%p로 큼. 4년 연속 가파른 상승 후 급락. 의미는?

I. 북한의 실체와 국가성 인식

I-4. 북한의 국가성 인식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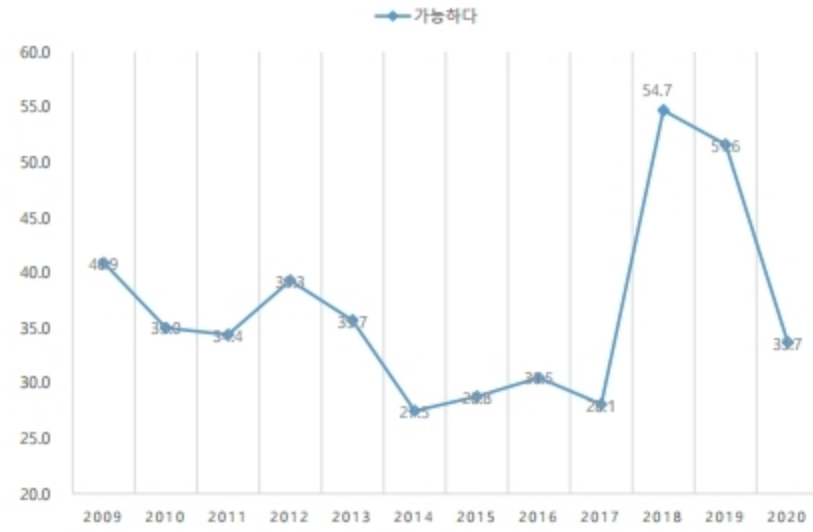
-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비율 소폭 증가 추세
 - 국가성 인정은 지역, 정치적 성향과 상관관계.

- 지역: 호남(77.0%)>수도(71.5%)>제주(62.0%)>충청(60.9%)>영남(53.0%)>강원(42.9%)

- 정치성향: 진보(74.5%)>중도(65.6%)>보수(51.2%)

II. 북한정권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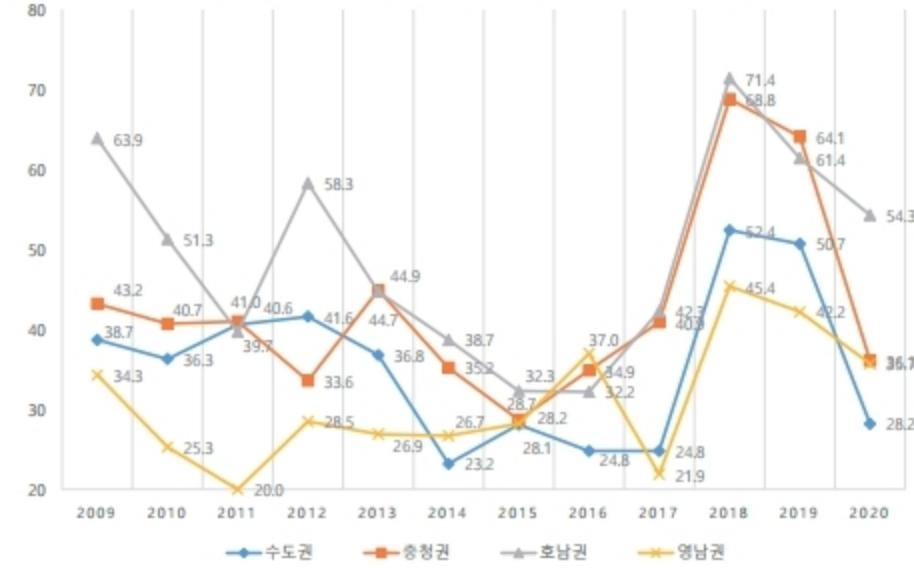
II-1. 대화와 타협의 상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가?”) (단위: %)



- 33.7% 남한주민,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
- 2018년 기록적인 신뢰상승 이후 급락,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 부재
- 연령, 지역, 정치성향에 따른 통계적 차이 존재

II. 북한정권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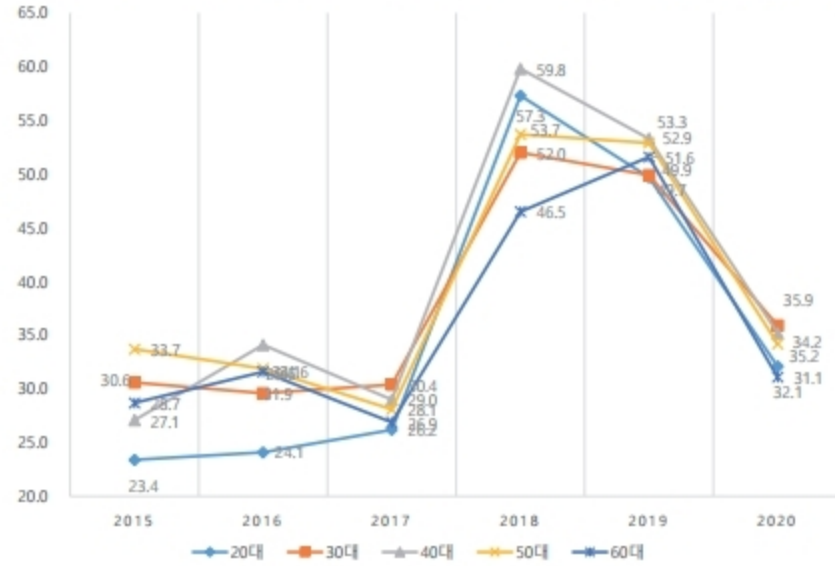
II-3.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 가능 (단위: %)



- 지역별 차이 뚜렷 $p=0.000$
-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 전반적 하락 추세 속, 충청권, 수도권의 급락

II.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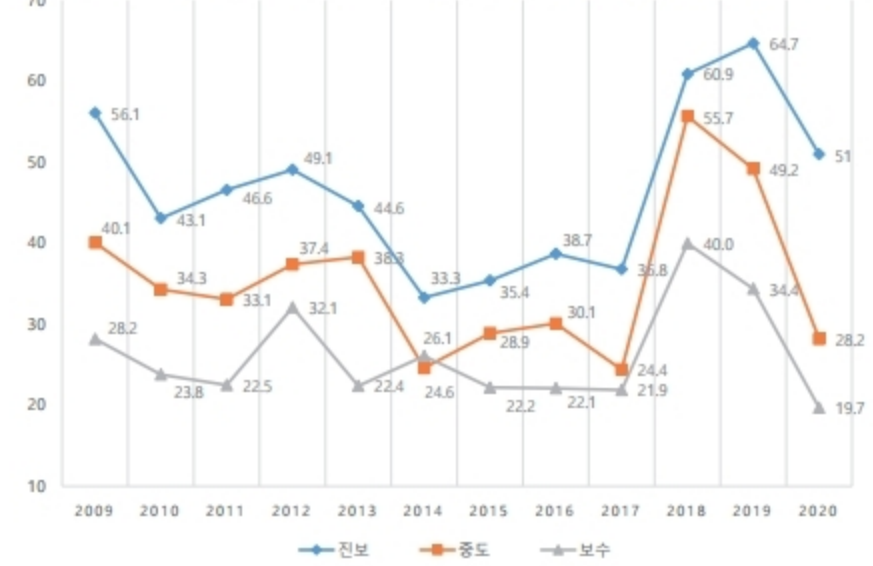
II-2. ‘연령대별’ 북한정권 신뢰도: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 가능 (단위: %)



- 북한정권 불신 증폭으로 연령별 차이 수렴 현상, 연령별 차이 $p=0.049$
- 북한정권 관련 인식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연령별 수렴현상, 남북관계 개선시 세대 차이 확대, 분화

II. 북한정권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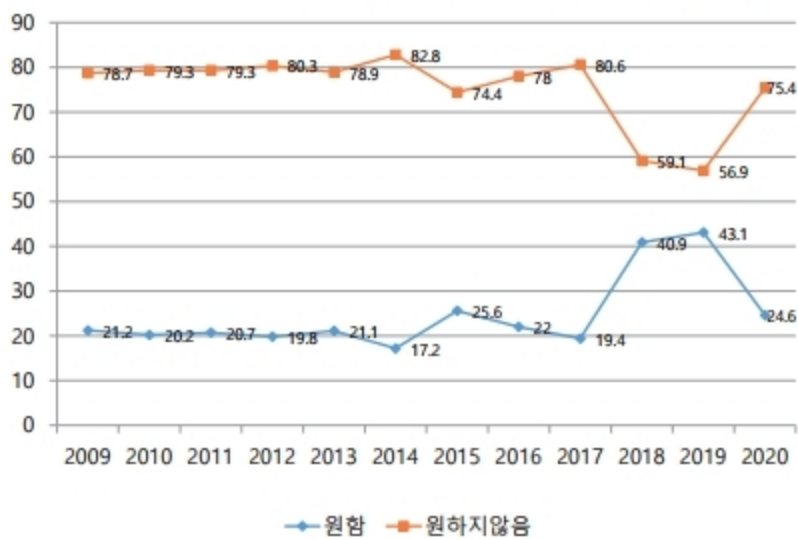
II-4.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 가능 (단위: %)



-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는 정치성향, 지지당파 상관관계, 진보-중도-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
- 남북관계 극도로 경색된 2014년과 2017년 중도의 보수화, 평화조성 국면의 2018년 중도의 진보화 진행
- 2020년 중도의 보수로 기울어는 현상

II.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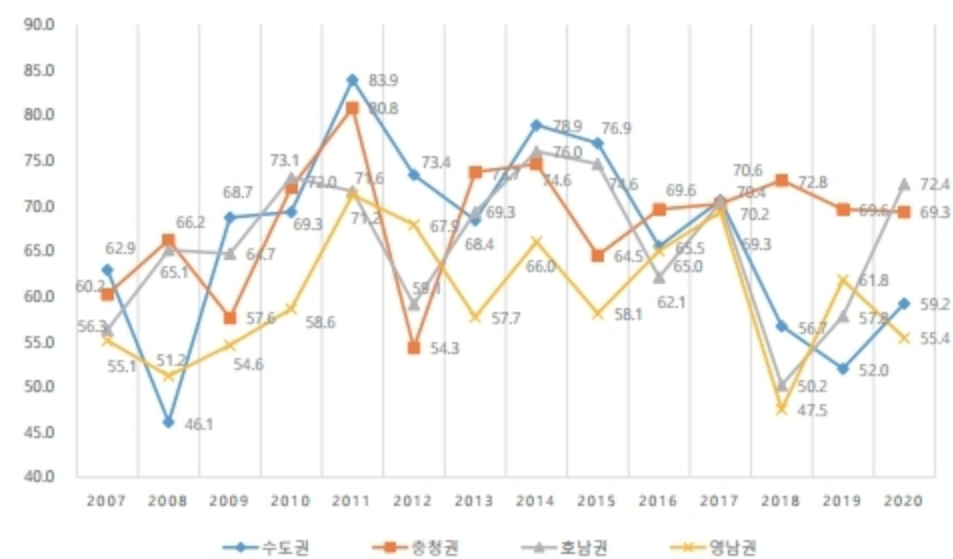
II-5. 북한정권이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 2018-2019년 상승 후 재하락, 예년 수준 유지
- 종교, 정치성향, 지지정당과 상관관계
- 기독교(31.4%) > 무종교(24.3%) > 불교(21.3%) > 천주교(14.7%)
- 진보(32.6%) > 중도(21.4%) > 보수(19.5%)

III. 북한발 안보위협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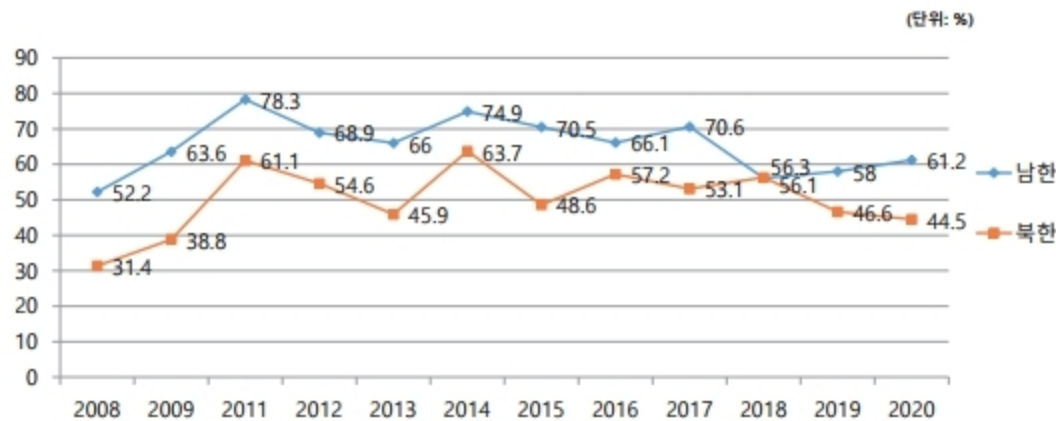
III-2.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 지역별(p=0.000) 차이 가시적 분화, 수도권과 호남권 안보불안 상승, 영남권 감소
- 수도권 북한도발 가능성 "많이 있다" 29.0%로 매우 높음. 충청권도 15.6%로 높음.

III. 북한발 안보위협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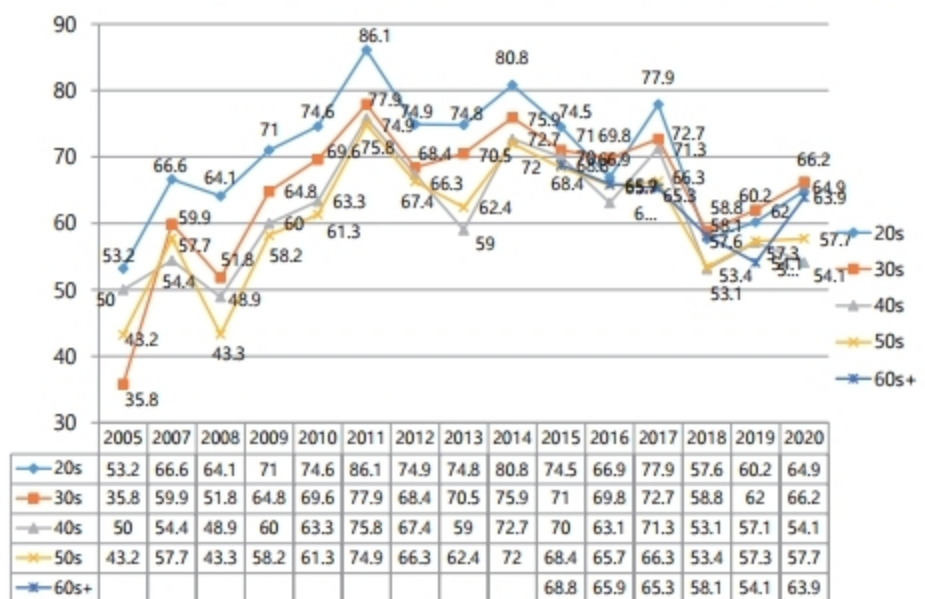
III-1.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남한 주민의 위협 인식은 58.0%→61.2%로 소폭 증가
- 남북관계 안정적인 1993년 47.7%, 1999년 44.3%, 2005년 43%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나 안보불안 높은 수준 아니며 중간 수준.
- 북한주민의식과 비교하면 대칭적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의식

III. 북한발 안보위협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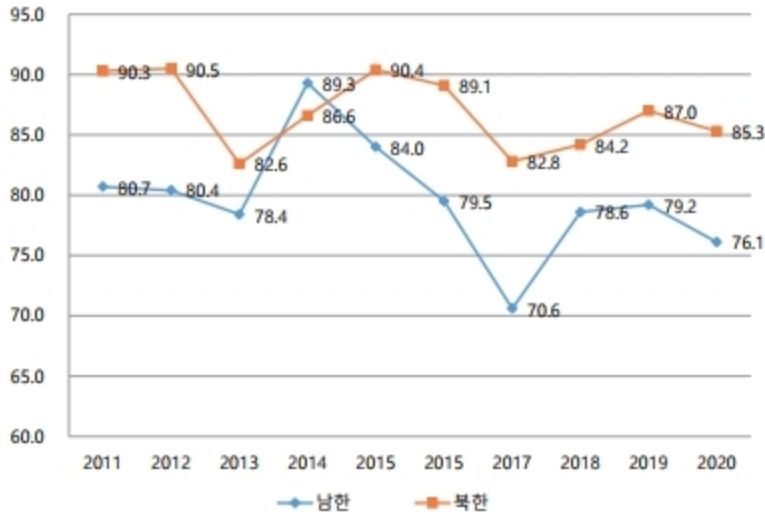
III-3. '연령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 연령(p=0.026), 사회계층(p=0.034), 정치성향(p=0.001), 지지정당과 상관관계
- 30대(66.2%) > 20대(64.9%) > 60대이상(63.9%) > 50대(57.7%) > 40대(54.1%)
- 보수정부시기 20대가 30대로 진입
- 진보(54.5%) < 중도(61.6%) < 보수(69.8%)

Ⅲ. 북한발 안보위협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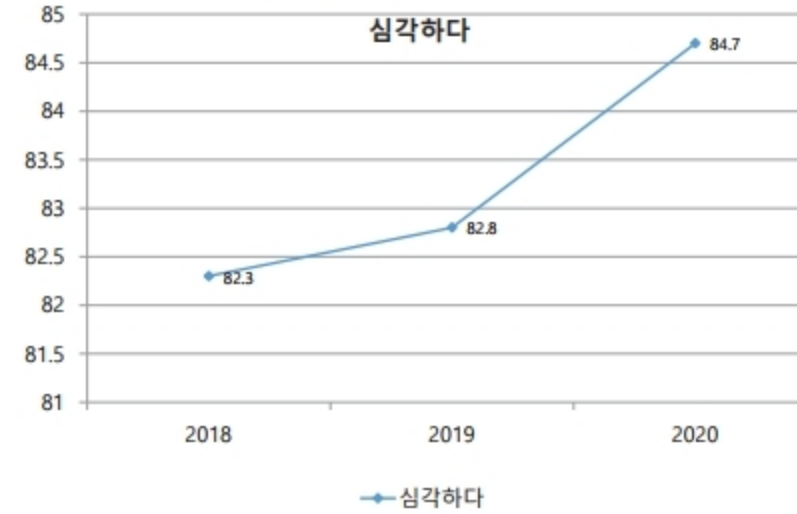
Ⅲ-4. 북한 핵보유 위협 인식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는가?”) (단위: %)



- 북한 핵무기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 인식은 76.1%로 소폭 하락
- 남북관계 경색불구 북한 핵위협 인식 하락(2020), 정상회담에도 핵위협 상승(2019) -> 북핵 위험 상존 인식 및 북핵 학습효과
- 지역(p=0.025): 수도권(74.4%), 충청권(75.1%)/영남권(75.9%), 호남권(79.0%)
- 정치성향(p=0.006): 진보(72.9%)<중도(73.9%)<보수(85.2%)
-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의 핵무기를 위협적 수단으로 인식, 남한주민보다 더 높아.

IV. 북한 변화, 인권, 핵포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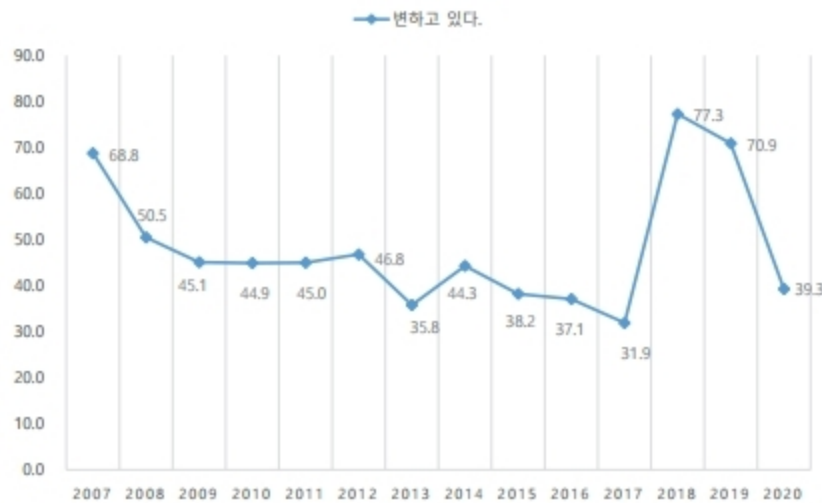
IV-2. 북한 인권상황 인식 (단위: %)



- '북한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84.7%'로 2019년 82.8%에서 상승, 북한 인권 심각하게 인식
- 지역, 소득수준(p=0.001), 사회계층(p=0.001), 정치성향(p=0.001)

IV. 북한 변화, 인권, 핵포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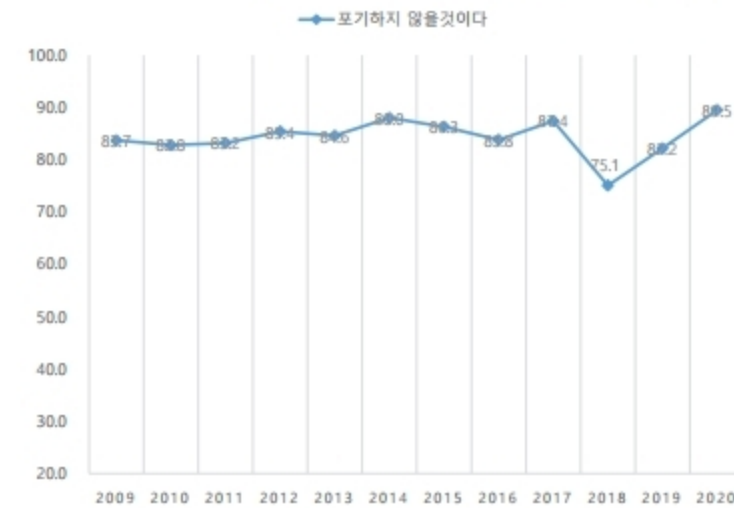
IV-1. “북한은 변하고 있다” (단위: %)



-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응답은 39.3%로 2019년 70.9%에서 큰폭 하락
- 지역: 제주(62.1%)>호남(50.9%)>수도(40.7%)>영남(36.9%)>충청(29.7%)>강원(26.5%)
- 정치성향: 진보(52.3%)>중도(36.5%)>보수(26.5%)

IV. 북한의 변화, 인권, 핵포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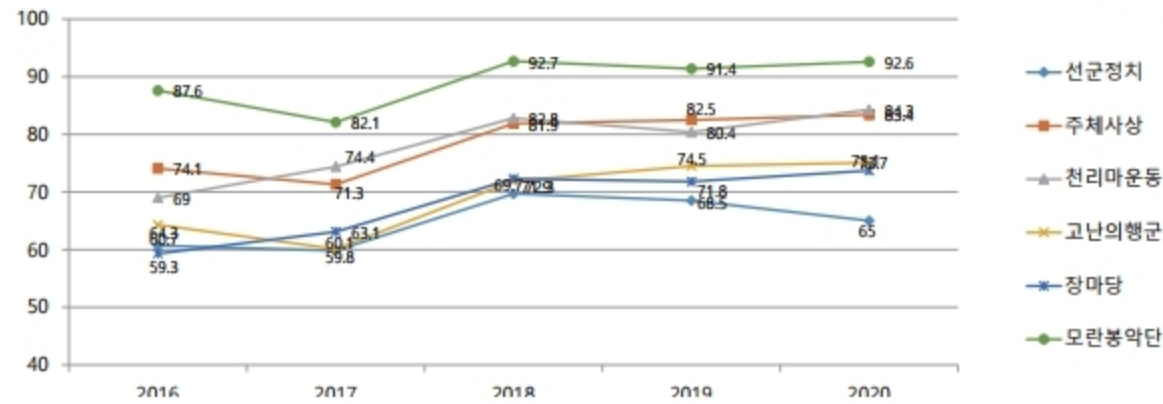
IV-3. 북한 핵무기 포기 가능성 (단위: %)



-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은 89.5%로 2019년 82.2%에서 증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 유지
- 지역(p=0.000)과 상관관계
- 정치성향(p=0.069)와는 상관없음

V. 북한사회 인지도와 이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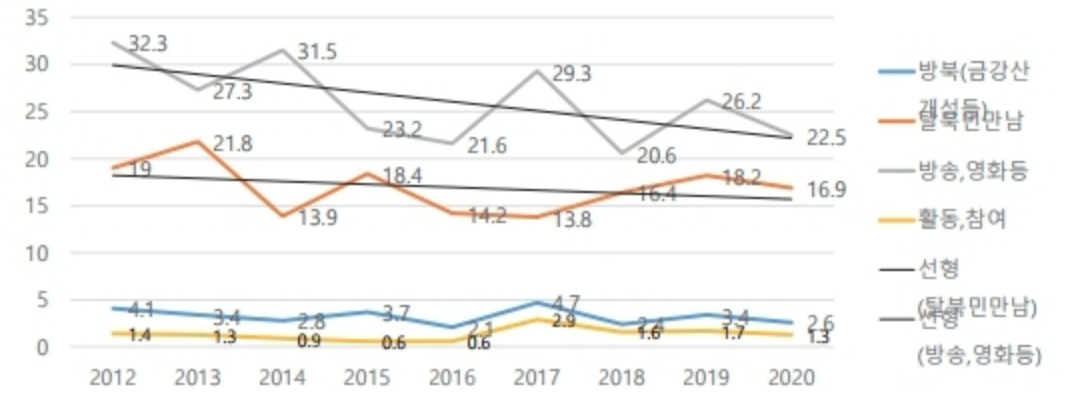
V-1. 북한사회 인지도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단위: %)



- 선군정치 65.0%, 주체사상 83.4%, 천리마운동 84.3%, 고난의 행군 75.1%, 장마당 73.7%, 모란봉악단 92.6%로 남한 주민 대부분은 북한의 주요 사건과 개념 이해
- 그러나 '잘 안다'는 사람은 모란봉악단 10.9%, 주체사상 8.3%, 선군정치 2.7%, 천리마운동 8.2%, 고난의 행군 6.5%, 장마당 7.3%에 불과,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작년에 비해 감소.

V. 북한사회 인지도와 이질성

V-3. 북한 관련 경험 유무
(“경험한 적이 있다”)
(단위: %)



- 북한관련 경험은 새터민 접촉 16.9%, 북한방송,소설 접촉 22.5%, 방문 경험 2.6, 단체참여 1.3%.

V. 북한사회 인지도와 이질성

V-2. 남북 이질성
(“남북간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단위: %)

	남한	북한
선거방식	94.5	97.2
사회복지	95.3	93.6
언어사용	84.1	92.7
생활풍습	78.1	82.5
가족중시	51.0	69.7
돈중시	61.1	72.5
평균	77.4	84.7

- 남북한 주민 이질성 인식 평균 남한 77.4%, 북한 84.7%로 높음

-2019-2020년 남한 81.8%→77.4%, 북한 84.1%→84.7%로 남한주민 이질성 인식 완화

VI. 결론(1)

○첫째, 북한에 대한 비판적, 부정적 인식 증가,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 큰 폭 하락
-협력 및 지원 대상 의식 감소, 적대 및 경계 의식 증가
-북한변화 인식 부정적, 인권상황 심각성 인식
-북한정권 대화와 타협 상대로 불신, '통일원하지않는다' 부정인식 증가

○둘째, 그럼에도 북한의 핵보유 위협 인식 감소,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중간수준 유지 등 북한발 안보불안 의식은 '안정'기조 유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2018년 남북정상회담 효과 지속.

단절의 시대, 통일외식 변화

제1부 조사결과

발표4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VI. 결론(2)

- 셋째, 세대, 지역, 이념별 차이 작년보다 뚜렷해짐
 - 세대별 차이 (1) 관계 경색 국면에서 2019년 20-30대 대북 비판외식 형성후 2020년 40-60대 합류, (2) 세대별 외식 분화 진행, (3) 북한무력도발 인식 20대가 가장 높았으나 최근 2~3년간 30대가 높아짐. 보수정부 시기 비판적 대북외식을 형성한 20대가 2010년대 후반 30대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코호트 현상?
 - 지역별 차이 (1) 대북외식의 모든 항목에서 뚜렷, (2) 충청권의 대북 긍정 태도 철회.
 - 이념별 차이 (1) 대북외식의 편차 확연히 존재, 북한외식의 차이가 정치적 이념 차이를 낳는 주된 요소, (2) 특히 북한정권 신뢰여부는 진보-중도-보수를 가르는 유력한 기준으로 여전히 통용.
- 넷째, 북미관계, 남북관계 진전 없는 한, 공무원 피격사건 등으로 향후 대북 부정적 태도 높아질 가능성, 그러나 제8차 당대회 등 북한발 정치행사로 상쇄 가능성 존재 및 대북외식 분화 심화 예상.
 - 남북관계 경색 국면과 평화 형성 국면에 북한 인식 등락 및 수렴, 그러나 국면지속 및 이완기에 피로감과 학습효과 작용, 지역, 세대, 이념에 따른 외식분화 진행.

감사합니다.

이종민 (한국은행)

|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 (요약) |

이종민 (한국은행)¹

1.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영향력

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

올해 조사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37.8%로 조사되었다. 이는 작년 대비 18.1%p,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선 결과이다. 대북정책 만족도는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 65.6%로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2년 간 28%p 가까이 하락하였다.

이를 정치성향별로 나누어 보면 진보층 응답자는 여전히 60%에 가까운 대북정책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도층 및 보수층 응답자의 만족도는 2018년 대비 30%p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치 성향별 대북정책 만족도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진보 對 중도-보수로 응답이 갈리는 형국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의 정책 만족도가 73.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정치 성향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긍정 응답은 크게 하락하며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연령별 대북정책 만족도는 40대가 가장 높고 60대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으며, 고른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나)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력

정책 만족도와 함께 정책 영향력에 대한 인식 역시 크게 약화되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39.3%로 작년에 비해 19%p, 2018년에 비해 30%p 감소하였다.² 반면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응답은 2018년 3.8%에서 2019년 9.9%, 2020년 20.2%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연령, 정치성향별로 나누어보아도 대북정책 만족도 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대북 정책 영향력이 크다'는 응답이 40대 피설문자에게서 타 연령대에 비해 10%p 정도 높게 나타났고, 진보 성향 응답자는 중도-보수 성향 응답자에 비해 20%p 높게 조사되었다.

2. 북한 변화에 대한 정책 효용성 인식

가) 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성 인식

2017년부터 본 조사에서는 인도적 대북 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대북제재 등 주요 대북정책의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설문하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는 4개 주요 대북정책의 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성 인식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 특히 인도적 지원과 대북제재가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각각 13.1%p, 12.4%p 하락하여, 5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이 도움 된다는 응답은 여전히 6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혜적이거나 적대적인 일방향적 대북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로 보이며, 북한의 호응이 전제될 경우 호혜적인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들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별 개혁개방에 대한 정책 효용성 인식은 대체로 40대에서 가장 높고, 20대와 60대에서 낮은 거꾸로 된 u자형태(inverse u-shaped)를 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20대의 경우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효용성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고,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정치성향별로 살펴보면, 사회문화 교류와 경제협력의 효용성 인식에서 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작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중도-보수 응답자들의 긍정 응답은 하락하며 격차가 확대되는 형국이다. 한편, 대북 제재의 효용성 인식은 추세와 수준 모두 정치성향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 비핵화에 대한 효용성 인식

올해 조사에서는 주요 대북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처음으로 설문에 포함하였다. 조사 결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정책 효용성 인식은 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성 인식에 비해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경협이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정책들은 인도적 지원 46.1%, 대북제재 45.5%, 군사적 억지력 강화 43.9%로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모든 정책에서 진보적 응답자의 효용성 인식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특히 대북지원, 경제협력에 대한 긍정응답은 20%p에 가까운 큰 차이가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대북제재나 군사적 억지력 강화와 같이 보수 성향의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보수적 응답자의 효용성 인식이 진보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 효용성 인식에 정책에 대한 선호도와 북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정책 사안별 찬반 의견

주요 정책 사안들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에서는 대체로 작년 대비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비라 북송 금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비라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7년까지 40%대에 머물다가 2018년 63.3%로 대폭 상승한 뒤 2019년 57.5%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올해 조사에서 10%p 이상 다시 한 번 크게 증가하여 68.6%를 기록하였다. 2018년에는 남북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 분위기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는 6월 비라문제로 촉발된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국면을 겪으며 비라 북송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주요 교류협력 사안에 대한 인식은 모순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찬성 비율은 각각 4.1%p와 3.6%p 소폭 감소한 반면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1.6%p 감소하였다. 한국도 핵 무장을 해야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은 45.9%를 기록하였다. 이는 작년 대비 7.5%p 상승한 것이지만 2017년 이전 50% 내외를 유지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다.

2020 통일의식조사 - 대북정책 인식 -

2020. 10. 13

발표자: 이종민 (한국은행)¹

1. 본 자료는 발표자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재직 당시 조사된 것으로, 발표자의 현 소속기관과는 무관함.

목차

-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 북한 변화에 대한 대북정책의 효용성 인식
- 대북정책의 영향력 인식
- 정책 사안별 찬반 의견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2020 통일외식조사 : 대북정책 인식

◆ 종합

- 전반적으로 정책 만족도가 하락하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섬
-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 65.6%로 최고수준을 기록한 뒤 2019년 55.9%, 2020년에는 37.8%로 급격히 하락.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추이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2020 통일외식조사 : 대북정책 인식

◆ 연령별

- 대북정책 만족도 40대에서 가장 높고 60대에서 가장 낮음.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하락하는 추세
- 30대에서 하락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차이가 크지 않음.

연령별 대북정책 만족도

	2018	2019	2020	변화 (2020-2018)
20대	64.0	57.9	37.9	-26.0
30대	66.7	56.1	36.9	-29.8
40대	69.6	56.7	43.5	-26.1
50대	68.6	57.3	40.6	-28.0
60대 이상	58.3	51.6	30.0	-28.3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2020 통일외식조사 : 대북정책 인식

◆ 정치성향별

- 정치성향별 정책 만족도의 격차가 벌어지며 진보 對 중도-보수로 응답이 갈림
- 진보층 응답자는 여전히 60% 수준의 대북정책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도층 및 보수층 응답자는 2018년 대비 30% 이상 만족도가 하락

정치성향별 대북정책 만족도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2020 통일외식조사 : 대북정책 인식

◆ 지역별

- 호남권 정책 만족도 최고, 수도권 최저. 지역간 격차 확대
- 정치성향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호남권 응답자의 정책만족도는 여전히 70% 이상을 유지한 반면 다른 지역은 크게 악화하여 지역간 격차가 확대됨. 특히 수도권의 경우 올해 긍정응답이 27%나 하락하며 지역 중 최저를 나타냄.

지역별 대북정책 만족도

	2018	2019	2020	변화 (2020-2018)
수도권	61.2	56.9	29.9	-31.3
충청권	69.9	63.9	38.8	-31.1
호남권	89.1	80.4	73.2	-15.9
영남권	59.8	39.9	34.3	-25.5
강원	60.9	50.0	33.3	-27.6
제주	71.0	59.4	45.2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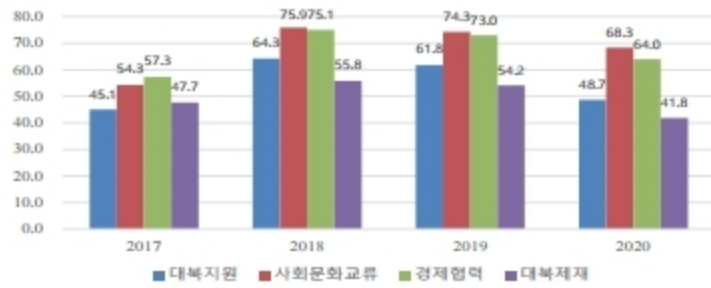
북한 변화에 대한 정책 효용성

2020 통일외식조사 : 대북정책 인식

◆ 개혁개방

-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제재 등 대북 정책의 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성 인식이 전반적으로 악화됨.
- 특히 인도적 지원, 제재와 같이 일방향적 정책의 효용성 인식이 크게 악화,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이 도움 된다는 응답은 60% 이상 유지.

대북정책의 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성 인식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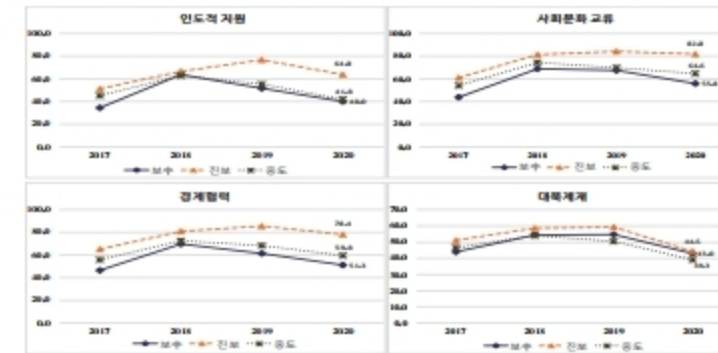
북한 변화에 대한 정책 효용성

2020 통일외식조사 : 대북정책 인식

◆ 개혁개방(정치성향별)

- 사회문화 교류와 경제협력의 효용성 인식에서 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작년 수준을 유지, 중도-보수 응답자들은 하락하며 격차 확대.
- 대북 제재의 효용성 인식은 추세와 수준 모두 정치성향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음.

2020년 대북정책의 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성 인식 (연령별)



8

북한 변화에 대한 정책 효용성

2020 통일외식조사 : 대북정책 인식

◆ 개혁개방(연령별)

- 연령별 개혁개방에 대한 정책효용성 인식은 대체로 40대에서 가장 높고 20대 및 60대 이상에서 낮은 inverse u-shape를 띤.
- 다만 20대의 경우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효용성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고,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이 낮은 특징을 보임.

2020년 대북정책의 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성 인식 (연령별)



7

북한 변화에 대한 정책 효용성

2020 통일외식조사 : 대북정책 인식

◆ 비핵화

-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정책 효용성 인식은 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성 인식에 비해 대체로 낮게 나타남.
- 남북경협이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음, 다른 정책들은 50% 이하로 대동소이함.

대북정책이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단위 : %)			
	매우도움	약간도움	별로도움안됨	전혀도움안됨
인도적 지원	7.3	38.8	44.7	9.2
남북경협	11.2	46.8	33.5	8.5
대북제재	6.8	38.7	44.8	9.8
군사적 억지력	5.7	38.2	45.3	10.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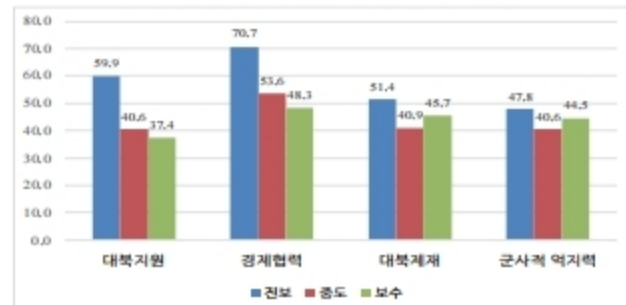
북한 변화에 대한 정책 효용성

2020 통일외식조사 : 대북정책 인식

◆ 비핵화(정치성향별)

- 모든 정책에서 진보적 응답자의 효용성 인식이 높음. 특히 대북지원,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 차가 크게 나타남.
- ✓ 한편, 대북제재나 군사적 억지력 강화와 같이 보수 성향의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보수적 응답자의 효용성 인식이 진보에 비해 낮게 나타남. 이것은 정책선호+북한 변화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대북정책의 비핵화에 대한 효용성 인식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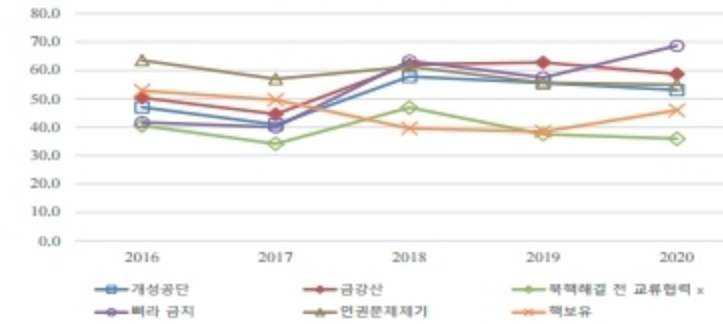
정책 사안별 찬반 의견

2020 통일외식조사 : 대북정책 인식

◆ 종합

- 다른 의견들은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삐라 금지에 대한 찬성 의견이 작년 대비 큰 폭 상승함.
- ✓ 금강산, 개성공단 등 주요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찬성 비율은 소폭 감소, 반면 북핵해결 전 교류협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역시 감소하여 모순적인 결과를 보임.

정책 사안별 찬성 비율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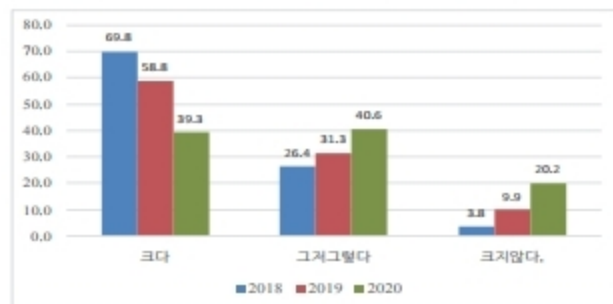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영향력

2020 통일외식조사 : 대북정책 인식

◆ 종합

- 정책 영향력에 대한 인식 역시 크게 약화.
- ✓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은 39.3%로 작년에 비해 19%p 감소, 반면 크지 않다는 응답은 20.2%로 10%p 증가.
- ✓ 연령, 정치성향별로 나누어도 서로 유사한 추세를 보임.

현 정부 대북정책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영향력²



2. 2018~2019년 조사의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항이 2020년 조사에서는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항으로 바뀌었음에 유의.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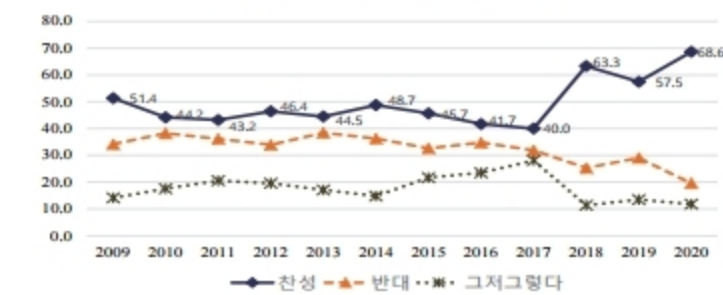
정책 사안별 찬반 의견

2020 통일외식조사 : 대북정책 인식

◆ 삐라 복송 금지

- 삐라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8년에 이어 다시 한번 크게 증가하여 70%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임.
- ✓ 2018년은 남북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 분위기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는 6월 삐라문제로 촉발된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국면을 겪으며 삐라 복송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삐라 복송 금지에 대한 찬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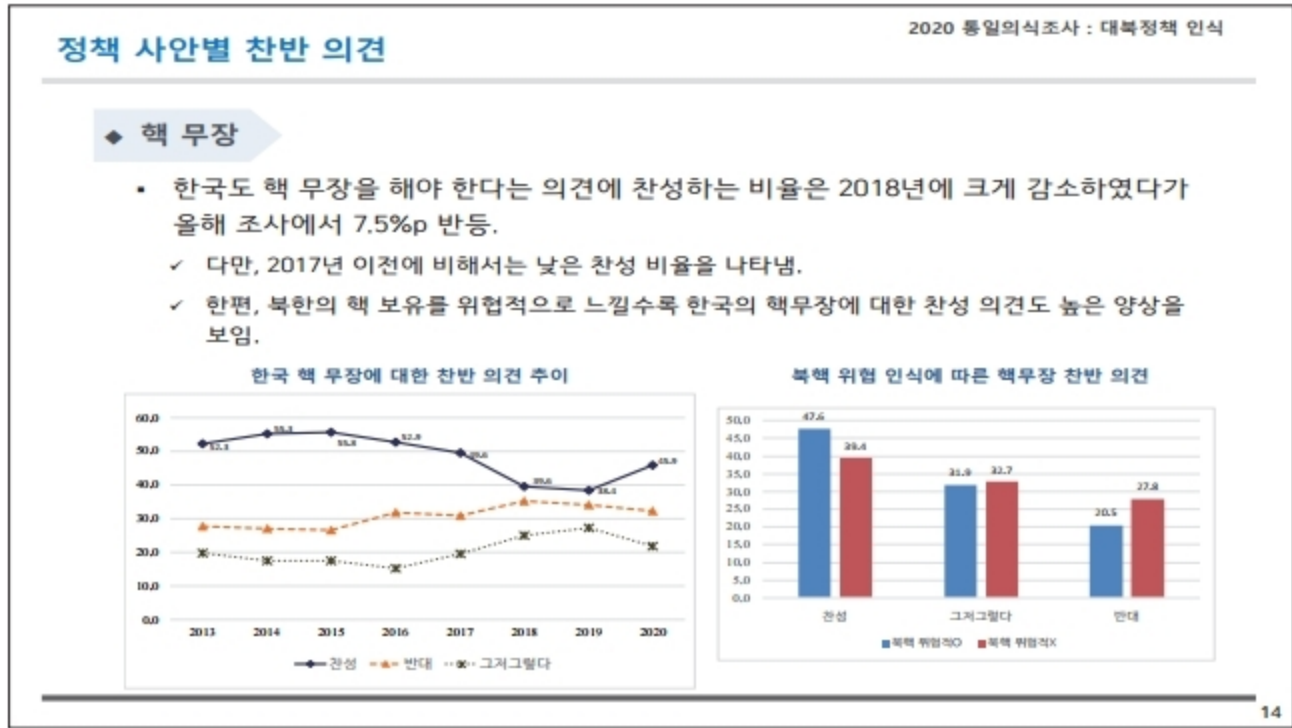
13

단절의 시대, 통일외식 변화

제1부 조사결과

발표5

주변국 관계에 대한 인식



최규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

최규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도입

2020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그 어느 때 보다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중 간의 전략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이 한층 더 가속화되면서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다. 홍콩보안법, 남중국해 영유권, 화웨이(Huawei, 华为) 5G 설비 등 미중간의 충돌 지점은 비단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뿐 아니라 안보, 군사, 민주주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및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이 본격화된다는 것은 역내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을 높이고 동맹인 한국의 외교안보 행보가 미중 전략 경쟁에 의해 제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역 강대국 지위를 강화하는 목표를 일관되게 추구해 왔다. 중국은 유엔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붕괴 방지를 강조하면서 남북한 문제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대화, 북미 간 협상을 지지하면서도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를 놓지 않고 경제지원을 통해 한반도 문제 있어서의 전략적 레버리지를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다.

한일관계는 좀처럼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등으로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는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특히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 및 현금화 조치가 집행될 경우 일본의 경제 보복이 예상됨에 따라 한일관계는 다시 한 번 대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4월로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았지만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은 아직 요원하다. 북한은 우리측 GP 총탄 발사(2020.5.3), 대북전단 살포 공개적 비난(2020.6.4), 남북통신연락선 차단(2020.6.7),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6.16) 등 도발 행위를 지속함으로 긴장의 수위를 높여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례 없던 남북한 정상회담들과 합의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협력 증진을 기대하게 했지만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 딜(no deal)'로 결렬됨에 따라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은 급격히 약화된 상황이다. 미중 갈등과 핵협상을 둘러싼 북미간의 대립 상황에서 남북한의 평화 공존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에 오랜 기간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등과 같은 국가적 목표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인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평화 조성을 위한 외교 전략 마련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인들이 주변국들에 대해 갖는 이미지와 통일과 관련된 주요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게 된다. 관련된 설문에 대한 응답을 문항별로 정리하며 조사항목에 대한 결과들을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하면서 주변국 인식의 특징과 변화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2. 가장 가까운 주변국,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1)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한국인들이 주변국 가운데 가장 친밀하게 인식하는 대상은 미국이었다. "귀하는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2020년 응답자의 67.8%가 미국을 선택하였다. 조사대상의 성별, 지역별, 교육수준별 호감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단 지역별로는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인 수도권(72.1%)과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인 호남(54.0%)의 응답을 편차가 18.1%로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1>에 나타나듯 조사가 시작된 이래 미국은 항상 한국인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였으며 그 응답 비율 또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도 현저히 높다. 미국이 한국에게 전통적인 우방국, 동맹국이라는 인식이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대미친밀감에서의 일련의 변화가 감지된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약 80%에 육박했던 응답률이 올해 67.8%로 7년 만에 60%대로 하락한 것이다. 굳건할 것 같은 대미 친밀도의 하락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도 관계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4월과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 했으며 이를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연계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¹ 중국과의 잦은 충돌,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보인 미국의 고압적인 자세 등은 '트럼프의 미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 및 한미동맹에서 보다 공정한 관계를 기대하는 한국인의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다음으로 한국인들이 가깝게 느끼는 대상은 북한이었다.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상승했던 대북친밀감(11.3% → 19.1% → 19.3%)은 올해는 17.5%로 소폭 하락하였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결된 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과 김여정 부부장의 남북관계 결별 및 대적사업 발언(2020.6.13),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6.16) 등이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실망감 및 부정적 평가로 작용했을 것이다.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를 고려했을 때 대일친밀감은 2년 연속 소폭 상승(4.5% → 5.3% → 5.7%)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일본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율은 5.7%로 2019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및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국내 일본제품 불매 운동,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이 대일감정 악화에 추가적인 미치지 않은 것을 보이나 전체적인 호감도는 주변국 가운데 러시아 다음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악화된 한일관계가 2020년 들어 다소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어 측면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대중친밀감은 2019년 3.3%에서 2020년 8.0%로 4.7%p 상승하였다. 대중친밀도는 2014년을 기점으로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였고 2019년 최저치를 나타냈다가 올해 다시 상승한 것이다.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배치 결정과 이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한중관계의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실제 대중친밀감 하락 시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비록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완전히 해제 되지 않았지만 2019년 12월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갈등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이 특별히 마찰을 보이지 않았던 점과 한중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는 대중 호감도 반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하지만 조사설계 상 단순응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2020년 대미, 대북 호감도 하락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표 1-1>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단위:%, N)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미국	60.7	68.3	70.7	68.8	65.9	76.2	74.9	78.3	73.8	74.1	72.5	71.9	67.8
일본	9.4	8.6	9.5	9.1	6.8	5.1	4.3	3.9	5.2	8.3	4.5	5.3	5.7
북한	20.4	16.0	14.8	16.0	20.6	11.0	8.9	8.1	10.8	11.3	19.1	19.3	17.5
중국	7.8	6.1	4.2	5.3	5.8	7.3	10.3	8.8	9.7	5.0	3.7	3.3	8.0
러시아	1.7	1.0	0.8	0.8	0.9	0.5	1.0	0.9	0.4	1.1	0.1	0.1	1.0
합계(N)	1,202	1,196	1,196	1,197	1,199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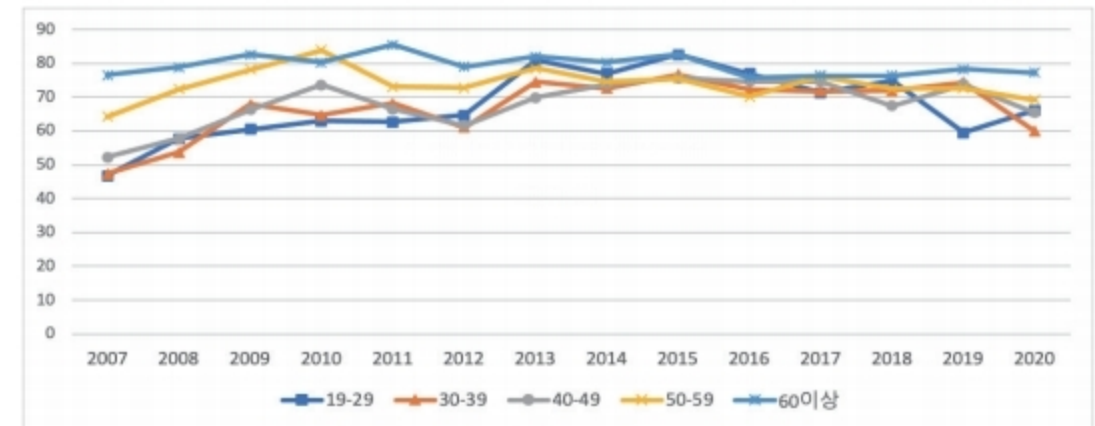
미국, 북한, 중국에 대한 친밀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과 북한에 대한 30, 40대 인식의 변화가 주목된다. <그림 1-1>에서 나타나듯이 30대의 대미호감도는 2019년 74.4%에서 2020년 59.9%로 14.5%p가 하락하면서 같은 기간 40대 -8.4%p, 50대 -3.5%p, 60대 -1.1%p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2020년 대북한 외교 성과가 뚜렷하지 않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 지속, 주한미군 방위비 대폭 인상 압박 등의 외교정책이 30, 40대에게 불안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다만 30, 40대 중심으로의 발견된 대미 호감도 하락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2007년에서 2018년 까지 대미친밀도의 세대별 편차가 줄어드는 경향이었으나 최근 2년 다시 확대되는 조짐 또한 발견 된다.

30, 40대의 경우 대북인식의 변화도 관찰된다. <그림 1-2>에 나타나듯이 올해 20대, 50대, 60대의 대북친밀감은 2019년에 비해 모두 하락한 반면 30대는 6.3%p(14.3% → 20.6%), 40대는 0.5%p(18.4% → 18.9%)로 상승하였다. 올해 북한의 도발적 행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보다 한반도 정세 안정 및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중국에 대해서는 30대(11%)와 40대(9.3%)의 호감도가 다른 연령대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0년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였다. 2019년과 비교 했을 때 증가폭이 높은 순서는 40대(7.2%p) > 20대(5.3%p) > 30대(4.4%p) > 50대(4.2%p) > 60대(2.4%p)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일본 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2016년 이래 부정적인 대중인식이 전 연령대에서 완화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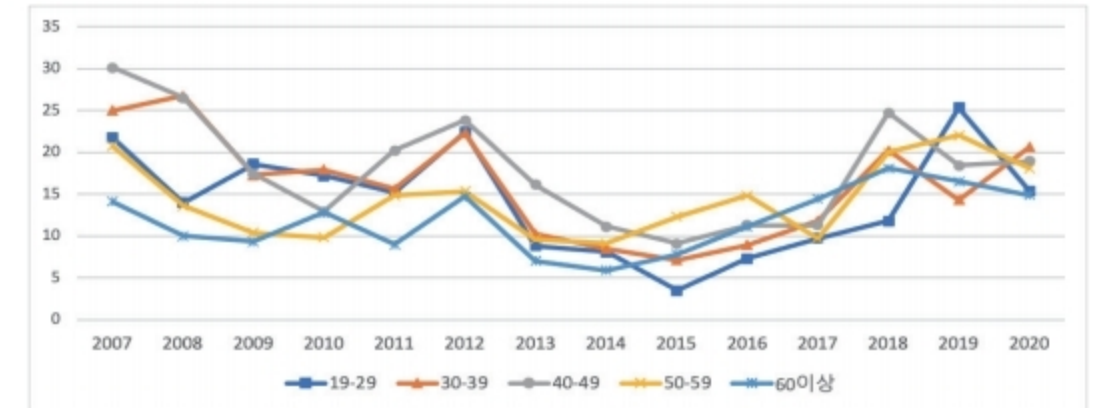
<그림 1-1> 연령대별 대미친밀감

(단위:%)



<그림 1-2> 연령대별 대북친밀감

(단위:%)



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주변국에 대한 친근감이 정서적 호감도나 가까움에 관한 부분이라면 특정 국가에 대한 위협인식은 개인과 집단의 안전과 생존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앞서 살펴본 주변국에 대한 친근감의 변화가 상대국가에 대한 위협인식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특정 상대국을 가깝게 여기는 태도나 판단을 개인이 갖고 있더라도 실제 그 국가를 위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의식조사에서는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주변국의 실질적 위협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앞선 항목과 같이 단순 응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위협인식의 증가는 다른 국가의 위협인식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인은 주변국 가운데 북한을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20년 북한이 가장 위협적이라는 응답은 40.8%로, 중국 32.4%, 일본 18.3%, 미국 7.3%, 러시아 0.6% 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상당기간 한국인들이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상대는 북한이었으나 2018년과 2019년 최대 위협국이 중국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2020년 다시 북한으로 바뀐 것이다.

2018년 이후 급격히 전환된 남북관계로 인한 대북인식 완화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2018년 4월 27일(판문점), 5월 26일(통일각), 9월 18일(평양)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2018년 6월 12일(싱가폴), 2019년 2월 27~28일(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까지 두 차례 개최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입 및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및 북미 정상회담의 중재가 북한의 회담 참여와 남북한 정상 간의 합의로 이어짐에 따라 대북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실제 대북위협인식은 2017년 63.7%에서 2018년 32.8%로 조사 이래 최대 하락 폭을 보였고 2019년에도 대북위협인식은 30.8%로서 감소 추세는 이어졌다.

하지만 2020년에는 이른바 ‘정상회담’ 효과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북위협인식은 40.8%로 2019년에 비해 10%p 높아졌다. 하노이 회담의 실패 이후 북한의 대남공세는 더 강화되었다. 2019년 5월부터 11월 단거리 미사일(방사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을 포함 총 13차례의 저강도 도발을 해 왔고,² 2020년의 경우 3월 2일, 3월 9일, 3월 21일, 3월 29일, 4월 14일 다섯 차례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를 지속해 왔다. 또한 북한의 우리측 GP 총탄 발사(2020.5.3.), 남북 통신선 차단(2020.6.9.),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6.16.), 북한 군사행동계획 비준 발표(2020.6.17.) 등 대남도발의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 왔다. 비록 북한의 대남군사행동계획은 보류가 되었지만³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위기 상황은 국민들의 대북인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⁴

2018년 46.4%까지 상승했던 대중위협인식은 2020년 32.4%로 2년 연속 하락 추세를 보였다. 2019년 34.3%와 비교했을 때 올해 변화의 폭은 크지 않았다. 2020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홍콩보안법⁵ 문제(2020.6.30.), 중국 영사관 폐쇄(2020.7.23.), 미 행정부 화웨이 재재 발표(2020.9.15.) 등으로 확대 심화되면서 한중 양국이 특별히 갈등을 겪는 사안은 발생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으로 부터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우호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편이 유리했을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다만 대중위협인식은 국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시 높아질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을 지지하거나 중립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봉합된 사드문제가 다시금 불거진다면 한중간의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즉 한중관계의 개선 및 미중간의 갈등 항배에 따라 국민들의 대중위협인식은 달라질 수 있기에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은 2020년 18.3%로 지난 2년간 상승하던 추세가 감소로 전환되었다. 2019년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 응답율은 28.3%로 지난 10년 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바 있다.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3개 품목 수출 규제(2019.7.1.), 백색국가 목록 한국 제외(2019.8.7.),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2020.8.22.) 등 한일 간 대립이 본격화 되면서 국내에 반일 정서가 여론에도 작용한 것으로 보였다.⁶ 하지만 올해 대일 위협인식이 다시 감소한 것은 대북 위협인식 상승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으나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도 반도체 품목 3종에 대한 대체화(국산화 혹은 제3국 조달)가 이루어진 점,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등 한일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고 봉합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소미아, 강제 징용 배상 문제 등에 대한 입장과 사후 대응에 따라 대일 위협인식은 다시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대체로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다. 즉 한국인의 대다수는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 대미 위협인식은 7.9%로 작년 5.5%에 비해 다소 상승했으며 이는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응답율이다. 향후 추세를 지켜봐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 중국과의 무역전쟁, 한미동맹 인식,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발언 등은 대미 신뢰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표 1-3>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단위: %, N)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미국	16.0	12.5	8.3	8.6	9.5	4.4	5.4	4.7	4.7	4.9	5.2	5.5	7.9
일본	34.5	17.7	10.4	11.6	12.3	16.0	24.6	16.1	10.0	7.1	13.8	28.3	18.3
북한	33.7	52.9	55.6	46.0	47.3	56.9	49.8	54.8	66.7	63.7	32.8	30.8	40.8
중국	14.6	15.8	24.6	33.6	30.5	21.3	17.6	23.3	16.8	22.7	46.4	34.3	32.4
러시아	1.2	1.1	1.2	0.3	0.4	1.3	2.6	1.3	1.7	1.6	1.8	1.1	0.6
합계(N)	1210	1,199	1,197	1,201	1,200	1,200	1,199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위협인식을 연령대로 보았을 때 주목되는 현상은 올해 모든 연령대에서 대북위협인식은 상승한 반면 대일위협인식이 하락한 점이다. 이는 2019년과 정반대의 패턴이다. 대북위협인식의 경우 20대(48.2%) > 60대(44.7%) > 30대(39.7%) > 50대(38.9%) > 40대(33.1%)로 20대가 가장 높았다. 대일위협인식의 경우 20대(15.6%) < 60대(15.8%) < 50대(19.4%) < 40대(19.6%) < 30대(21.1%) 순으로 높았으며 2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대가 다른 연령대 보다 북한을 위협적으로 보며 일본에 대해서는 좀 더 우호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미위협인식의 경우 30, 40대의 부정적 평가가 발견된다. 30대의 경우 2019년 5%에서 2020년 8.3%로 3.3%p 상승했고, 40대의 경우 2019년 4.5%에서 2020년 12.2%로 7.7%p로 증가했으며, 이는 50대(2.2%p), 60대(0.1%p), 20대(-1.6%p) 보다 높은 수치이다. 2020년의 경우 국민들의 친근감과 마찬가지로 위협감에서도 30, 40대는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국방연구원, 「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서울: 국방연구원, 2019), p. 45.

3 2020년 6월 17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적군사행동계획들을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았다고 발표하였으나 김정은 위원장은 6월 23일 예비회의를 통해 이를 보류하기로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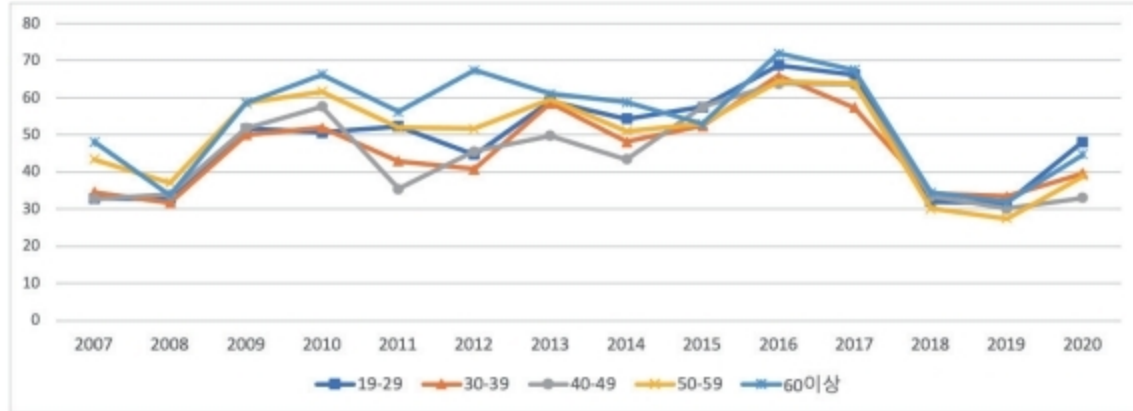
4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020년 6월 19일 이임식에서 “남북관계가 위기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평가 했다. 연합뉴스, 2020.6.19.

5 정식명칭은 「홍콩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률제도와 집행 기제 수립에 관한 결정」으로 2020년 6월 30일 제13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주요 골자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 및 처벌하고 외부세력의 홍콩개입을 불허하는 것이다. 홍콩 보안법은 규정 이 불명확하고 적용 대상이 광범위 한 관계로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치를 수호하는 운동을 저지하고 통제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 VOA, 2020.7.3.

6 국내의 반일(反日) 정서는 한일 인적교류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9년 1월 77만 9,383명 이었던 방일 한국인 수는 7월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19년 10월에는 19만 7,281명까지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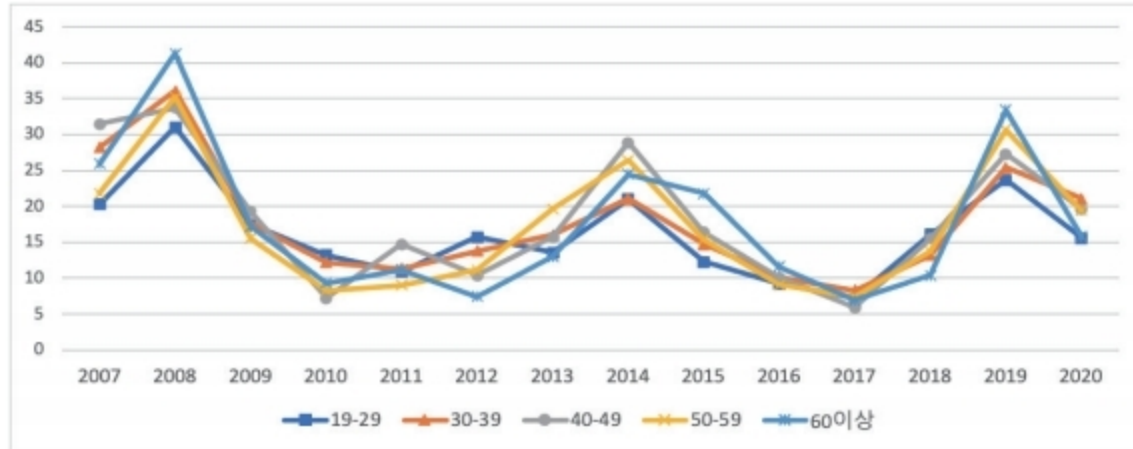
〈그림 1-3〉 연령대별 대북위협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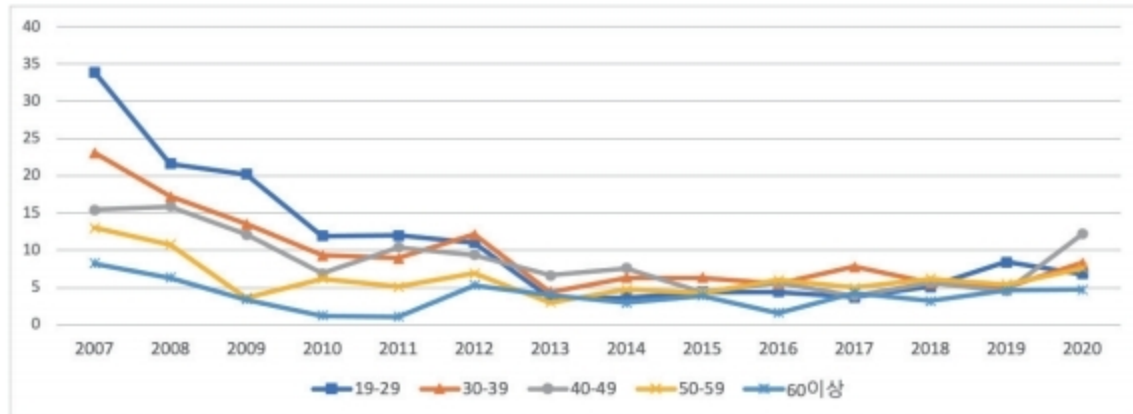
〈그림 1-4〉 연령대별 대일위협도

(단위:%)



〈그림 1-5〉 연령대별 대미위협도

(단위:%)



3. 주변국의 국가이미지

주변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친밀감 및 위협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개별국가를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외식조사는 2007년부터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응답자는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그리고 ‘적대대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이 조사에서 국가이미지란 “한 국가에 대한 구조화된(organized, structured) 인지의 모임”으로 인지심리학의 스키마(schema) 개념을 국제정치학에서 접목하여 발전시킨 개념이다.⁷ 국가 단위의 관계에서 구조화된 인식으로 형성되는 ‘이미지’는 자국의 정책을 정당화 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집단화된 인식과 태도가 반영된 이미지는 상대 국가를 평가하는 데 사용 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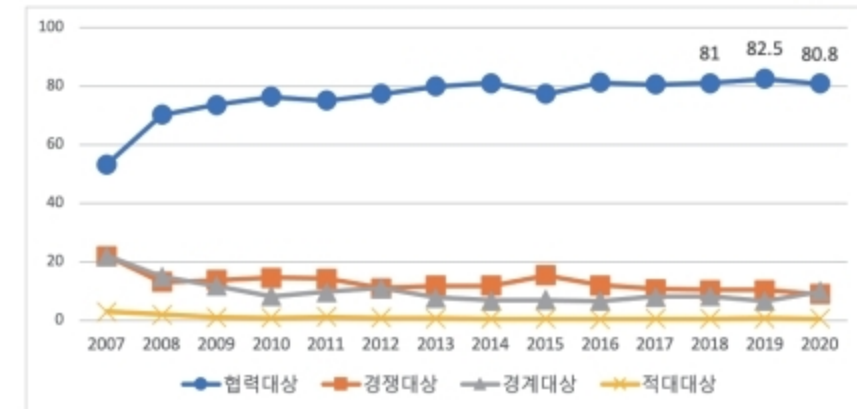
1) 미국의 국가이미지

한국인의 대다수는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였다. 〈그림 1-6〉에서 보듯이 미국에 대한 협력대상 인식은 80.8%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통일외식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던 2019년의 82.5%에 비하면 올해는 소폭 하락하였다. 미국에 대한 높은 협력대상 이미지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국, 동맹, 협력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필수적인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미국의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서를 교환하는 등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⁸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타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말 미국 대선 이후 북한과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이를 위한 한미공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대미인식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올해 조사 결과에서 미국을 경계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응답이 9.9%로 2012년(10.9%) 이래 처음으로 10%대에 근접했다. 이는 아직까지는 낮은 비율로 장기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미중관계 설정, 방위비 분담금 논란 등은 한미동맹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림 1-6〉 미국의 국가이미지

(단위:%)



7 박명규, 이상신 “현상과 이미지,” 『통일과 평화』, 제3집 1호 (2011), pp. 129-173.

8 최근 밥 우드워드 ‘격노’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3월 22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하노이로의 긴 여행을 한 데 대해 다시 감사하다. 내가 말한 것처럼 당신은 나의 친구이고 항상 그럴 것”이라고 친서를 보냈으며, 6월 10일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1년 전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함께했던 짧은 시간처럼, 103일 전 하노이에서 우리가 나는 때 순간도 영광의 순간이었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 당신을 향한 나의 확고한 존경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소중한 기억은 언젠가 미래에 우리가 다시 서로를 향해 걸어갈 때 내가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20.9.13.

주변국가 이미지와 관련하여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주변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도 조사하였다. 이는 국가이미지에 대한 보편적 태도와 인식보다는 군사안보에 초점을 맞춰 주변국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대미인식을 미국의 한반도 전쟁대응과 연결지어 볼 때,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혹은 남한과 북한 어느 한 쪽을 지원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태도는 <표 1-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응답자의 64.7%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 시 미국은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보았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는 32.0%고, 북한을 돕거나 혹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의견은 각각 1.1%, 2.2%였다. 2019년에 비해 '한국을 도움'은 7.0%p가 하락했고 '자국이익에 따름'은 8.8%p 상승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방향에 근거한 가정 상황이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시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증가한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한미동맹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전쟁 시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즉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미국이 한국을 직접적으로 돕거나 다른 주변국의 이익에 의해 한반도 상황이 결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⁹ 하지만 한반도의 개입 방향 또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 또한 존재하고 있다.

<표 1-4>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태도 예상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한국을 도움	57.4	65.1	74.7	72.4	72.8	75.2	74.0	70.5	74.1	67.8	66.1	71.7	64.7
북한을 도움	1.4	0.7	0.7	1.6	1.8	1.6	1.8	4.9	2.4	3.4	2.4	3.2	1.1
자국의 이익 따름	37.4	32.3	23.0	24.1	23.8	20.9	22.6	22.6	22.1	26.2	29.7	23.2	32.0
중립을 지킴	3.8	2.0	1.7	1.9	1.6	2.3	1.6	2.0	1.4	2.7	1.7	1.8	2.2
합계(N)	1,213	1,203	1,200	1,201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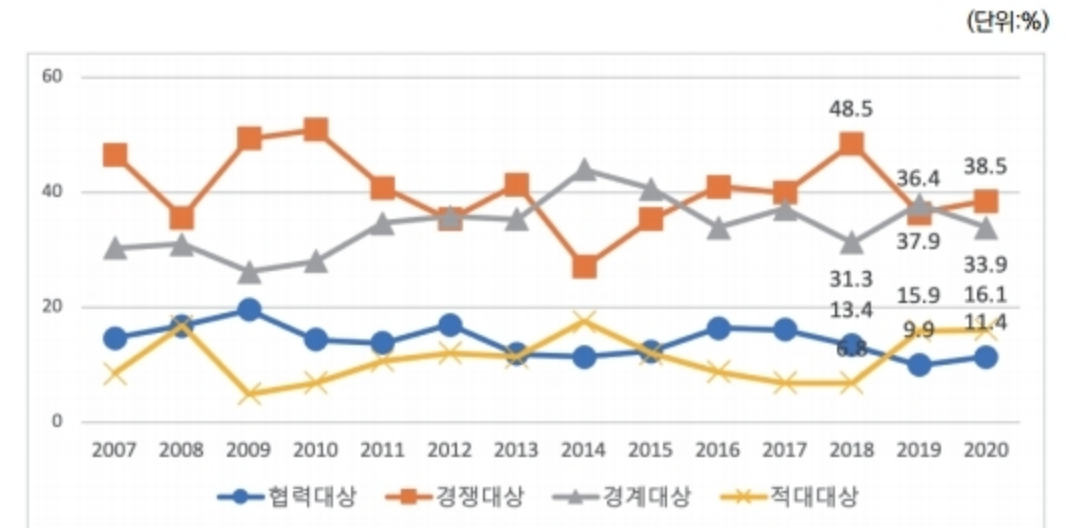
2) 일본의 국가이미지

한국인들은 일본을 협력대상이라기보다 경쟁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020년 일본에 대한 경쟁대상 이미지는 3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계대상이 33.9%였으며, 적대대상 이미지는 16.1%, 협력대상은 11.4%로 나타났다.¹⁰ 2019년 경계대상 이미지가 가장 우세했던 것을 비교하면 올해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일본에 대해서는 한일관계의 상황에 따라 경쟁과 경계 이미지 사이가 얽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목되는 부분은 비록 협력대상 이미지가 주변국 가운데 가장 낮다는 점이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많은 부분에서 가치지향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근원적인 양국의 역사인식의 차이와 최근 불거진 대립 상황은 일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19년의 경우 한일 양국은 일본의 반도체 무역 규제를 비롯하여 강제징용문제, 위안부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본 초계기 저공 비행¹¹ 등에서 충돌 한 바 있고 이러한 사안들은 한일 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¹² 특히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올해도 진행 중이다.¹³ 한일 간의 충돌 양상이 양국 정부의 당위적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정권의 지지세력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관계 악화의 지속은 한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아베 총리는 2020년 1월 시정연설에서 지난 6년 동안 한국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았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하였다.¹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제든 일본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 둔 바 있다. 근본적인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을 극복하는 데는 많은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¹⁵ 한일 양국은 현재의 갈등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 이슈에 대해 상호 협력과 공조가 앞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일 간의 정치, 경제, 역사 사안들이 국민들의 대일감정과 이미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그림 1-7> 일본의 국가이미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본은 자국의 이익에 기반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1-5>에서 나타나듯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응답은 2020년 75.9%로 이는 주변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응답률이다. '한국을 도움 것이다'는 응답은 9.0% 2014년 이후 10%이하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유사시 일본의 지원과 협력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대감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9 박명규 외, 『2014 통일역사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p. 186.

10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년 9월 10일 '한일갈등에 대한 양국 시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일본을 경쟁상대로 보는 인식이 우세한 반면 일본인의 경우 한국에 대한 경계대상 이미지가 가장 높았다. 『동아일보』, 2020.9.10.

11 일본의 해상 초계기는 2018년 12월 20일과 2019년 1월 23일 동해상과 이어도 서남방에서 각각 한국의 해군 함정들에 대해 저공 위협 비행을 실시한 바 있다.

12 2019년 EAI가 객론(客論)NPO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20%로 2013년 31.1%에서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같은 기간 37.3%에서 49.9%로 증가하고 있다. EAI, "2019년 제7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2019.06.12.), p. 4.

13 최근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72%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인 18%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2020.08.11.

14 『중앙일보』, 2020.01.20.

15 2020년 7월 14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표기하고 있다.

〈표 1-5〉 한반도 전쟁 시 일본의 태도 예상

(단위:%, N)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한국을 도움	14.7	24.6	17.1	15.3	11.6	11.3	7.8	7.7	8.5	9.6	7.2	7.4	9.0
북한을 도움	4.3	3.7	2.3	3.2	5.0	2.9	7.5	9.2	6.1	4.9	4.9	8.0	5.1
자국의 이익때문	69.4	66.0	71.6	74.3	75.4	75.1	74.9	71.6	74.5	74.5	80.9	76.9	75.9
중립을 지킴	11.6	5.7	9.1	7.2	8.0	10.7	9.8	11.5	10.9	11.0	6.9	7.6	9.9
합계(N)	1,211	1,201	1,200	1,201	1,199	1,200	1,199	1,201	1,200	1,200	1,200	1,200	1,200

3) 중국의 국가이미지

중국에 대해서는 경계대상 이미지가 우세하였다. 2020년 응답자 가운데 경계대상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경쟁대상이 27.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협력대상은 18.6%, 적대대상은 11.4% 이었다. 2007년부터 2016년 까지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대상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긴 했으나 특정 이미지로 고착화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2017년부터는 경계대상 이미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6년 이후 한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국가이미지에서 뚜렷하게 투영되었다. 중국에 대한 협력대상 의식은 2017년 26.6% → 2018년 13.3% → 2019년 13.4%로 2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경계대상 의식은 같은 기간 38.4% → 50.3% → 47.7%로 강화되었다. 2016년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과 이후 이어진 중국의 경제보복은 국민들의 대중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의식조사 결과로 볼 때, 2018년을 정점으로 한동안 악화되었던 대중이미지는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인다.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상승했던 경계대상 이미지는 2019년부터 2020년 2년 연속 하락(47.7% → 42.6%)한 반면 같은 기간 하락했던 협력대상 이미지는 2년 연속 증가(13.4% → 18.6%)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중관계가 지난 2년 동안 특별히 좋아졌기 때문이라기보다 사드 정국 이후 현저히 악화된 한중관계가 조정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 더욱 집중하고 북미간의 핵협상을 관망하는 동안 한중간의 특별한 악재가 발생되지 않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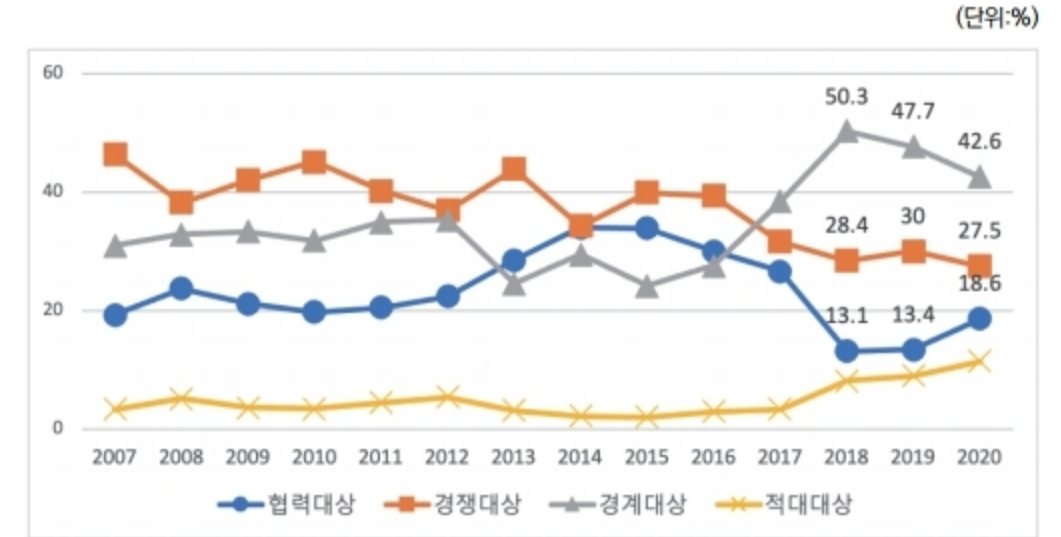
사드 문제에서 경험했듯이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자국의 이익과 입장을 관철시키는 방식은 대중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2018년 이후 남북 및 북미간 대화가 연이어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로서 보여 왔던 영향력이 축소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중국에게 한반도 문제의 중요성이나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전략적 위상이 약화되었다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¹⁶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 입장 즉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영향력 유지 및 확대는 큰 변함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강압이나 무력의 수단을 반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¹⁷ 중국은 앞으로도 북한을 관리 및 지원하며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 주도의 해결을 경계할 가능성이 크다. 남한과 북한 모두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¹⁸

16 이동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서의 역할과 전략," EAI 논평, 2019.05.02.

17 이재영, 유동권, 이기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9), pp. 33-35.

18 북한과 중국 정상은 2018년부터 2019년 까지 5차례 만남을 가진 바 있다.

〈그림 1-8〉 중국의 국가이미지



한국인들은 중국이 유사시 북한을 돕거나 자국에 이익에 기반 한 결정을 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1-6〉에서 나타나듯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북한을 돕는다'가 58.7%로 가장 높았으며 '자국의 이익에 따른다'는 34.9%로 두 번째였다. 여기에 비해 '한국을 돕는다'는 0.9%로 그 비중이 매우 미미했다. '북한을 돕는다'는 응답률은 주변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무력충돌이나 긴급사태와 같은 유사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임을 보여준다.

〈표 1-6〉 한반도 전쟁 시 중국의 태도 예상

(단위:%,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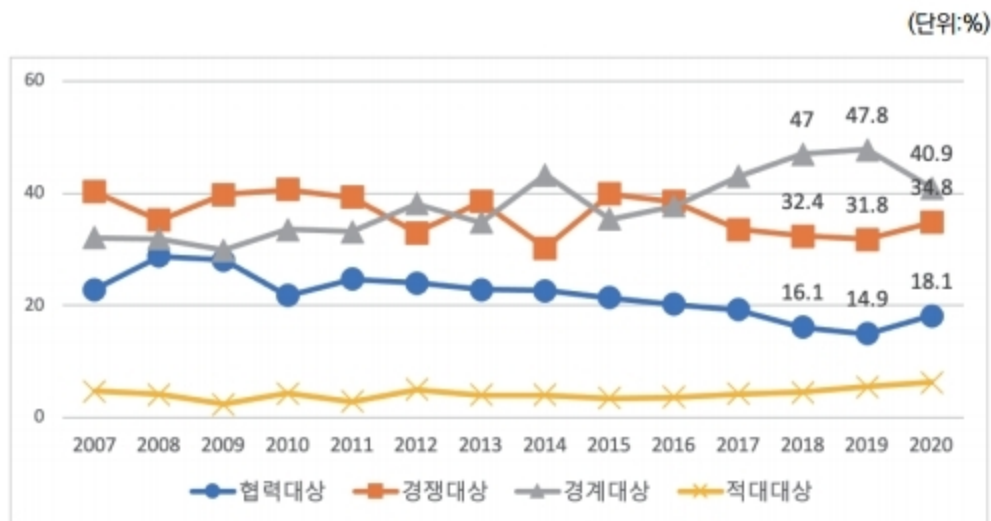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한국을 도움	4.5	3.1	3.3	2.4	1.3	3.3	5.2	5.8	5.3	1.2	1.2	1.9	0.9
북한을 도움	30.4	38.5	55.5	62.8	58.3	49.7	42.9	46.3	46.0	53.0	51.7	50.0	58.7
자국의 이익때문	52.2	50.8	37.4	31.0	37.5	41.4	46.0	43.4	42.9	39.7	41.4	40.5	34.9
중립을 지킴	13.0	7.7	3.8	3.8	2.8	5.6	5.9	4.5	5.9	6.1	5.6	7.5	5.4
합계(N)	1,212	1,200	1,200	1,201	1,199	1,200	1,201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4) 러시아의 국가이미지

러시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은 경계대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에서와 같이 2020년 경계대상 응답률은 40.9%로 2019년 47.8%에서 6.9%p 하락하였지만 가장 우세한 이미지로 형성되어 있었다. 경쟁대상 이미지의 경우 2015년 39.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올해 34.8%로 반등하였고 협력대상 이미지는 21.3%에서 계속 감소하다가 올해 18.1%로 증가하였다. 2020년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러시아에 대한 경계대상 이미지가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우호적인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협력대상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것은 한반도의 평화에 있어 러시아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기대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것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크지 않고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교역 규모도 중국, 미국, 일본과 비교할 때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한국 정부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¹⁹과 관련해 중요한 파트너이다. 특히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 Siberia Railway, TSR)와 한반도종단철도(Trans Korea Railway, TKR)의 연결 및 남·북·러 가스관 연계 사업 등은 지난 한국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제안된 프로젝트이다. 남·북·러 삼각 협력에 기반 한 사업들은 북한과의 참여와 협력이 수반되며 한반도와 유라시아 발전을 상호 연계 시킬 수 있다는 점에 많은 이점이 있다.²⁰ 러시아는 푸틴 체제 이후 극동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푸틴 4기 정부는 남·북·러 철도연결을 통해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연 잇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2020년은 한-러 수교 30주년으로 다양한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지만 관광을 중심으로 한 인적교류를 제외한 러시아와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와 사업들은 대러 제재 및 대북 제재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²¹ 이는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협력은 가속화 될 수 있기에 국민들의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 역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한국 및 북한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주변국으로서가 아닌 동아시아 이해 당사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9〉 러시아의 국가이미지



러시아의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에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응답률은 57.8%로 가장 높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의 응답률이 23.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립을 지킨다'는 15.9%, '한국을 도움'은 3%로 그 뒤를 이었다.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응답률은 주변국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높고, '중립을 지킬 것이다'라는 응답률은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가장 높다. 중국보다 '북한을 돕는다'는 응답률이 낮고,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란 응답이 높은 점, 그리고 '중립을 지킬 것' 응답이 주변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는 것은 러시아의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전략적으로도 러시아에게 북한은 유사시 동북아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이며 극동지역의 발전과 연관성이 크다.²² 장기적으로 러시아는 자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동북아시아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유사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다.

19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여 철도를 중심으로 투자와 경제 협력을 공동 추진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제안하였다.

20 신범식,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본 한국의 대륙외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1세기 초 한국의 정치외교: 도전과 과제』(서울: 늘봄플러스, 2018), pp. 485-533.

21 박정호 외, 『푸틴과 러시아 극동개발 20년: 한-러 극동 협력 심화를 위한 新방향 모색』(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p. 137.

22 최장호, 이정균, 민지영,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0년 전망: 북중·북러를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0, no 7 (2020), p.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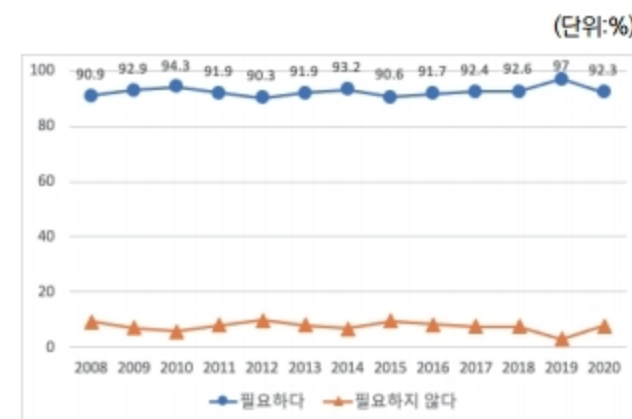
〈표 1-7〉 한반도 전쟁 시 러시아의 태도 예상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한국을 도움	6.0	4.3	5.8	4.2	3.7	3.8	3.3	3.3	3.8	2.4	1.9	2.1	3.0
북한을 도움	20.9	22.5	19.2	15.4	11.8	12.4	14.5	23.8	14.6	20.9	25.9	24.1	23.2
자국의 이익 따름	54.7	57.7	59.5	61.7	68.1	67.4	68.5	59.2	64.4	62.9	58.0	57.1	57.8
중립을 지킴	18.4	15.5	15.6	18.8	16.3	16.4	13.7	13.8	17.2	13.8	14.2	16.7	15.9
합계(N)	1,211	1,200	1,200	1,200	1,199	1,200	1,201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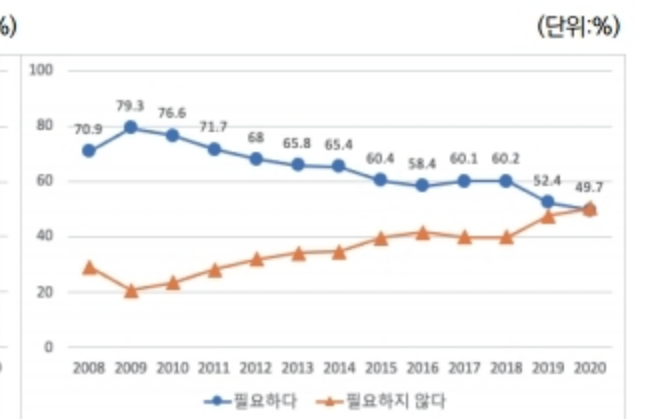
4.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과 기대

통일이 남한과 북한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민족적 과업임은 분명하지만 주변국가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련국들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조 체계를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이 평화적 공존을 넘어 남북연합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한반도의 현상 유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남북한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국에게 있어 한반도의 통합 과정은 각기 다른 비용과 편익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이 사이좋은 이웃²³을 넘어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이해를 파악하며 잠재적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주변국들이 통일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통일의식조사에서는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1-10-13〉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림 1-10〉 미국 협조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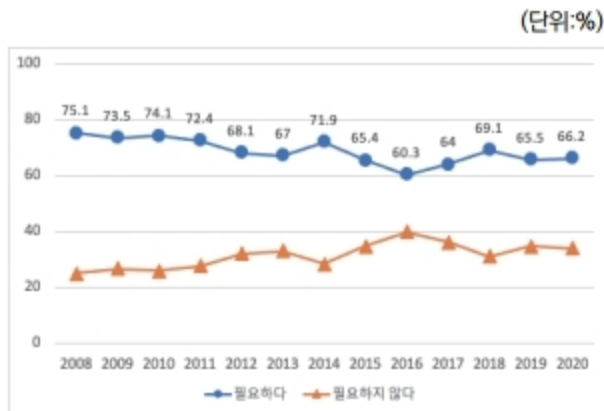


〈그림 1-12〉 일본 협조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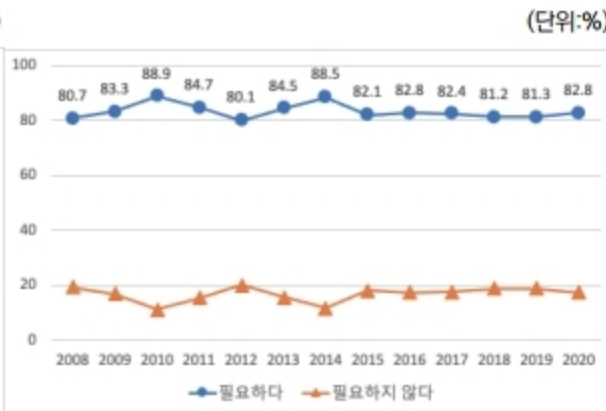


23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고 함께 잘 살고자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그림 1-11〉 중국 협조 필요성



〈그림 1-13〉 러시아 협조 필요성



〈표 1-9〉 주변국의 통일 희망

	통일을 원함		통일을 원하지 않음	
	2019	2020	2019	2020
미국	53.1	26.4	46.9	73.6
일본	9.9	6.5	90.1	93.5
중국	10.8	9.2	89.2	90.8
러시아	14.9	12.5	85.1	87.5
합계(N)	1,200	1,200	1,200	1,200

조사 응답자들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변 4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020년 미국의 경우 '매우 필요한 편이다'와 '필요한 편이다'를 합한 즉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2.3%로 2019년 97% 보다는 4.7%p 감소하였다.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조사 이래 90%대를 항상 유지해 왔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와 비교하였을 때도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20년 82.8%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남북한 통일에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한반도 분단의 성격을 고려 할 때 미국과 중국의 지지와 협조는 통일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보는 것이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2020년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6.2%로 2019년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러시아의 도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점은 일본에 대한 인식이다. 2008년부터 2011년 까지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0%를 상회하였으나 2020년에는 49.7%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즉 한반도 통일에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50.3%로 다수가 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통일을 위해 미국의 도움이 가장 중요하고 일본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더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국가로는 일본을 선택했다. 〈표 1-8〉에 의하면 2020년 주변국 중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미국 > 중국 > 러시아 > 일본 순서이며 2008-2020년 기간의 전체 평균 응답률도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표 1-8〉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

	(단위: %)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2020	2008-2020	2020	2008-2020
미국	92.3	92.5	7.7	7.5
일본	49.7	64.5	50.3	35.5
중국	82.8	83.3	17.2	16.7
러시아	66.2	68.7	33.8	31.4

통일을 위해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과연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할까? 는 또 다른 문제이다. 주변국가별 통일의 희망을 묻는 문항에서 '통일을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국 26.5%, 일본 6.5%, 중국 9.2%, 러시아 12.5%로 각각 나타났다. 역으로 보면 미국은 73.6%, 일본은 93.5%, 중국은 90.8%, 러시아는 87.5%가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019년 46.9%에서 26.7%p 증가(46.9% → 73.6%) 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미국을 가장 친근하게 여기고 우리의 협력 대상으로 인지하지만 통일 문제에 있어서 동맹국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세대별로는 20대(75.7%), 30대(75.1%) 젊은 계층에서 이러한 인식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조사는 통일을 위한 개별국가에 대한 협조 필요성 인식과 더불어 한국을 중심으로 양자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이한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표 1-10〉에서 나타나듯이 2020년의 경우 '남북한 통일을 위해 현재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중요하다'가 35.7%로 가장 우세했으며 '남북 간 협력'이 34.4%, '한미 간 협력'이 24.6%로 뒤를 이었다. 사실 '한미 간 협력'은 2019년의 경우 36.3%로 가장 높았지만 올해는 11.7%가 떨어졌다. 통일을 위해 중국의 도움이 미국 다음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한중 간 협력 필요성은 그리 높게 평가되지 않았다.

'모두 중요하다' 응답이 1/3은 넘었지만 '남북 간 협력', '한중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기보다 선택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한국사회에 여전히 우세함을 알 수 있다. '한미 간 협력' 필요성이 지난 1년 동안 하락한 점은 올해 조사에서 미국의 태도나 평가가 후하지 않았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한중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비록 '모두 중요하다'가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으나 특정한 국가와의 협력 및 관계 강화가 압도적이지 않은 점은 선택과 균형에 대한 정향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양자 관계 협력의 선호도는 다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표 1-10〉 남북한 협력과 한·미·중 공조

	(단위: %, N)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남북 간 협력	32.8	34.9	36.0	35.3	27.6	34.4
한미 간 협력	24.6	26.1	31.4	23.4	36.3	24.6
한중 간 협력	6.6	7.0	5.6	3.8	2.0	5.3
모두 중요하다	36.0	32.0	27.0	37.4	34.1	35.7
합계(N)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그렇다면 당연한 최대 과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통일외교조사는 2020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현재 '한미 간 협력'과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표 1-11〉이 보여주듯이 '한미, 한중 간 협력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은 54.9%로 '한미 간 협력'이 35.8%, '한중 간 협력' 9.2% 보다 높게 나타났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위해서는 '한미 간 협력'과 '한중 간 협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균형과 조화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²⁴

24 정치적 성향, 소득 수준, 성별, 연령대에 관계없이 '모두 강화해야 한다'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다. 단 지역 변수에 있어서는 수도권, 충남, 영남, 호남을 제외한 강원과 제주에서 '한미 간 협력'이 가장 우세했다.

북핵협상의 미국의 역할 및 한미동맹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국민들의 한미공조에 대한 선호가 예상되지만 올해의 경우 미국과 중국 모두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미중 간에 전략 경쟁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의 편을 서도록 요구 받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 어느 한 영역에 있어 특정국과의 의존이 지나치게 심화될 경우 이는 오히려 구조적 취약성을 초래 할 수 있다. 비대칭적 상호의존 자체가 힘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비핵화 문제 있어 북미가 주요 당사자가 되지만 국익의 관점에서 한국의 이익과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이를 지지하도록 만드는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다만 사드 문제에서 한 번 경험 했듯이 핵심 사안에 대해 한국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전략적인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표 1-11〉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중 공조

(단위:%, N)

	2018	2019	2020
한미 간 협력	39.3	47.3	35.8
한중 간 협력	8.6	6.5	9.2
모두 강화해야 한다	52.2	46.2	54.9
합계(N)	1,200	1,200	1,200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2020년 조사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 결과 '도움이 됨'은 21.4%, 보통은 29.6%, '도움이 안 됨'은 49%로 나타났다. 즉 남한주민의 두 명 중 한명은 중국의 국력강화 및 주변국 영향력 확대가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를 경계하거나 우려하는 입장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응답은 40대(53.2%)와 50대(49.6%), 고소득(49.9%), 수도권(54.1%), 보수 성향(62.4%)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올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65.4%로 가장 높았다. 이 응답률은 2019년 49.9%에 비해 15.5%p 증가했다. 약 3명 중 2명의 응답자가 중립을 선택한 것이다. '미국과 협력 강화'는 28.1%(2019년 43.4%), 중국과 협력 강화는 6.5%(2019년 6.6%)로 나타났다. 미국이 한국의 우방이자 동맹으로 높은 친근감과 협력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미중 갈등 시에는 대다수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본 것이다. 물론 이는 응답자들의 직관적인 선호를 묻은 것이기에 어떤 사안에 대한 '중립'인지, 실제 중립을 선택 했을 때 어떠한 기회비용이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고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편에 서기 보다 신중하고 지혜로운 자세를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미중 갈등 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중국의 부상을 보는 인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중국의 부상을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 우호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 모두 미중 갈등 시 한국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50% 이상 나타났다.

단 지역 변수에 있어서는 수도권, 충남, 영남, 호남을 제외한 강원과 제주에서 '한미 간 협력'이 가장 우세했다.

〈표 1-12〉 중국 부상과 미중 갈등 시 한국 입장

(단위:%, N)

		미중 갈등 시			합계
		미국과 협력 강화	중국과 협력 강화	중립을 지켜야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됨	27.0	14.1	59.0	100%
	보통	17.4	9.0	73.6	100%
	도움이 안 됨	35	1.7	63.3	100%
	합계(N)	337	78	785	1,200

$\chi^2 = 99.056$ p<0.05

5. 소결

2020년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조사를 통해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 대해 정형적으로 갖고 있던 인식에 변화가 발견된다. 대미친밀감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협력대상 인식은 주변국 가운데 가장 높으나 한반도 유사 시 미국은 한국에 일방적인 우방이 되기보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미국이 한국의 동맹으로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미국의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지만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매우 희망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힘에 기반한 외교, 중국과의 갈등을 주저하지 않는 모습은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70년 간 지속된 한미동맹을 자국 경제의 이해(利害) 관점으로 접근하는 인식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강대국 현실정치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차원을 넘어 미국 주도의 규범과 세계질서에 대한 매력을 감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 재선 이후 새 행정부의 북핵 협상의 동력이 약해지고 북한의 비핵화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예전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굳건했던 대미인식의 분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체 상황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북미 대화가 연이어 일어나고 다양한 합의를 이끌어 냈을 시기 대북위협인식이 하락하였지만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북미회담의 성과 없이 끝나게 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 및 번영에 대한 기대와 동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김정은 정권의 2020년 상반기 대남 비난과 도발 행위를 지속한 것은 대북 호감도 하락과 위협인식 상승에 요인을 주고 있다.

셋째, 최악의 한일관계를 고려 할 때 올해 대일 인식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향후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정권의 성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여지는 크다. 대일 위협인식이 다시 감소하고 경제대상에서 경쟁대상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지만 주변국 가운데 일본에 대한 적대대상 이미지가 가장 높고 협력대상 이미지가 가장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처음으로 과반을 넘는 등 표층적인 인식에서 반일정서는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끝으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등 동아시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민의식은 안정과 균형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부상은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일 것으로 인식되지만 미중 갈등 시 한국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견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코로나19 이후 바이러스 감염증 대확산을 둘러싼 미중 간 책임 전이, 봉합되지 않은 무역전쟁, 기술패권을 둘러싼 경쟁과열을 목도하면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중립과 중용을 지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공동의 이해를 만들어 나가면서 다자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미국 중심과 중국 중심 진영으로 대립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게 하는 명민하고 냉철한 외교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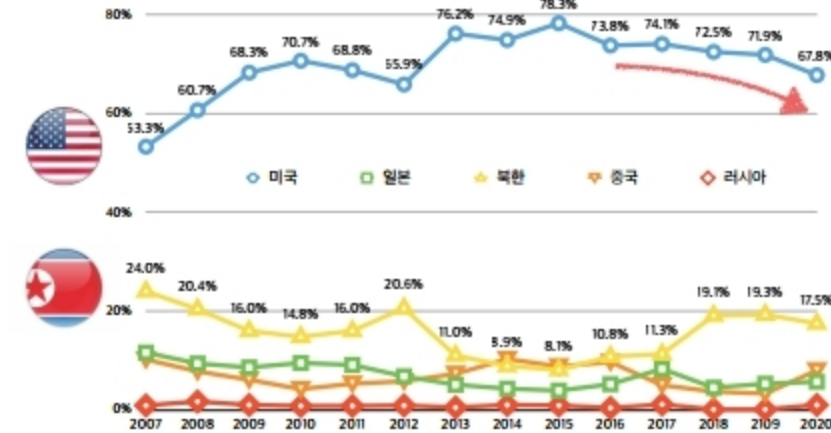
주변국 관계 인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최규빈

목차

1. 주변국 친밀감
2. 주변국 위협인식
3. 주변국 이미지
4.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과 기대
5. 소결

주변국 친밀감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자는 67.8% 가장 높은 친밀도
(7년 만에 60%대로 하락)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자는 17.5%, 소폭 하락

경색된 한일관계 고려했을 때 대일친밀감은 2년 연속 소폭 상승
(4.5% → 5.3% →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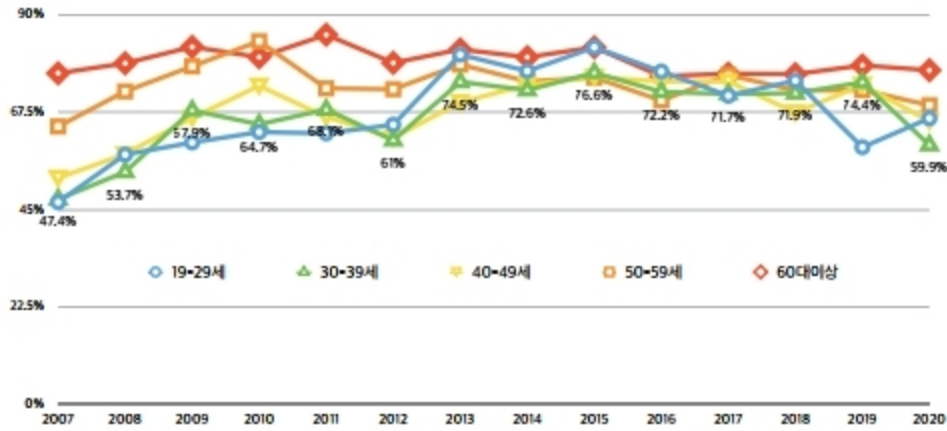
주변국 친밀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미국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일본	3	3	3	3	3	3	4	4	4	4	3	3	3	4
북한	2	2	2	2	2	2	2	3	3	2	2	2	2	2
중국	4	4	4	4	4	4	3	2	2	3	4	4	4	3
러시아	5	5	5	5	5	5	5	5	5	5	5	5	5	5

미국 > 북한 > 중국 > 일본 > 러시아 순서의 호감도

- 미국: 친밀감이 가장 높은 국가
- 중국: 2014-5년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선호도, 2017-9년 네 번째, 2020년 세 번째
- 북한: 2014-5 세 번째 선호도로 떨어짐, 2016년 이후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주변국 친밀감-연령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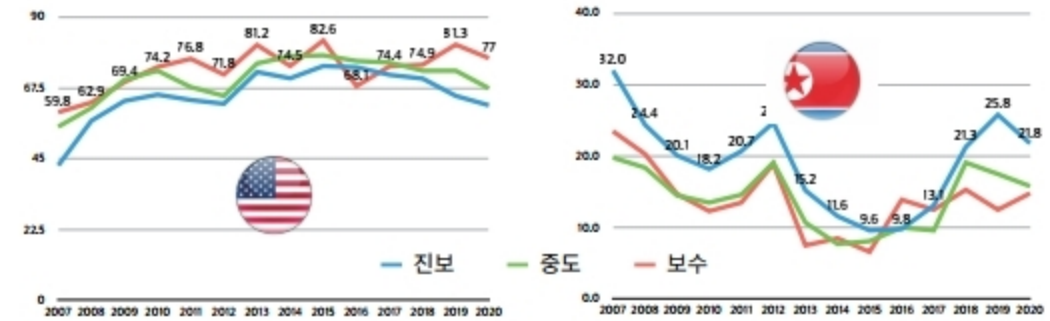


30대 대미친밀감

- 대미친밀감 하락 폭: 30대(-14.5%p) > 40대(-8.4%) > 50대(-3.5%) > 60대(-1.1%)
- 대미인식 편차: from 수렴 to 확산?

5

주변국 친밀감-정치적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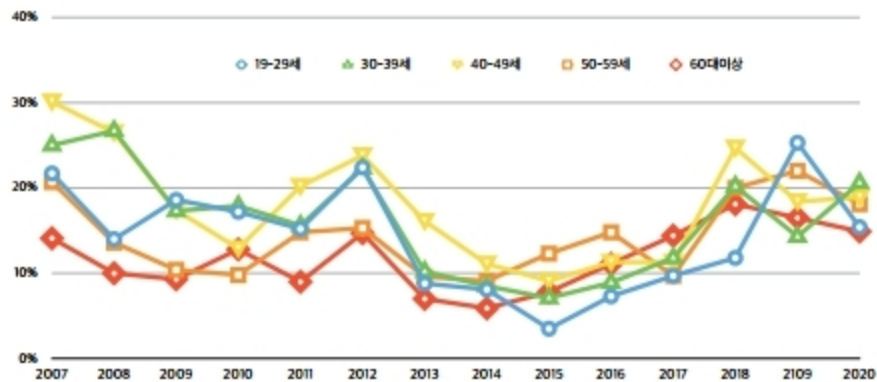


2020	진보	중도	보수	전체
미국	62%	67.4%	77%	67.8%
북한	21.8%	15.8%	14.8%	17.5%

- 대미친밀감: 보수 > 중도 > 진보
- 대북친밀감: 진보 > 중도 > 보수

7

주변국 친밀감-연령대 북한



30, 40대 대북친밀감

- 20, 50, 60대에서 대북친밀감 하락, but 30대(6.3%p), 40대(0.5%p) 상승

20대 대북친밀감

- 2019년 25.3%로 가장 높은 대북 친밀감, but 올해 15.4%로 60대 다음으로 가장 낮음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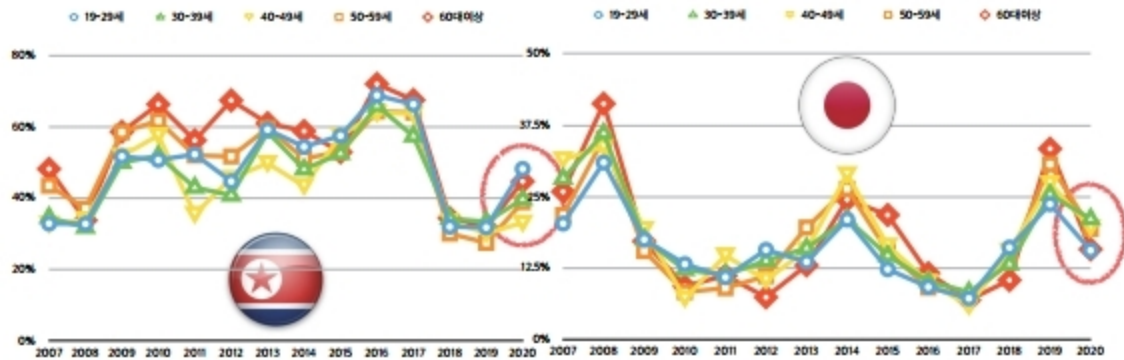
평화위협국가



- 북한이 가장 위협적(40.8%): 2017-19 연속 하락에서 다시 상승
- 대중위협인식 32.4%, 2년 연속 하락
- 대일위협인식 18.3%, 2년 연속 상승에서 하락

8

평화위협국가-연령대 북한, 중국



모든 연령대에서 대북위협인식 상승
: 2019년과 정반대의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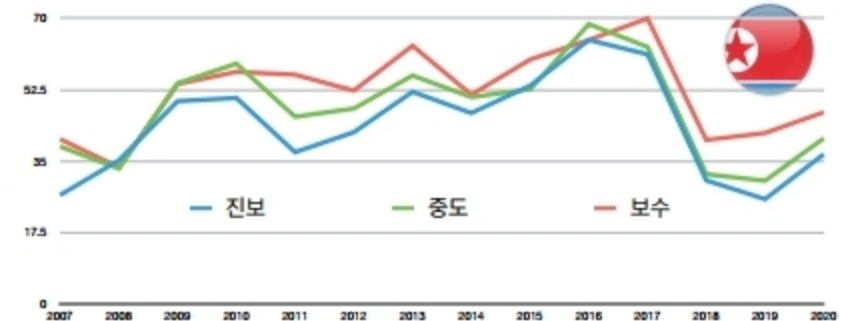
모든 연령대에서 대중위협인식 하락
: 2019년과 정반대의 패턴

20대 대북위협인식 가장 높음
: 20대(48.2%) > 60대(44.7%) > 30대(39.7%) > 50대(38.9%) > 40대(33.1%)

20대 대일위협인식 가장 낮음
: 20대(15.6%) < 60대(15.8%) < 50대(19.4%) < 40대(19.6%) < 30대(21.1%)

9

평화위협국가-정치적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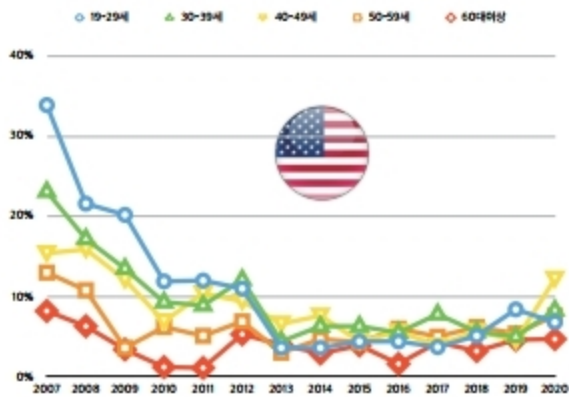
2020	진보	중도	보수	전체
미국	9.4%	8.5%	4.7%	7.9%
일본	22.2%	17.4%	14.4%	18.3%
북한	36.7%	40.6%	47.0%	40.8%
중국	30.8%	33.1%	33.2%	32.4%

2007-2020년
: 보수 응답자가 대체적으로 대북 위협인식이 높음

2020년
: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북한이 가장 위협적

11

평화위협국가-연령대 미국



연령별 미국 친밀감

	2019	2020	증가폭
19-29세	59.4%	66.1%	6.7%
30-39세	74.4%	59.9%	-14.5%
40-49세	73.8%	65.4%	-8.4%
50-59세	72.6%	69.1%	-3.5%
60대이상	78.3%	77.2%	-1.1%

연령별 미국 위협감

	2019	2020	증가폭
19-29세	8.4%	6.8%	-1.6%
30-39세	5.0%	8.3%	3.3%
40-49세	4.5%	12.2%	7.7%
50-59세	5.4%	7.6%	2.2%
60대이상	4.6%	4.7%	0.1%

미국 위협인식은 7.9%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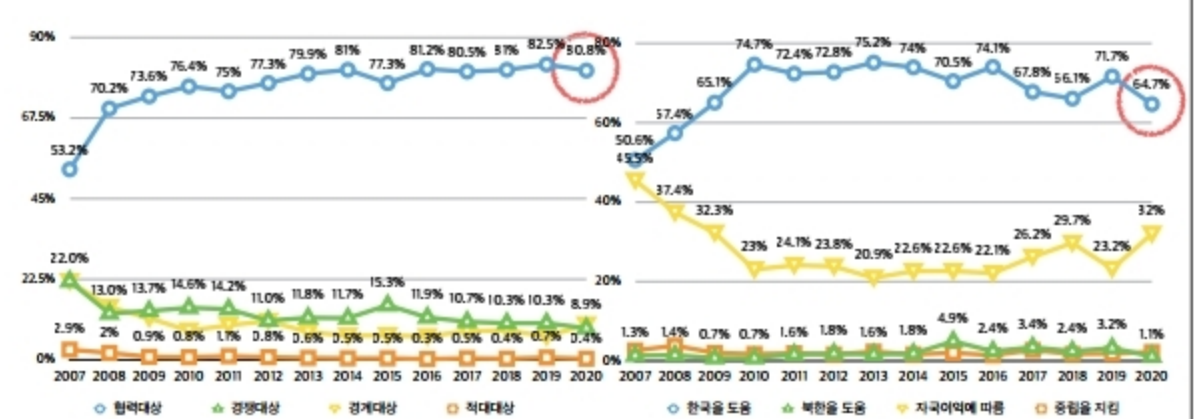
but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응답율

30, 40대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40대 대미위협감 7.7%p 상승(30대 + 3.3%p)
30대 대미친밀감 14.5%p 하락(40대 -8.4%p)

10

미국 이미지



미국 '협력대상' 이미지 80.8%

우방국, 동맹국, 협력자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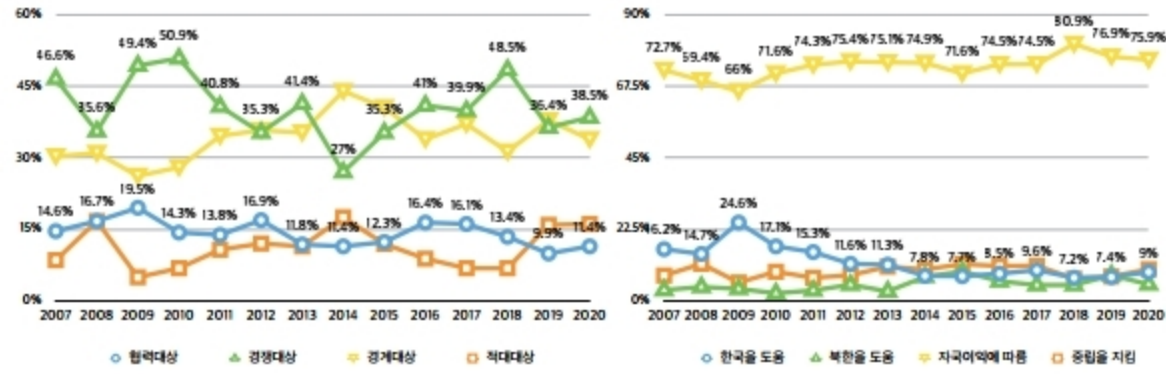
단, '경계대상' 9.9%, 2012년 이래 다시 10%대 증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한국을 도울 것이다'가 64.7%로 절반 이상
최근 10년간 가장 낮음
'자국이익에 따를 것이다'는 8.8%p 상승
최근 10년간 가장 높음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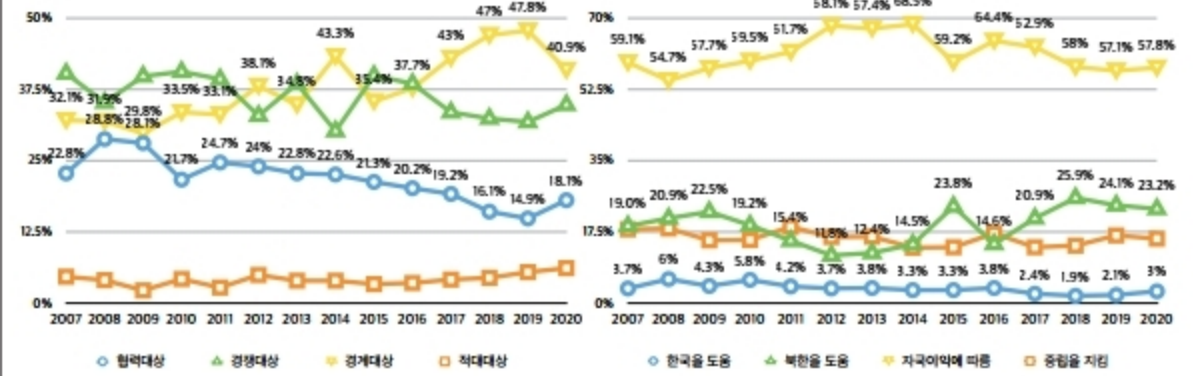
일본 이미지



경쟁대상 38.5%, 경계대상 33.9%,
적대대상 16.1%, 협력대상 11.4%,
대일 적대외식 (16.1%) > 대중 적대외식(11.4%)
문재인 정부 들어 협력대상 감소, 경계대상 상승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는 75.9%로
주변국 중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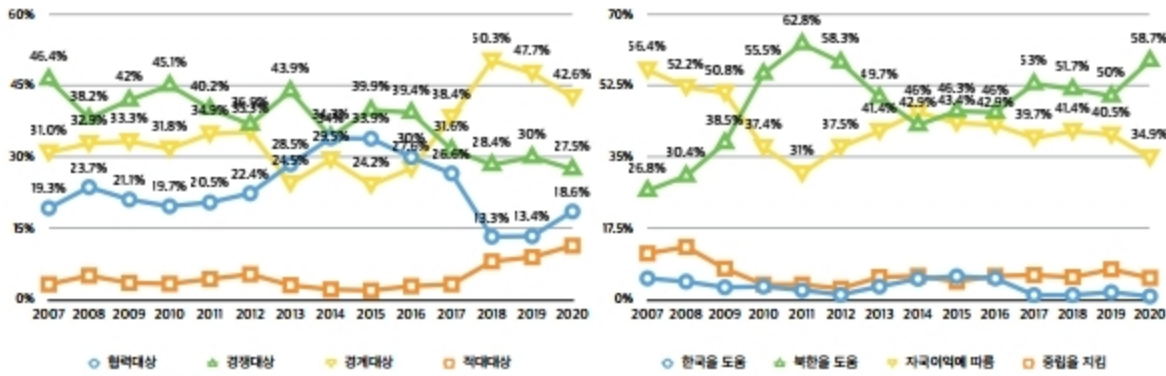
러시아 이미지



경계의 이미지(40.9%)가 우세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 인식 증가
: 경계대상 감소 및 협력대상 이미지(18.1%) 상승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 57.8%로 우세
(일본 다음으로 높음)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은 (23.2%)
중국 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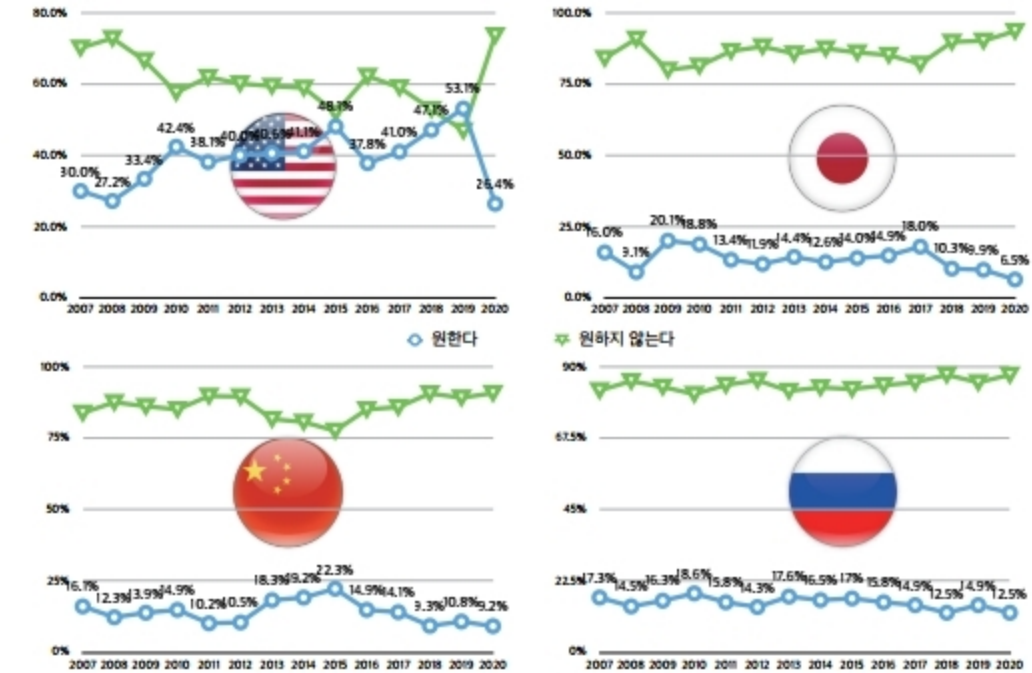
중국 이미지



경계대상으로 보는 것이 42.6%로 우세
대중 이미지 다소 완화:
경계이미지 완화, 협력이미지 상승

'북한을 도움'(58.7%)이 주변국 중 가장 높음
즉, 유사시 적극적으로 개입 할 것이라는 판단

주변국 통일희망



주변국 통일희망

	통일을 원함		통일을 원하지 않음	
	2020	2007-2020	2020	2007-2020
미국	26.4%	39.0%	73.6%	61.0%
일본	6.5%	13.8%	93.5%	86.4%
중국	9.2%	14.0%	90.8%	86.0%
러시아	12.5%	15.6%	87.5%	84.4%

'통일을 원한다' 2020년 응답률: **미국**>러시아>중국>일본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2020년 응답률: **일본**>중국>러시아>미국
 통일을 가장 원하는 국가는 **미국** 가장 원하지 않는 국가는 **일본**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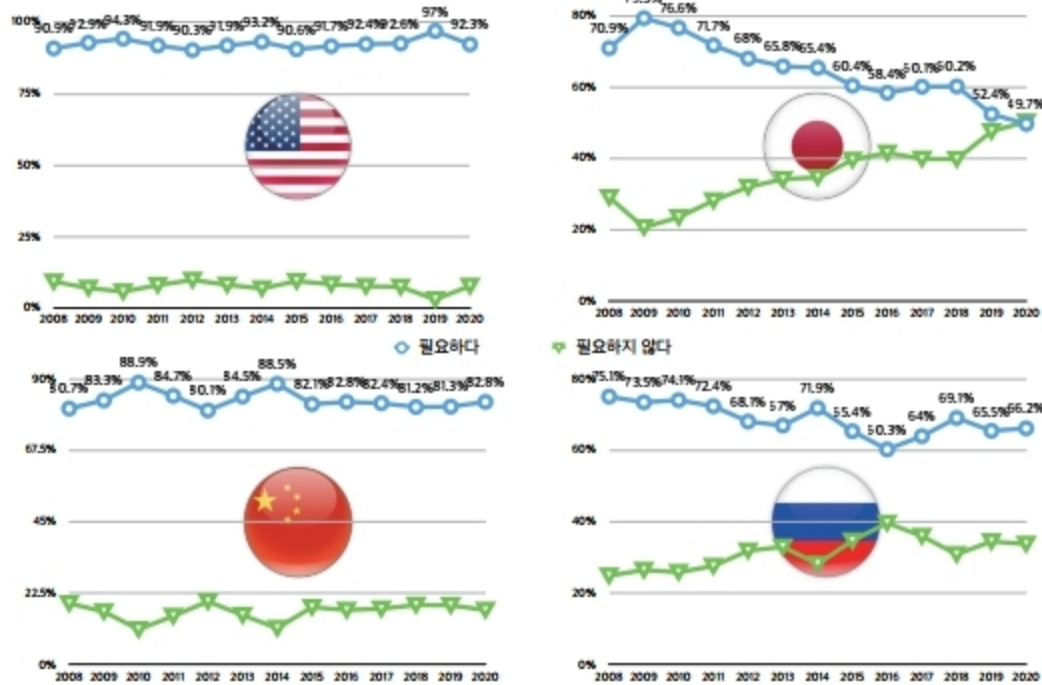
통일협조 필요성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2020	2007-2020	2020	2007-2020
미국	92.3%	92.5%	7.7%	7.5%
일본	49.7%	64.5%	50.3%	35.5%
중국	82.8%	83.3%	17.2%	16.7%
러시아	66.2%	68.7%	33.8%	31.4%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도움이 필요없다'는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일본**>러시아>중국>미국
 미국의 도움이 가장 절실, 일본보다 중국의 도움이 더 필요

19

통일협조 필요성



18

남북관계와 한·미·중 공조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남북간 협력	32.8%	34.9%	36.0%	35.3%	27.6%	34.4%
한미간 협력	24.6%	26.1%	31.4%	23.4%	36.3%	24.6%
한중간 협력	6.6%	7.0%	5.6%	3.8%	2.0%	5.3%
모두 중요하다	36.0%	32.0%	27.0%	37.4%	34.1%	35.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통일을 위해 '남북, 한미, 한중 모두 중요'가 35.7%로 가장 높음
 '모두 중요' > '남북 간 협력' > '한미 간 협력' > '한중 간 협력'
 '남북' 협력(34.4%)이 '한미' 협력(24.6%) > 보다 우선

20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중 공조

	2018	2019	2020
한미 간 협력	39.3%	47.3%	35.8%
한중 간 협력	8.6%	6.5%	9.2%
모두 강화해야 한다	52.2%	46.2%	54.9%
	100.0%	100.0%	100.0%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 한중 협력 모두 강화 해야 한다' 응답이 54.9%로 가장 높음

'한미 간 협력' (35.8%) > '한중 간 협력' (9.2%)

'한미', '한중' 간 협력이 균형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

: 정치적 성향, 소득 수준, 성별, 연령대에 관계 없이 '모두 강화해야 한다'가 가장 우세

21

중국 부상과 미중갈등 시 한국입장

2020		미중 갈등 시			합계
		미국과 협력강화	중국과 협력 강화	중립을 지켜야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됨	27.0%	14.1%	59.0%	100%
	보통	17.4%	9.0%	73.6%	100%
	도움이 안됨	35.0%	1.7%	63.3%	100%
	합계(N)	337	78	785	1,200

$\chi^2 = 99.056$ $P < 0.05$

중국의 부상을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 중국의 우상을 우호적으로 보지 않은 사람
모두 미중 갈등시에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

23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미중 갈등 시 한국입장

	2018	2019	2020
도움이 됨	22.0%	29.8%	21.4%
보통	28.5%	34.5%	29.6%
도움이 안됨	49.5%	35.6%	49.0%
	100%	100%	100%

응답자의 절반은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일 것이라 생각

중국의 국력강화 및 주변국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태도를 갖고 있음

: 40대(52.3%), 고소득(49.9%), 수도권
(54.1%), 보수 성향(62.4%) 우세

	2018	2019	2020
미국과 협력 강화	39.2%	43.4%	28.1%
중국과 협력 강화	7.6%	6.6%	6.5%
중립을 지켜야	53.2%	49.9%	65.4%
	100%	100%	100%

응답자의 약 3명 중 2명은 미국과 중국과의 갈
등이 심화될 때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

2019년에 비해 15.5%p 증가

22

소결

- 굳건한 대미인식의 변화
- 대미친밀감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하락 중
-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비핵화 협상의 교착, 2020년 상반기 대남 비난은 대북 호감도 하락, 위협인식 증가
-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 하지만 반일정서는 지속
- 대일위협인식 감소, but 적대대상 이미지 상대적으로 높음,
절반이 통일에 도움 되지 않는 국가로 인식
- 미중 사이에서 균형
-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중 공조 필요, 중국의 부상은 부정적, but
미중 갈등시 한국은 중립을 지켜야 함
- 주변국 통일환경 부정적
- 주변국은 한반도 통일 원하지 않지만 주변 4개국 협조 반드시 필요

24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한국인의 통일외식

단절의 시대,
통일외식 변화

제2부 심화분석

발표6

한국인의 정치적 정향과 통일외식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정치적 정향과 통일의식 (DRAFT)

2020. 10.
2020 통일의식조사
정치외교학부 박원호

‘통일의식’과 관련된 정치적 질문들

- 통일의식의 특징은 무엇인가?
 - 한국에만 있는 고유한 ‘정책 선호’로서 통일의식
- 정치이념, 정당/후보 지지 등 정치적 정향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 전통적 진보-보수 구분의 핵심 척도로서 통일의식
 - 미묘하면서도 급격한 변화 속도
- 통일에 대한 입장이 총선 국면에서의 정당/후보 지지와 어떤 관련이 있었나?

2020년의 정치적 맥락

- 전통적 이념/정당 대립의 붕괴와 변화
 - 전통적 ‘보수’의 몰락과 ‘진보’의 팽창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의 재발견”
- 통일 의제의 정치적 주변화 혹은 “고립화”
 - 예컨대 정치적 정향과 통일의식은 어떤 관계인가?
 - 총선에서의 선택과 통일의식은 어떤 관계에 있나?
- 통일의식의 상대적 안정화

통일에 대한 견해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빈도	%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	47	3.92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148	12.33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667	55.58
현재대로가 좋다	257	21.42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81	6.75
합계	12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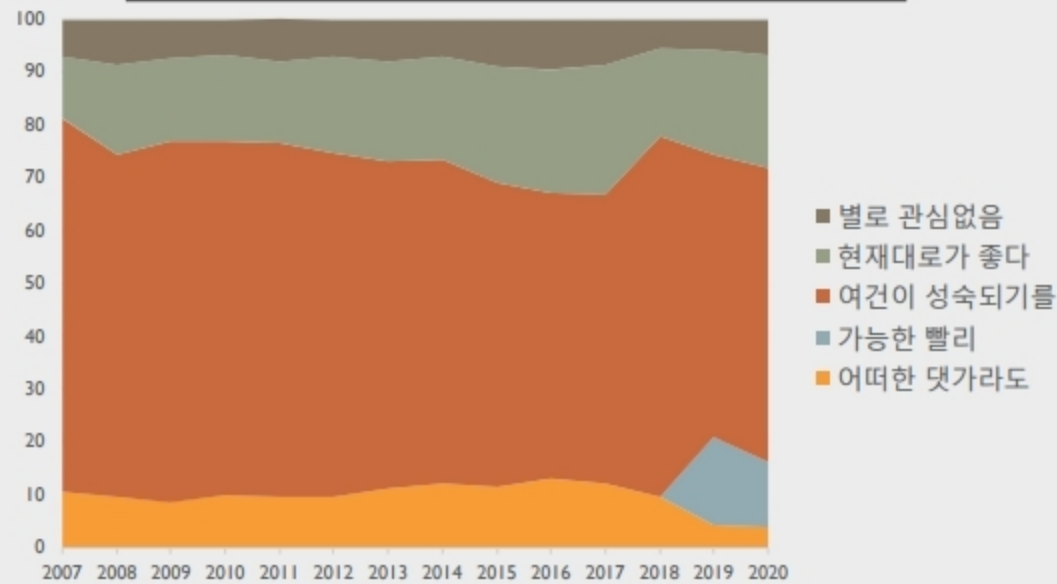
통일에 대한 견해: 지형 분포

- 빠른 통일 (15% ← 21% 2019년)
 -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4%)
+가능한 빨리(12% ← 17% 2019년)
- 여건 성숙 점진적 통일(56% ← 54% 2019)
 - Majority를 형성한 입장, 그러나 '정답'일수도
- 현상유지(21%)+무관심(7%) 정도

변화상 요약

- 2018년의 “spike”를 거쳐 다시 원상회복
- “관심없음”+ “현재대로”의 지속적 증가
- 2018년의 surge이후 다시 하락, 혹은 예년수준
- 2019년 문항변화, but 비교적 comparable
-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이들은 누구인가?

변화의 추세



정당 및 후보자 지지

정당에 대한 지지

지지정당	빈도	%
더불어민주당	405	33.75
미래통합당	252	21.00
민생당	9	0.75
정의당	37	3.08
국민의당	27	2.25
기타 정당	13	1.08
지지정당 없음	457	38.08
합계	1,200	100

총선 지역구 투표 후보

지지정당	빈도	%
투표하지 않았다	162	13.50
더불어민주당	523	43.58
미래통합당	282	23.50
민생당	14	1.17
정의당	48	4.00
국민의당	29	2.42
기타 정당	26	2.17
무응답	116	9.67
합계	1200	100

정당 지지의 최근 변화

- 전통적 양당체제의 붕괴
 - 더불어민주당(34%) vs 미래통합당(21%)
 - 선거 지지는 43:23
 - 군소정당의 몰락(민생+정의+국민=7%)
- 무당파("지지정당 없음")가 상당한 다수
 - 50%(2018)보다는 38%로 약간 하락
 - 그러나 상당수의 무당파는 여당으로 흡수

지지정당별 통일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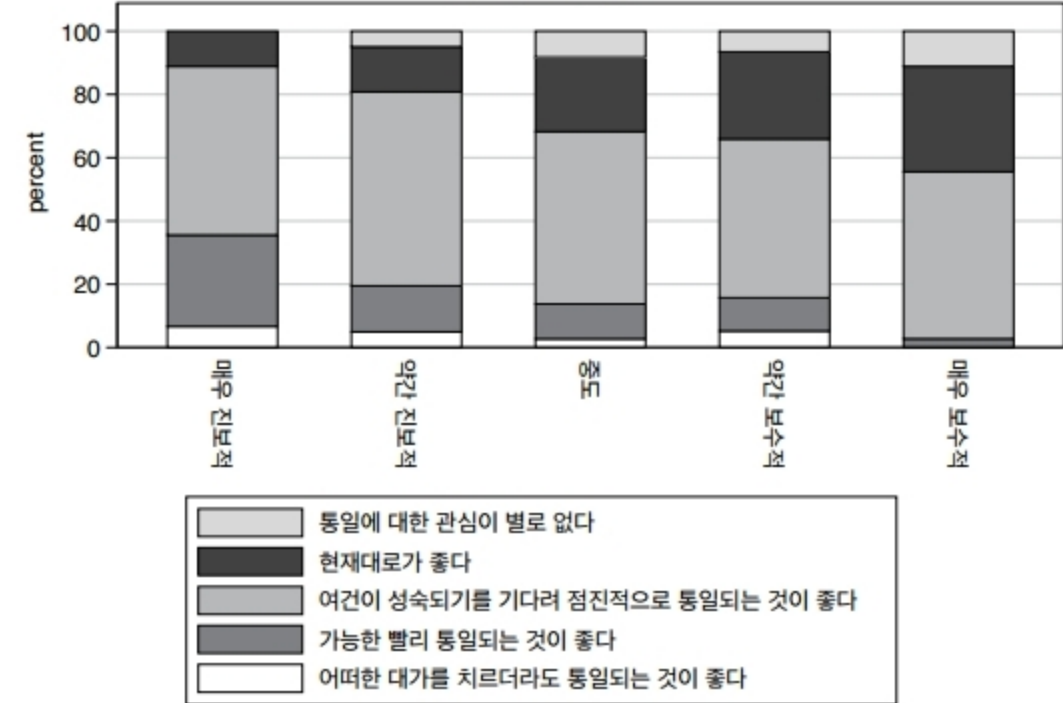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지지정당				Total
	더불어민	미래통합	정의당	무당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 원한다	4.69	3.97	8.11	2.63	3.82
현재대로가 좋다	17.78	12.30	10.81	7.88	12.42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60.00	53.17	54.05	52.95	55.52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12.59	25.40	21.62	27.57	21.63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4.94	5.16	5.41	8.97	6.60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정치이념과 정책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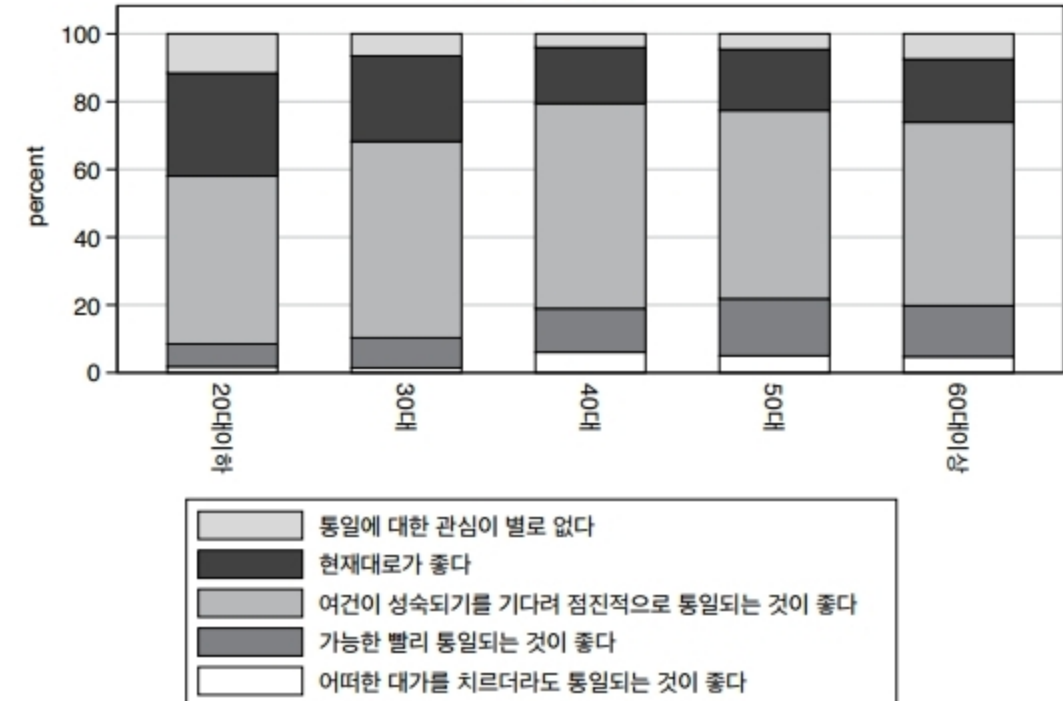
통일의식의 독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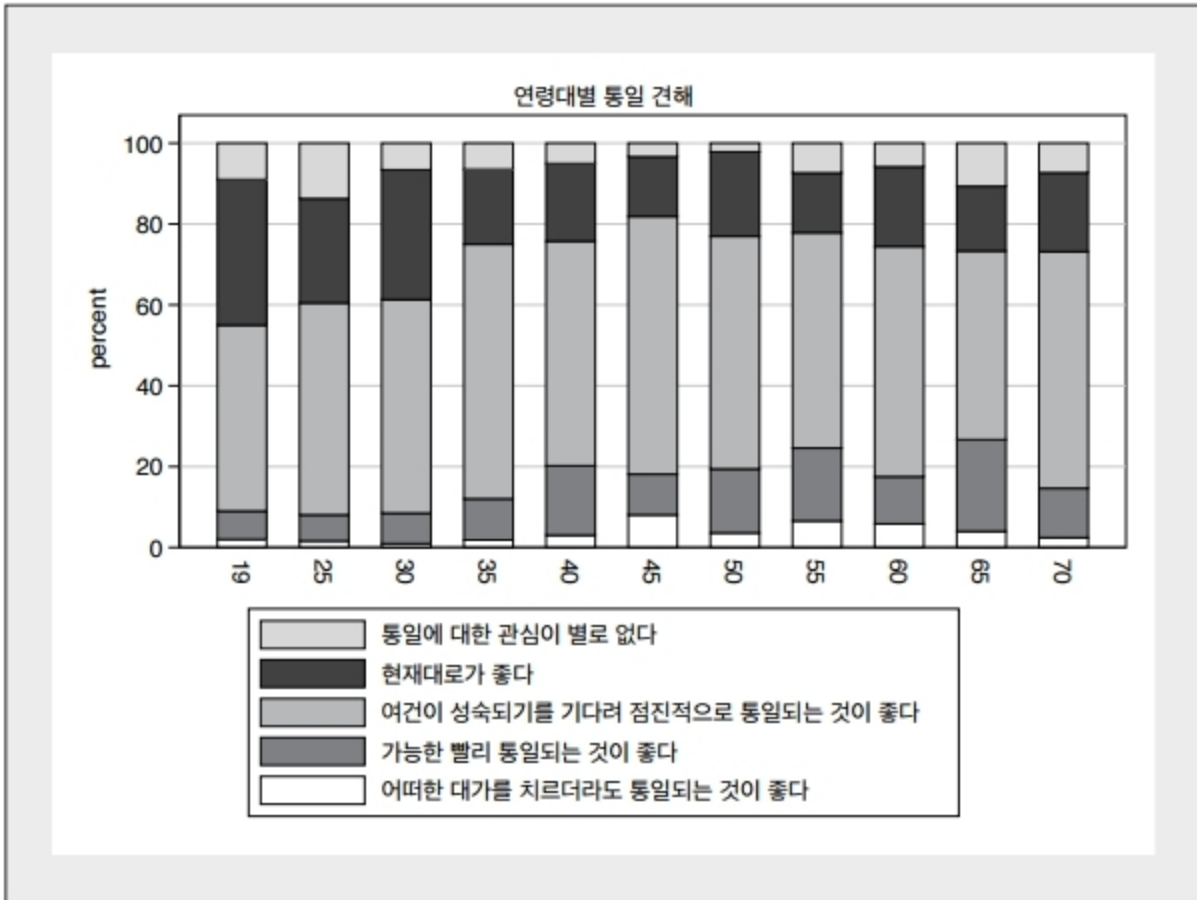
- '북진통일'과 평화통일 공히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전후세대의 퇴장)
- 중장년층(386?)이 가장 "친통일적"이다 (그러나 386 세대의 "노화")
- 전통적 좌우진영 내 분화를 보인다
 - Libertarian, individualist, materialist, etc.
- 그러나 선거가 있었던 2020년은 통일에 대한 생각이 매우 "정치화"되는 시기이기도

정치성향별 통일 견해



연령대별 통일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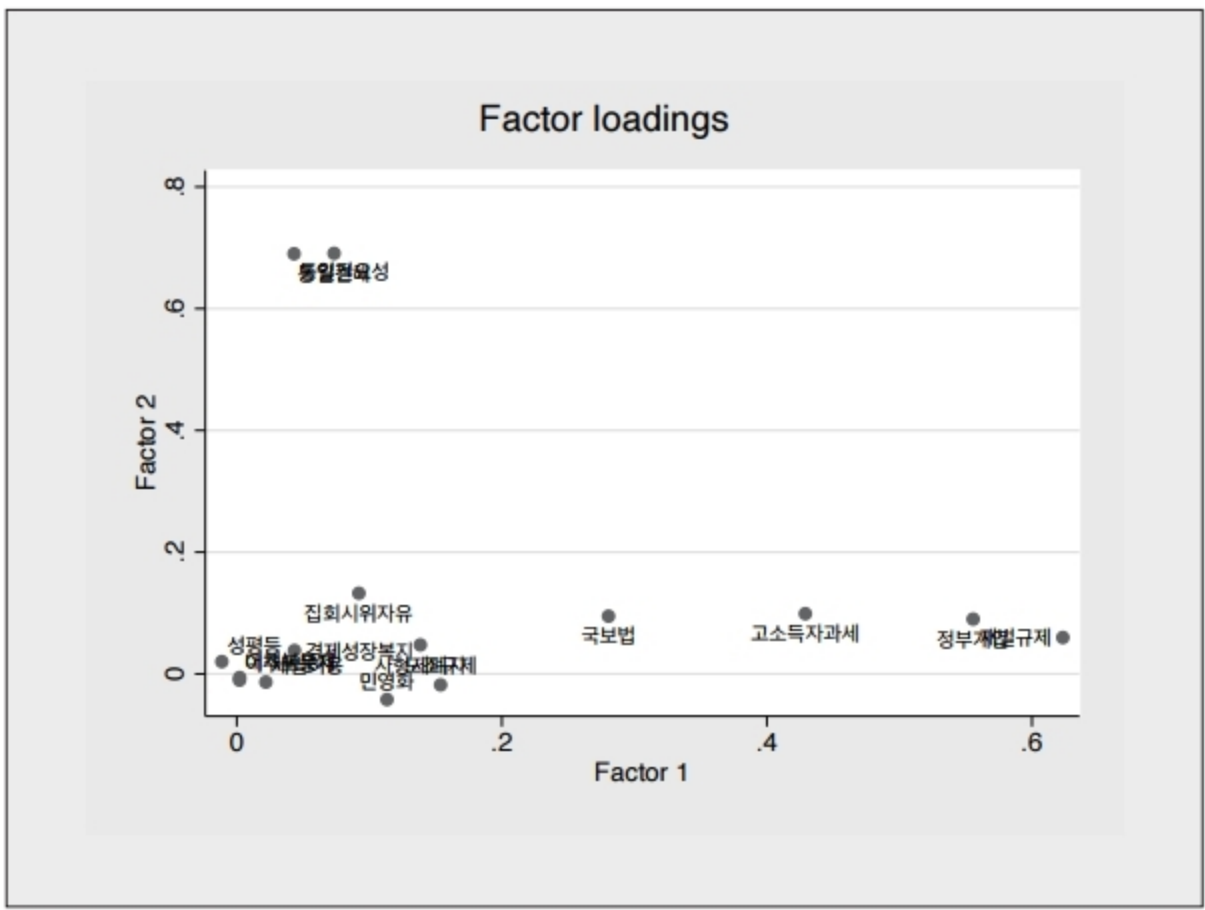


이념의 측정으로 정책선호

- 정치이념에 대한 측정
 - self-reporting: “나는 보수적/진보적이다.”
 - 정책선호의 특정한 조합
- 후자의 경우 요인 분석 등을 통해 이념의 dimension 등을 추출할 수 있음

요인분석: 여타 정책선호와 상당히 다른 통일의식

Variable	Factor1	Factor2	Factor3	Uniqueness
집회시위자유	0.0921	0.1324	0.0537	0.8697
국보법	0.2805	0.0948	0.0030	0.7741
경제성장복지	0.0436	0.0384	0.3337	0.7081
고소득자과세	0.4290	0.0988	0.0453	0.7335
민영화	0.1133	-0.0421	0.0369	0.8815
체벌허용	0.0219	-0.0134	0.0180	0.8360
대체복무제	0.0022	-0.0060	0.0110	0.9702
사형제폐지	0.1385	0.0476	0.0106	0.7893
이주노동자	0.0021	-0.0103	0.7161	0.4667
성평등	-0.0113	0.0202	0.5664	0.6211
정부개입	0.5556	0.0900	-0.0060	0.6523
재벌규제	0.6233	0.0598	-0.0096	0.5956
노조규제	0.1538	-0.0180	0.0534	0.8226
통일필요성	0.0432	0.6900	-0.0058	0.5215
통일견해	0.0734	0.6907	0.0095	0.5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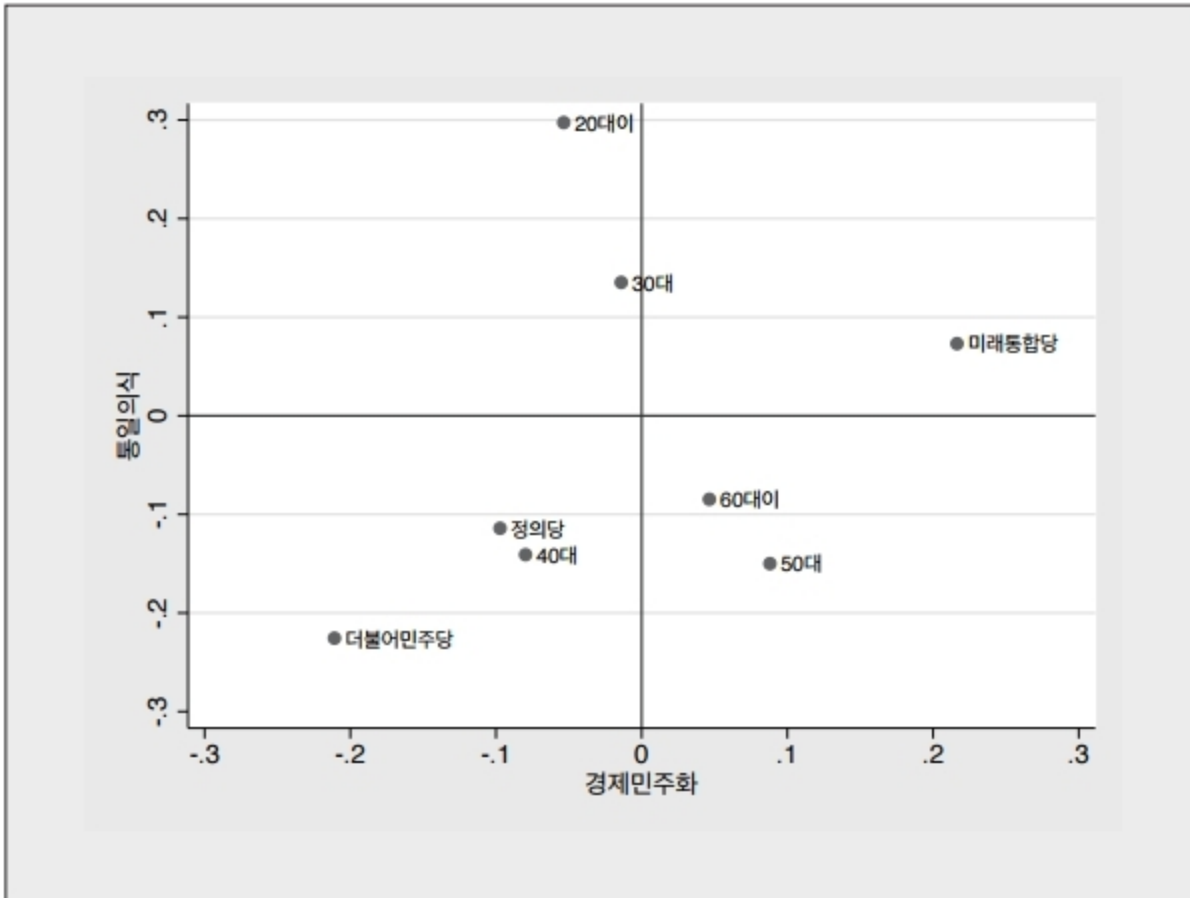


제2부 심화분석

발표7

단절 시대의 통일 감정

김희정 (인하대)



요약 및 이후의 과제

- 무당파, 그리고 정당으로부터 이탈하는 유권자들의 크기는 상당하며 이들은 통일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입장
- 개인 수준에서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에 대한 선호와는 상충되는 통일의식요인 존재
- 젊은 유권자들의 경우 공히 통일의식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이지만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에서는 비교적 진보적인 입장
- 이후의 연구는 통일정책선호가 유권자들의 정당선호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라는 질문을 규명할 것

| 단절 시대의 통일 감정 (요약) |

김희정 (인하대학교)

남북관계는 2018년 조성되었던 화해 무드가 사그라들면서 경색 국면에 이르렀고, 급기야 북한은 6월 16일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였다. 이는 6월 13일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이 "확실하게 남조선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라고 한 뒤 일어난 일로 남북관계의 단절을 상징하는 행위였다.

남북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해 개인간, 집단간, 국가간 단절의 시대가 도래했다.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는 심리적 거리두기를 불러오고 코로나 블루, 비대면 사회, 온라인 소통 등의 단어가 언론의 주요 장면을 채웠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세계화를 향해 달려왔지만 타국과의 인적 이동을 저지하기 위해 빗장을 걸면서 국가 간 이슈에서도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우며 단절감을 높이고 있다. 지구적 차원의 '단절'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대에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감정은 어떠한지, 또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연령대별 통일의 필요성

가.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올해 평균 3.44로 나타나 작년 대비(3.49) 감소하였음

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연령대별 순위는 50대(3.66) > 60대(3.63) > 40대(3.59) > 30대(3.21) > 20대(3.01)로 나타났음. 20대가 타연령대에 비해 올해 하락의 폭이 가장 컸으며, 20대의 하락이 전체 평균의 하락을 이끈 것으로 나타남. 20대는 2018년에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대치를 나타냈으나 이후 2년간 타 연령대 대비 급격히 감소하면서 올해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음. 이는 20대가 최근 남북관계로 인한 통일외식 변화에 가장 민감한 연령대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지난 14년간의 연령대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는 60대가 가장 높았으나, 2017년 이후 급격히 낮아지면서 2018년부터는 50대가 선두에 서게 되었음. 2018년은 50대(최대)-20대(최저), 2019년은 50대(최대)-30대(최저), 2020년은 50대(최대)-20대(최저)로 나타났음.

2. 연령대별 통일감정

(1) 연령대별 통일에 대한 감정(2019-2020)

가. 2020년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감정을 척도 평균점수로 살펴본 결과 기쁨(3.07) > 희망(3.04) > 불안(2.79) > 시큰둥(2.70) > 분노(2.39) > 슬픔(2.38)의 순위로 나타남

나. 작년 대비 희망의 감정은 줄어들었고(3.12-)>3.04), 나머지 분노, 불안, 슬픔, 시큰둥, 기쁨 감정은 증가하였음. 이는 올해 부정적 감정 응답시에 '그렇지 않다' 비율이 줄고 '보통이다'로 응답한 비율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여짐. 작년과 대비해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감정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특히 시큰둥한 감정은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였으며, 타 감정 대비 가장 높은 폭으로 증가하였음. 이와 대비해, 기쁨이 소폭 상승한 것은 특징적임

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에서 불안 증가, 40대 제외 희망 감소, 전 연령대의 시큰둥함 증가, 20대, 50대, 60대의 분노 증가 등이 작년 대비 두드러진 차이임

라. 2018년 사건들로 남북관계의 회복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등 최근 경색 국면에 이른 남북관계가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희망 감정을 줄고 시큰동함, 분노 감정 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분석 필요

(2) 통일에 대한 감정 구조 유형(2020)

마. 작년 심화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올해 통일에 대한 감정 구조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높은감정”(집단 1, 377명), “낮은감정”(집단 2, 310명), “긍정감정”(집단 3, 252명), “부정감정”(집단 4, 257명)**로 나타나 작년과 유사한 군집으로 나타남. 추후 감정구조 유형에 따른 타 변수와의 관계, 작년 감정구조 유형과의 비교, 북한주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북한주민의 통일감정과의 비교 등 심층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3) 연령대별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감(2007-2019)

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감은 전 연령 70%대로 나타났으며 작년 대비 하락. 연령대별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감은 **60대(78.7%) > 20대(78.6%) > 50대(77.7%) > 30대(74.7%) > 40대(70.9%)** 순이었음

사. 작년 대비 20대는 비슷하였으나 30대는 5.1%p, 40대는 7.4%p 하락하였으며 40대의 경우 10년 내 최저치임

(4) 연령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및 핵위협에 의한 죽음 불안

아. 북한의 무력도발 및 핵위협에 대해 **우리 국민의 평균 53.1%가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60대(62.4%)>20대(55.8%)>50대(52.2%)>40대(50.9%)>30대(42.8%)** 순으로 나타났음.

자. 해당 결과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평균 76.1%)보다 낮은 수치이나 **국민의 50% 이상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어 죽음 불안에 대한 심층분석과 더불어 이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고 회복, 치유 및 통일교육에 이를 반영할 필요성을 보여줌**

차. 공포관리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TMT)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처하기 위한 심리적인 기제들을 설명함. TMT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에 대한 대처가 개인과 사회 수준에서의 인간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추후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에 대한 방어기제로서 나타나는 자아존중감(self-esteem), 집단간 편견 등 사회문화적 세계관 변수와의 관련성을 추가로 살펴볼 예정임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2007-2020)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은 40대 제외 전 연령대에서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증가폭은 60대(10.2%p), 20대(6.8%p), 30대(4.7%p) 순임
- 30대의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연령대로 나타났으나 핵무기 보유 위협감도 낮은 편이며, 무력도발 및 북핵 위협에 따른 죽음불안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음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1) 이주자 친근감

가. 2020년 우리나라국민의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을 살펴본 결과 **미국인(37.04%) > 탈북자(21.02%) > 동남아시아인(20.22%) > 조선족(15.43%) > 일본인(14.39%) > 중국인(9.06%)** 순으로 나타남(매우 친근/다소 친근 합산 결과)

나. 작년 대비 **미국인, 동남아시아인, 일본인**에 대한 친근감은 소폭 상승하였으며, **탈북자, 조선족, 중국인**은 하락하였음.

다. 구체적으로 **탈북자, 조선족, 중국인**에 대한 친근감은 이번 해에 조사 이래로 모두 최저를 기록함. 이러한 결과는 탈북자의 경우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월북 사건 등에 의해, 또 중국인의 경우 코로나 19의 여파 등 반중국 정서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됨.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경제적 친화성

라. 2020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경제적 친화성을(별로 꺼리지 않음/전혀 꺼리지 않음 합산) 살펴본 결과 **동네이웃(44.27%) > 직장동료(40.52%) > 사업동업자(21.60%) > 학교교사(19.50%) > 결혼상대자(17.07%) > 지역대표(16.36%)** 순으로 나타남

마. 특히 이번해 새롭게 구성하여 응답을 살펴본 학교교사와 지역대표의 경우 친화성이 2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대표의 경우 결혼상대자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대표로 사회적 친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바.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전 항목에서 증가하였으나 2020년 하락하였고 특히 직장동료와 동네이웃에서의 하락폭이 컸으나 그럼에도 2018년보다 높은 수준임

(3) 북한이탈주민 인식 및 정책의 효용성

사. 2020년 북한이탈주민 인식 및 정책의 효용성을 살펴본 결과(매우 동의함/다소 동의함 합산) 작년 대비 모두 하락하였으며 특히 **‘이질화 해소’의 경우 급격히 하락하였음**

4. 소결

단절의 시대 우리 국민의 통일감정을 통일에 대한 감정, 핵 위협감, 핵위협 및 무력도발로 인한 죽음 불안, 탈북민 친근감, 탈북민 사회경제적 친화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통일에 대한 감정은 기쁨, 희망, 불안, 시큰동, 분노, 슬픔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작년 대비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하였다. 기쁨 감정이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은 남북관계의 어려움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는 양면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올해 통일의 필요성 인식은 소폭 낮아졌으나 통일에 대한 감정의 총량의 증가가 나타났다. 한편 통일에 대한 개별 감정에 대한 분석 이외에 국민의 복합적인 감정을 고려한 감정구조의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에 따른 특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이 작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감은 오히려 하락한 점은 2018년의 효과 혹은 북한의 핵보유 사실에 익숙해지는 효과 등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위협감을 느끼는 비율이 70% 이상이며, 북한의 핵보유 및 무력도발로 인한 죽음에 대한 불안 역시 50% 이상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감정의 영향에 대한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 탈북민에 대한 감정을 살펴본 결과 올해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월북 사건 등 속에서 탈북민 친근감, 사회경제적 친화감, 그리고 탈북민의 이질화 해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역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2020 통일의식조사

단절 시대의 통일 감정

김희정
 인하대학교

2020 단절시대의 통일 감정

- ✓ 2018년 조성되었던 화해 무드가 사그라들면서 경색 국면에 이르렀고, 급기야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면서 남북간 긴장이 높아졌다. 이는 6월 13일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이 "확실하게 남조선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라고 한 뒤 일어난 일로 남북관계의 단절을 상징하는 행위였다.
- ✓ 남북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해 개인간, 집단간, 국가간 단절의 시대가 도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심리적 거리두기, 코로나 블루, 비대면 사회, 온라인 소통 등의 키워드 등이 언론의 주요 장면을 채웠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세계화를 향해 달려왔지만 타국과의 인적 이동을 저지하기 위해 빗장을 걸었고, 국가 간 이슈에서도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우면서 국가간 단절감도 높아졌다.
- ✓ 지구적 차원의 '단절'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대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감정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서론

연구내용

통일 감정이란?

- 통일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개인 및 집단의 감정. 통일감정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문화 속에서 감정 주체인 개인의 경험과 사회 문화로부터 배태되고 형성된 '사회적 성격'을 지닌 감정임

통일감정의 중요성

- 통일 감정은 동적인 사회적 과정으로 통일에 대한 감정적 상호작용과 감정적 이해는 국민의 통일과 관련된 정책, 정치적 행위와 태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함. 또한 이렇게 이미 습속화된 감정(감정 아비투스)은 재 생산 되고 동시에 상황을 해석하고 변형시킴

통일 감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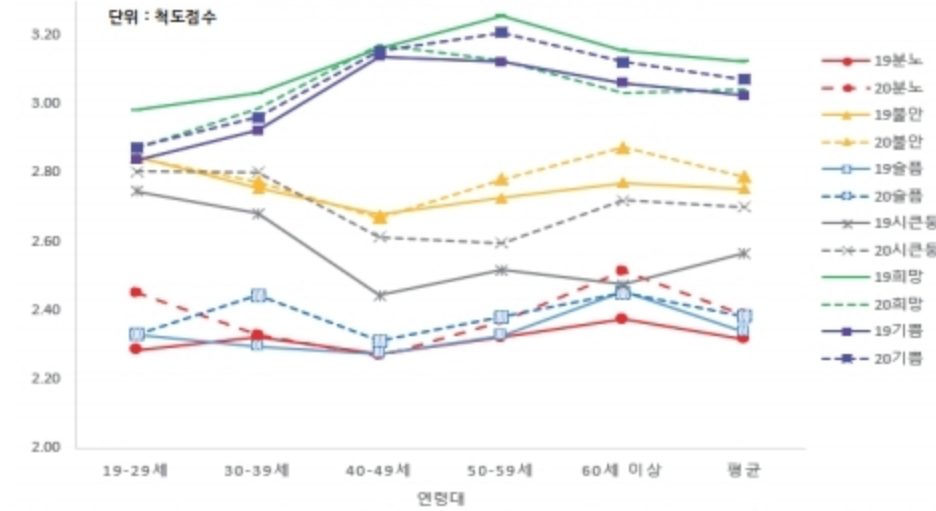
- 2020 통일의식조사 문항 중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위협감', '통일에 대한 기분', '죽음불안', '이주자 친근감', '탈북민 친화성'을 중심으로 살펴봄. 연령, 세대는 통일감정과 의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주요한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하나이므로 연령대별 통일 감정을 분석함

연구 결과

5

연령대별 통일 감정(2019-2020)

Q. 통일을 생각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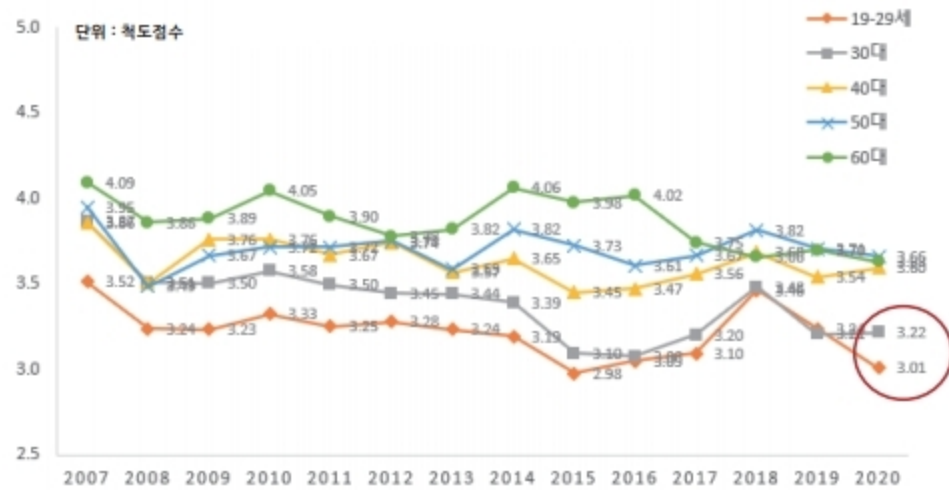


- 올해 통일에 대한 감정의 순위는 기쁨(3.07) > 희망(3.04) > 불안(2.79) > 시큰둥(2.70) > 분노(3.39) > 슬픔(2.38)으로 나타남
- 작년 대비 분노, 불안, 슬픔, 시큰둥, 기쁨 감정 증가, 그 중 시큰둥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희망 감정은 하락

7

연령대별 통일의 필요성(2007-2020)

Q.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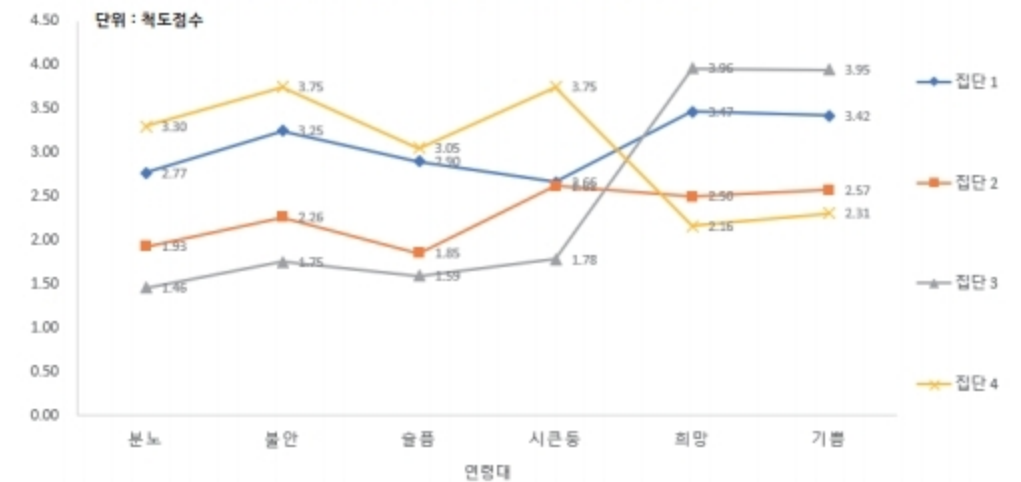


- 통일의 필요성 평균의 순위는 올해 50대(3.66) > 60대(3.63) > 40대(3.59) > 30대(3.21) > 20대(3.01) 임.

6

통일에 대한 감정 구조 유형(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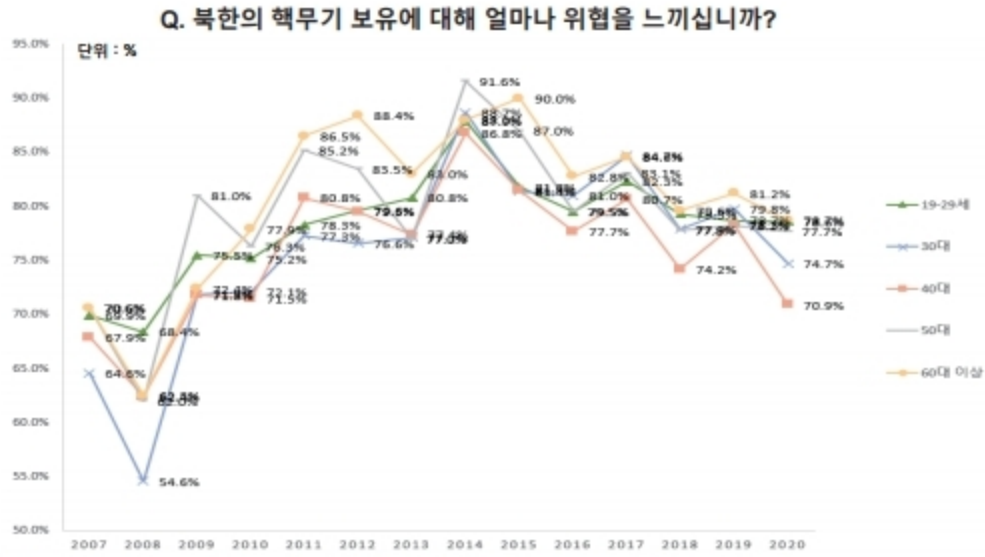
Q. 통일을 생각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 올해 통일에 대한 감정에 대해 군집분석 결과 높은 감정(집단 1), 낮은 감정(집단 2), 긍정감정(집단 3), 부정감정(집단 4)로 나타남
- 추후 감정구조 유형별로 타 변수와의 관계 분석, 작년 유형 및 북한주민의식조사 결과와의 비교 분석 필요

8

연령대별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감(200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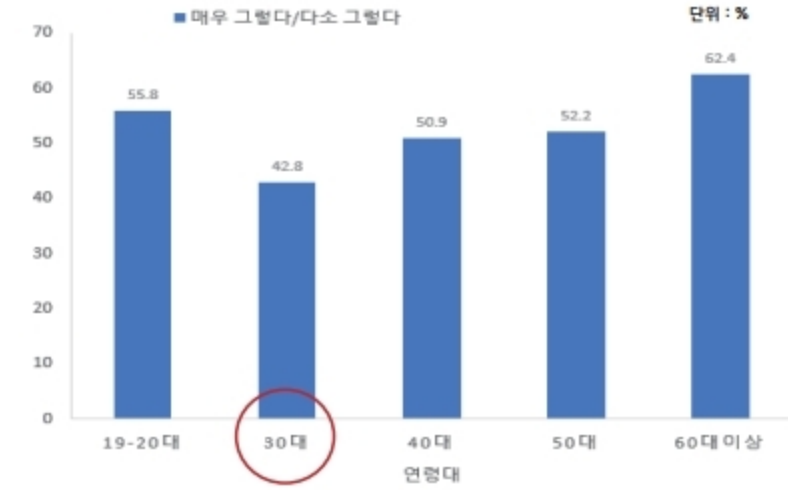


-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감은 전 연령 70%대로 나타났으며 작년 대비 소폭 하락
- 연령대별 순위는 60대(78.7%)>20대(78.6%)>50대(77.7%)>30대(74.7%)>40대(70.9%)로 나타남

9

연령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및 핵위협에 의한 죽음 불안(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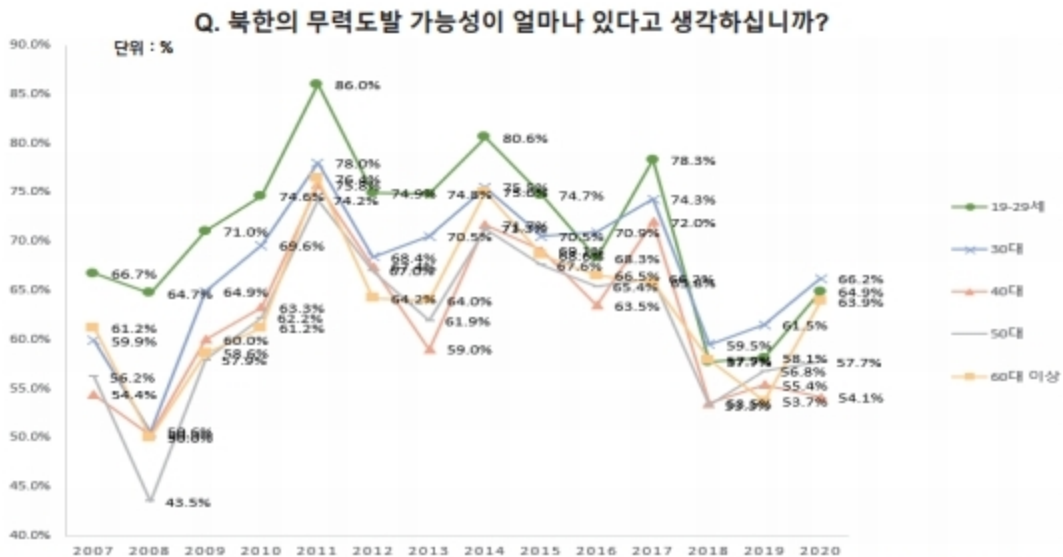
Q. 북한의 핵 위협과 무력도발 소식을 들을 때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끼십니까?



- 북한의 무력도발 및 핵위협에 대한 우리 국민의 평균 53.1%가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낌
- 연령대별 순위는 60대>20대>50대>40대>30대 임

11

연령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2007-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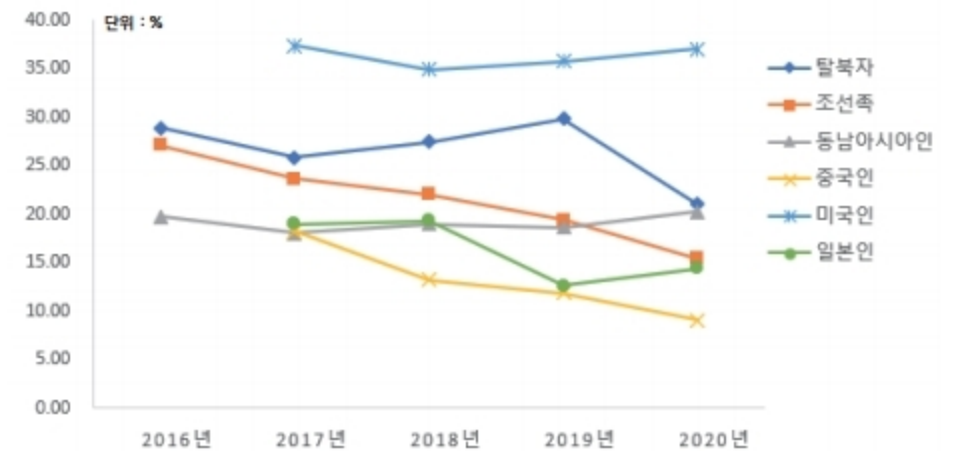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은 40대 제외 전 연령대에서 작년 대비 증가. 60대(10.2%p), 20대(6.8%p), 30대(4.7%p) 순 증가폭 큼.
- 연령대별 순위는 30대(66.2%)>20대(64.9%)>60대(63.9%)>50대(57.7%)>40대(54.1%)임

10

이주자 친근감(2016-2020)

Q.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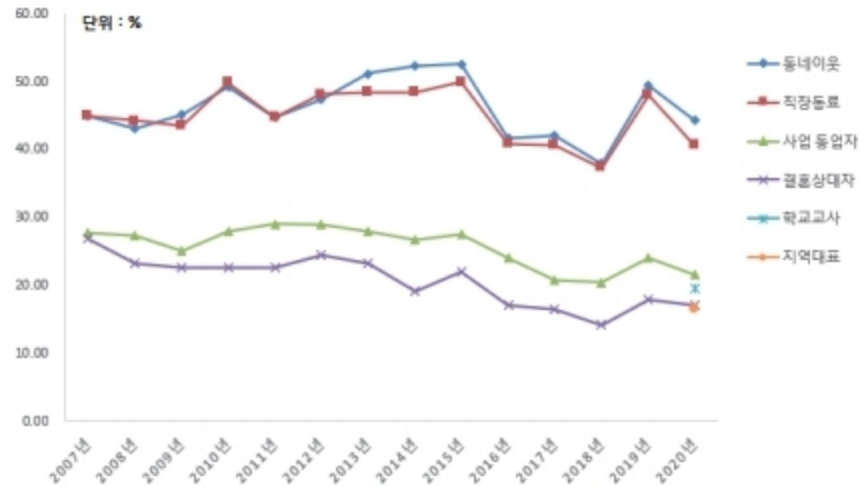


- 올해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은 미국인>탈북자>동남아시아인>조선족>일본인>중국인 순으로 나타남
- 지난 해 대비 탈북자, 조선족, 중국인 친근감이 감소하였고, 미국인, 동남아시아인, 일본인의 경우 소폭 상승하였음

1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경제적 친화감(2007-2020)

Q. 북한이탈주민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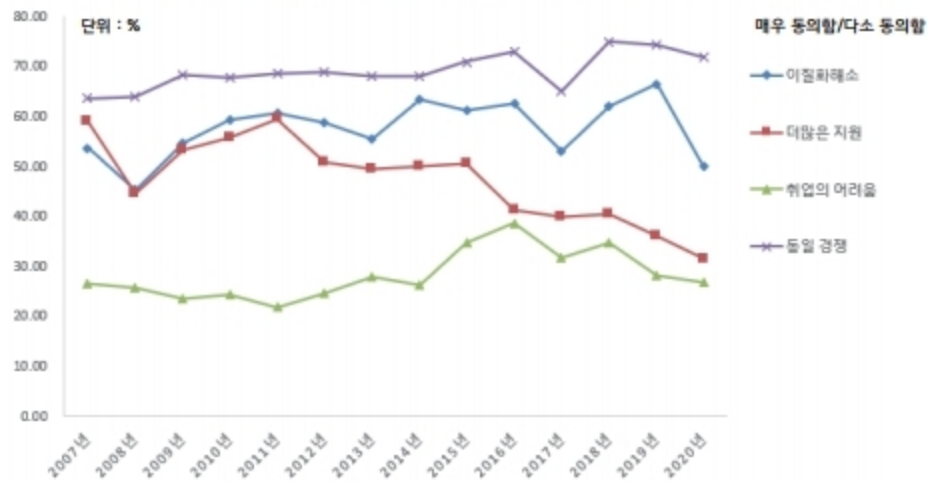


• 올해 탈북민에 대한 사회경제적 친화감 순위는 동네이웃>직장동료>사업동업자>학교교사(신규)>결혼상대자>지역대표(신규) 임 13

소결 및 논의

북한이탈주민에 인식 및 정책의 효용성(2007-2020)

Q.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올해 북한이탈주민 인식 및 정책 효용성은 작년 대비 하락, 특히 '이질화 해소'의 경우 큰 폭으로 하락 14

소결 및 논의

단절의 시대, 통일 감정

- 통일에 대한 감정은 기쁨, 희망, 불안, 시큰둥, 분노, 슬픔 순이며,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작년 대비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 남북관계의 어려움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는 양면적 역할
-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 통일에 대한 개별 감정 분석 이외에 감정구조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통일 감정의 분화에 대한 심층 분석 필요, 20대의 감정 민감성, 부정적 감정군 혹은 분노 감정군 특징 등에 대한 분석 필요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이 작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감은 오히려 하락한 점은 2018년의 효과 혹은 북한의 핵보유 사실에 익숙해지는 효과 등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나 위협감 비율 70% 이상, 죽음에 대한 불안 역시 50% 이상 확인되고 감정의 영향에 대한 추후 분석 필요
- 탈북민에 대한 감정을 살펴본 결과 올해 대분전단 살포, 탈북민 월북 사건 등 속에서 탈북민 친근감, 사회경제적 친화감 하락하였으며 탈북민의 이질화 해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역시 하락
- 올해 통일의 필요성 인식은 소폭 낮아졌으나 통일에 대한 감정의 총량 증가

감사합니다

2020 한국인의 통일외식

단절의 시대,
통일의식 변화

제2부 심화분석

발표8

복합갈등시대의 ‘신뢰’와 평화 프로세스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복합갈등시대의 '신뢰'와 평화 프로세스 |

김학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 서론 : 왜 신뢰가 문제인가?

가. 남북 분단문제 외의 한국 사회 갈등지형이 복합화되고 있음

- 1) 통일외교조사에 따르면 통일에 대한 기존의 국민 여론은 지역, 세대, 이념, 정당지지, 교육수준, 소득수준, 성별 등에 따라 달랐음.
- 2) 2020년에는 특히 코로나 위기와 남북 관계의 어려움, 미중관계의 갈등 뿐 아니라 사회 내부의 양극화와 부동산, 인구 문제 등 한국 사회가 안팎으로 대면하고 있는 복합 과제들이 사회적 갈등의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음

나. 복합적 갈등을 중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함

- 1)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세계화, 금융화, 자동화, 중국과 인도의 부상으로 인한 국제질서 변화, SNS의 확산으로 인한 미디어 지형 변화로 정치적 불안이 자라나며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이나 정부와 경제 시스템,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 이런 안팎의 여러 문제들을 대면하며 특히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외적 신뢰구축(CBM)은 물론이고 사회 갈등을 중재하고 풀어가기 위해 국내적 신뢰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3) 이 글은 통일정책과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중요한 토대가 되는 정부와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의 추세와 특성을 알아보고,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들과 신뢰와 연관된 여론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2. 세계적 신뢰의 추세와 한국 사회의 신뢰

가. 세계적으로 신뢰 수준이 저하되고 있으며 국가별, 국내 격차가 커지고 있음

- 1) 20여년간 사회적 신뢰를 추적해온 에델만 재단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된 나라, 실업, 경제성장 저하가 있는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정부,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음.
- 2) 특히 'informed public'과 'mass population'사이의 신뢰의 격차가 커지며, 사회적 계층간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2012년 5%, 2020년 14%)
- 3) 한국에선 가정의 경제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낮고(한국 36%), 세계적으로 경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56%), 앞으로 존경과 존엄을 잃어갈 것에 대한 두려움('fear being left behind')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일자리 상실에 대한 걱정(83%), 기술 변화가 너무 빠르다(61%)는 우려를 갖고 있으며, 미디어의 정보가 믿을 만하지 않고(57%), 가짜 뉴스가 활용된다(76%)고 생각함.
- 4) 이런 도전들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뢰하는 사람들은 과학자(80%), 지역 공동체(69%), 시민들(65%), CEO(51%), 종교지도자(46%), 정부 지도자(42%), 부유층(36%) 순이었음 [출처] 2020 Edelman Trust Barometer
- 5) 불신이나 우려(distrust, doubt)는 두려움과 불안(fear, threat, anxiety)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음.

나. 한국의 신뢰는 지난 10년간(2009~2016) 하락하는 추세였음

- 1) OECD의 경우 한국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013년부터 2018년 평균 0.46% 올랐으며 2018년 기준 33% 수준임. (2013(29.7%), 2014(29.7%), 2015(29.7%), 2016(33%), 2017(33%), 2018(33%) 전반적으로 한국의 정부와 공공기관 신뢰도는 OECD 평균보다는 정부, 사법제도, 경찰, 군대에 대한 신뢰도가 한국이 낮게 나옴
- 2) 한편 한국종합사회조사(2003~2018)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및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는 대체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상승하다가, 이후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 2018년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청와대, 교육계에 대한 신뢰가 다소 상승했음.
- 3) 2018년 기준 국회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으며, 종교계, 노동조합, 신문에 대한 신뢰가 낮고, 대기업, 중앙정부, 지방정부, 군대, 방송국, 시민단체, 법원, 청와대, 교육계, 학계, 금융기관, 의료계 순으로 신뢰가 높아짐

3. 2020년 통일의식조사와 한국 사회의 신뢰

가. 2020년 통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사회기관별 신뢰는 유사한 수준임

- 1) 한국사회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기관은 의료계, 금융기관, 교육계와 학계이며 다음으로 대기업, 청와대, 시민단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50% 안팎의 신뢰를 받고 있음.
- 2) 노동조합, 법원과 사법부는 30%대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종교단체와 언론사는 20%대, 국회는 10%대의 신뢰를 받고 있음.
- 3) 이는 2020년의 코로나 사태, 조사시기와 관련된 특징(의료기관 신뢰)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으나 지난 10여년의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음.

나. 한국사회의 신뢰를 결정하는 변인들은 주로 지역, 세대, 정파성임

- 1) 사회기관별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도시거주, 나이, 이념, 교육수준, 소득수준, 거주지역, 성별, 정당지지)을 통계 분석한 결과 주로 거주 지역, 세대, 당파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소득, 교육수준, 이념도 약간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 신뢰수준이 높은 의료계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들, 보수 성향 시민들의 불신이 확인되며, 교육계와 학계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 대도시, 나이가 신뢰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
- 3) 청와대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들의 불신, 광주 시민들의 신뢰, 민주당 지지자의 신뢰, 국민의당 지지자의 불신이 뚜렷해 신뢰와 불신이 가장 정치적으로 양극화 되어 있음
-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신뢰하고, 거주지역과 지지 정당에 따라 신뢰도에 차이가 발생함.
- 5)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대도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불신이 높고, 국회에 대해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소도시에 거주할수록 불신하며 정당지지도 연관되어 있음.
- 6) 이번 조사의 결과 한국사회 전반의 불신이 대체로 어디서 기원하는지 확인되었으나 세계적 추세와 관련된 교육-소득수준은 아직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역, 세대, 정당지지, 정치 성향순으로 정부 및 사회기관 신뢰/불신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지역(10), 나이 (6), 당파성(6), 도시-농촌(6), 소득(2), 교육수준(2), 이념(1), 도시 농촌의 격차, 소득, 교육격차도 조금씩 신뢰 격차에 연결되는 상황.

4. 한국사회의 신뢰와 통일정책, 북한인식, 주변국 인식의 관계

가. 정부에 대한 신뢰는 통일정책, 북한인식과 연관됨

- 1) 정부에 대한 신뢰와 대북 정책 만족도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음. 특히 정부 기관별 신뢰도와 대북정책 만족도의 관계를 보면, 청와대(0.434), 중앙정부(0.304), 지방정부(0.235), 시민단체(0.216), 국회(0.162)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즉 통일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청와대, 중앙정부 신뢰와 가장 관련도가 높음.

- 2) 청와대에 대한 신뢰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임(0.228)
- 3)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식함(계수 0.282)
- 4)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게 친근감을 느낌(계수 0.169)

나. 정부에 대한 신뢰는 주변국 위협인식과 정치적 정서들과도 연관됨

- 1) 주변국 위협 인식에서 위협의 크기는 분명하게 북한, 중국, 일본, 미국 순 이지만, 청와대를 대체로 신뢰하는 사람보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북한,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조금씩 큼. 청와대를 대체로 신뢰하는 사람이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보다 일본, 미국 위협인식이 조금씩 큼 (앞의 주변국 인식 연구 참조)
- 2) 청와대에 대한 신뢰는 정치적 긍정/부정 감정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희망 (0.201) 기쁨 (0.179) 감정과 긍정적 상관관계, 불안 (-0.165) 감정과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임

5. 결론

가. 한국 사회의 신뢰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역, 세대, 지지정당과 정치성향의 영향을 받음

- 1) 신뢰의 격차에 있어서 세계적 추세와 관련된 교육-소득수준은 아직 크게 차이 없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역, 세대, 정당지지, 정치성향순으로 정부 및 사회기관 신뢰/불신 차이가 나타남.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역, 세대, 정당지지가 결합된 것을 바탕으로 거기에 도시 농촌의 격차, 소득, 교육격차도 연결되는 상황.
- 2) 사회기관 신뢰와 통일 정책 만족도, 북 정책 만족도/통일여론/북한인식/낮은관용/주변국 위협인식 모두 통계적 상관관계가 발견됨. 즉 신뢰는 정책 방향과 결과에 매우 중요.
- 3) 또한 신뢰는 반대되는 감정들과도 연결되고 있음. 국가간 불신, 국민들 사이의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 무엇을 위협으로 느끼는가에 관한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체제 생존, 코로나 위험, 국가간 경쟁, 실직 위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나. 신뢰는 역량과 윤리의 결합으로 향상되며, 제로섬 게임을 막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수적임

- 1) 일반적으로 신뢰는 자신감(실력)과 윤리(공정, 정당, 정의)의 축으로 구분가능하며, 이에 따르면 기업은 실력, NGO는 윤리가 높은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미디어, 정부는 다소 낮게 평가됨. 새로운 도전들에 맞서기 위해 기업-학자/전문가-정부- 시민단체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
- 2) 정부의 신뢰는 response 대응(필요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 reliability의지할 수 있는(변화를 예상하고 시민을 보호) openness 공개(시민들로부터 듣고, 자문하고, 설명), integrity 윤리(힘과 공적 자원을 윤리적으로 사용), fairness 공정(모든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3) 오늘날 세계화, 자동화, 금융화, 기술 대기업의 부상으로 나타나는 사회변화가 정치적 불안의 토양이 되는 만큼, 분단문제에 대응하는 역량과 사회문제를 푸는 역량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제한된 역량으로 이 문제들을 동시에 대면하기 위해서는 타협없이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을 예방하고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과 사회 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야 함.¹
- 4) 이 연구는 2020년 시점에 조사된 것으로 추세 분석을 할 수 없었으며, 한국사회의 신뢰 라는 태도와 감정의 세부 요소들(불확실성과 불안, 의존하고 싶은, 힘과 권위, 동일시와 기대)에 대한 고민과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¹ 애쓰모글루는 심하게 양극화되면 타협과 연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늦기 전에 공동의 기반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제로섬 게임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연합, 경제위기에 대한 단거, 제도적 대응, 중재와 조합주의, 국가의 관리 역량 발전과 사회적 참여를 위한 정치 개혁을 제시하고 있음. .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장경덕 옮김, (2020), 『좁은 회랑 : 국가, 사회 그리고 자유의 운명 The Narrow Corridor』, 시공사, 776-777쪽.

2020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외식조사'

단절의 시대 '신뢰'와 평화 프로세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김학재 (통일평화연구원)

정부 및 사회기관 신뢰의 세계적 추세 (2001~2020)

20 YEARS OF TRU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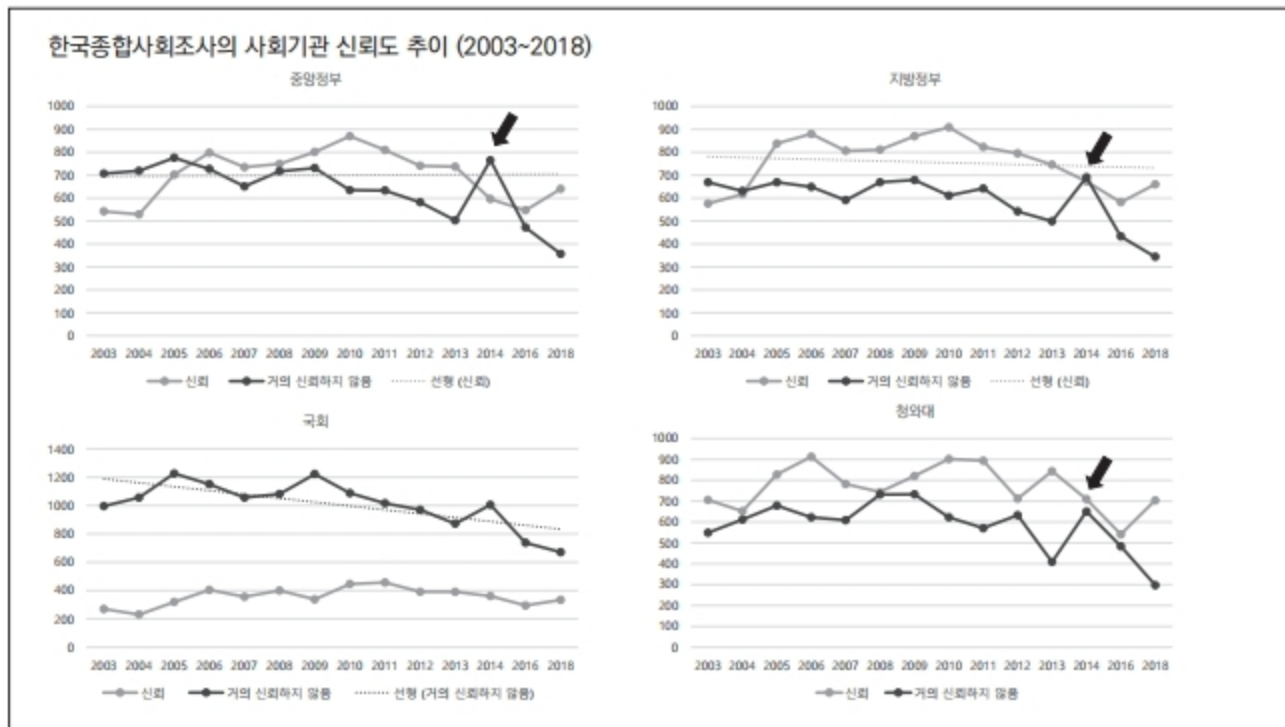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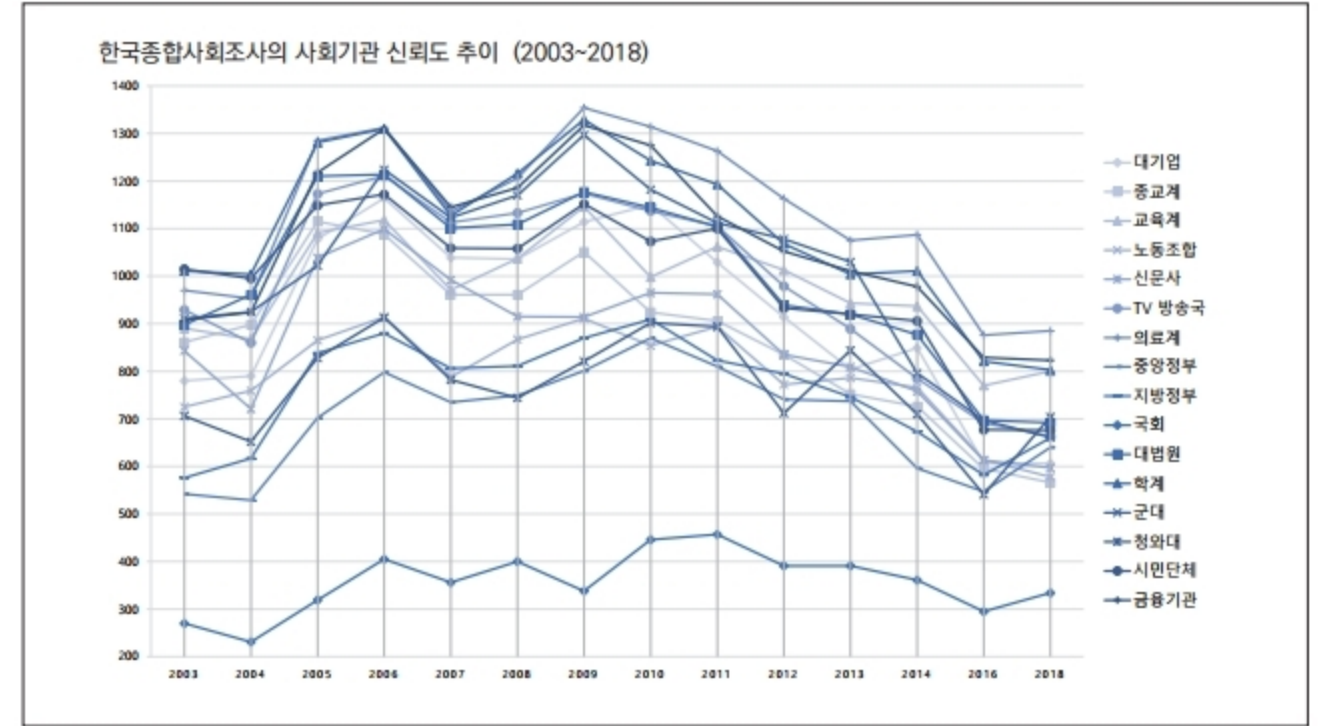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Rising Influence of NGOs	Fall of the Celebrity CEO	Earned Media More Credible Than Advertising	U.S. Companies in Europe Suffer Trust Discount	Trust Shifts from "Authorities" to Peers	A "Person Like Me" Emerges as Credible Spokesperson	Business More Trusted Than Government and Media	Young People Have More Trust in Business	Trust in Business Plummets	Performance and Transparency Essential to Trust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Business Must Partner With Government to Regain Trust	Fall of Government	Crisis of Leadership	Business to Lead the Debate for Change	Trust is Essential to Innovation	Growing Inequality of Trust	Trust in Crisis	The Battle for Truth	Trust at Work	Trust: Competence and Ethics

1. 왜 신뢰가 문제인가?

- 한국사회는 복합 갈등 사회(분단, 이념, 지역, 세대, 정파, 교육, 소득)
- 2020년 코로나 위기, 남북관계 교착, 미중 갈등, 양극화, 부동산, 인구..
-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세계화, 금융화, 자동화, 중국과 인도의 부상, SNS의 확대로 정치적 불안이 자라나며 신뢰가 낮아지고 있음
- 참여한 남북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 화해를 추진하려면 대외적 신뢰구축(CBM)뿐 아니라 사회 내부의 갈등을 중재하고 풀어가기 위한 토대 필요
- 정부 및 사회 기관에 대한 신뢰의 추세와 특성,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들, 신뢰와 통일 정책 관련 여론들의 관계 검토

2. 신뢰의 세계적 추세와 한국의 현황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바닥을 치고 다시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던 신뢰 수준
-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고
- "Informed public"과 "mass population"사이의 신뢰/불신 격차 14%
- 경제 성장에 대한 회의적 시각(36%), 경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 (56%)
- 존경과 존엄을 잃어갈 것에 대한 두려움 증가('fear being left behind')
- 일자리 상실에 대한 걱정 (83%), 기술 변화가 너무 빠르다(61%)
- 미디어의 정보가 믿을 만하지 않고(57%), 가짜 뉴스가 활용된다(76%)
- 과학자(80%), 지역 공동체(69%), 시민들(65%), CEO(51%), 종교지도자(46%), 정부 지도자(42%), 부유층(36%)가 우리나라의 도전들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신뢰
- 기후변화, 자동화, 소득 불평등, 미투 [출처] *2020 Edelman Trust Barometer*



3. 2020 통일 의식 조사와 한국 사회의 신뢰

- 사회 기관별 신뢰의 정도 (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언론)
- 사회 기관별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지역, 이념, 세대, 정당)
- 사회 기관별 신뢰의 특징들 (신뢰와 불신의 격차, 큰 영향을 주는 변인들, 변인들의 결합)

한국의 사회기관별 신뢰와 불신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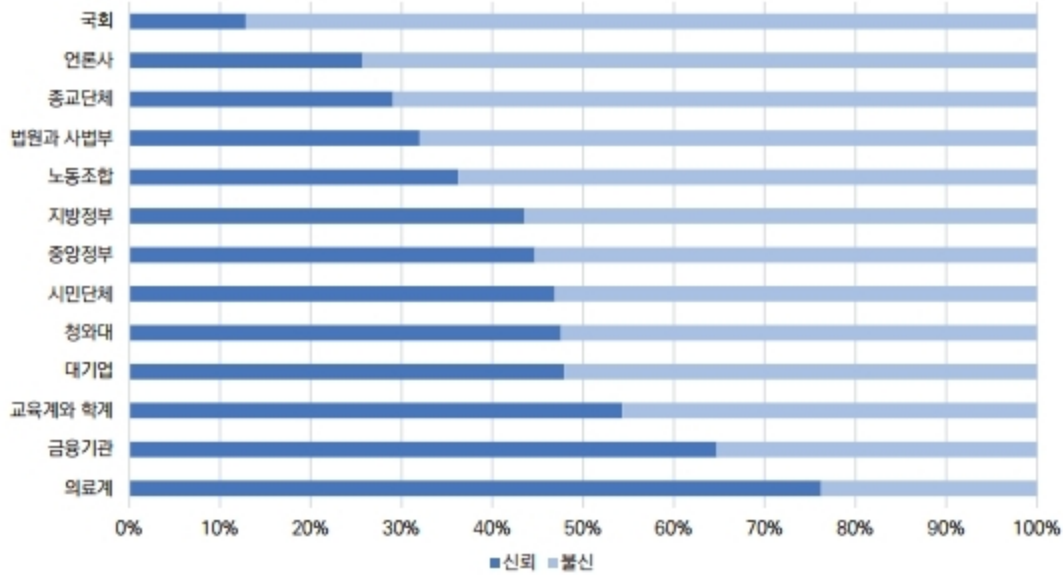


표 2. 사회 기관 신뢰도 결정 요인에 대한 순위로짓 분석

	중앙정부		지방정부		노동조합		법원사법부		종교단체		언론사		국회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도시거주	-0.085	0.919	0.004	1.004	0.127	1.136	0.374***	1.464	0.204**	1.228	0.214*	1.239	0.284*	1.329
나이	-0.007*	0.993	-0.011**	0.989	0.004	1.004	-0.001	0.999	-0.008*	0.982	-0.002	0.998	0.009*	1.009
보수 이념 성향	0.035	1.035	0.252***	1.287	0.001	1.001	0.067	1.070	0.041	1.042	0.033	1.034	-0.014	0.986
교육수준	0.015	1.015	0.013	1.013	0.018	1.018	0.013	1.013	0.011	1.011	0.008	1.008	0.009	1.009
소득수준	0.000	1.000	0.034	1.034	0.029	1.030	0.017	1.017	0.049*	1.051	0.024	1.024	0.079**	1.082
대구거주	0.817***	2.285	-0.068	0.934	-0.024	0.977	0.492*	1.635	0.647**	1.909	-0.002	0.998	0.415	1.514
광주거주	0.987***	0.373	1.196***	0.302	-0.093	0.911	0.786***	2.194	0.797**	2.219	0.167	1.181	-0.423	0.655
여성	0.176	1.192	0.155	1.167	-0.031	0.970	0.066	1.069	-0.179	0.836	-0.073	0.930	0.002	1.002
민주당지지	0.647***	0.523	-0.244	0.783	-0.032	0.969	-0.186	0.830	0.207	1.230	0.239	1.270	-0.158	0.854
국민의힘지지	0.302	1.353	0.287	1.333	0.555**	1.742	0.037	1.038	0.102	1.108	-0.273	0.761	0.495*	1.640
무당파	0.226	1.254	0.345	1.412	0.280	1.323	-0.108	0.898	0.219	1.244	0.098	1.103	0.290	1.336

***p<0.01, **p.<0.05, *p< 0.1

표 1. 사회 기관 신뢰도 결정 요인에 대한 순위로짓 분석

	의료계		금융기관		교육/학계		대기업		청와대		시민단체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도시거주	0.002	1.002	0.008	1.008	0.154*	1.168	0.037	1.038	0.028	1.028	0.165*	1.179
나이	-0.007	0.993	-0.003	0.997	-0.015***	0.985	-0.002	0.998	-0.001	0.999	0.011***	1.011
보수 이념 성향	0.098*	1.098	0.014	1.014	0.016	1.016	0.020	1.020	0.045	1.046	0.018	1.018
교육수준	0.019	1.019	0.021*	1.021	0.001	1.001	0.003	1.003	0.021*	1.021	0.007	1.007
소득수준	-0.018	0.982	-0.023	0.977	-0.025	0.975	-0.001	0.999	0.013	1.013	0.026	1.026
대구거주	1.038***	2.823	-0.136	0.873	0.681**	1.977	1.042***	2.835	0.598**	1.814	0.354	1.425
광주거주	-0.820*	0.538	-1.996***	0.138	0.432	1.540	-0.305	0.737	-1.857***	0.168	-1.236***	0.291
여성	-0.160	0.852	0.085	1.089	0.039	1.040	0.015	1.015	0.130	1.139	-0.031	0.969
민주당지지	0.113	1.120	-0.091	0.913	-0.813***	0.542	0.086	1.089	-1.283***	0.283	-0.301	0.740
국민의힘지지	0.144	1.155	0.071	1.073	-0.181	0.834	-0.401	0.669	0.671***	1.968	0.143	1.154
무당파	0.079	1.082	0.248	1.281	-0.108	0.898	-0.181	0.835	0.165	1.179	0.304	1.356

***p<0.01, **p.<0.05, *p< 0.1

사회기관 신뢰도 결정 요인

- 신뢰수준이 높은 의료계 : 대구 시민들, 보수 성향 시민들의 불신이 확인되며, 교육계와 학계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 대도시, 나이가 신뢰도에 영향
- 청와대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들의 불신, 광주 시민들의 신뢰, 민주당 지지자의 신뢰, 국민의당 지지자의 불신이 뚜렷해 신뢰/불신이 가장 정치적으로 양극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신뢰하고, 거주지역과 지지 정당에 따라 신뢰도에 차이가 발생함.
-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대도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불신이 높고, 국회에 대해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소도시에 거주할수록 불신하며 정당 지지도 연관되어 있음.
- 지역(10), 나이 (6), 당파성(6), 도시-농촌(6), 소득(2), 교육수준(2), 이념(1),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역, 세대, 정당지지에 더해 도-농격차 순으로 정부 및 사회기관 신뢰/불신 격차가 나타남

4. 한국 사회의 신뢰와 통일정책, 북한인식

- ① 정부와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와 대북 정책 만족도
- ② 정부와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와 통일 인식
- ③ 정부와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와 북한 인식
- ④ 정부와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
- ⑤ 정부와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와 정치적 감정
- ⑥ 정부와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와 주변국 위협 인식

4. 한국 사회의 신뢰와 통일정책, 북한인식

- 청와대에 대한 신뢰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임(0.228)
-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식함(계수 0.282)
-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게 친근감을 느낌(계수 0.169)

4. 한국 사회의 신뢰와 통일정책, 북한인식

- 정부와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와 대북 정책 만족도

	계수	유의확률
청와대	0.434	0.000
중앙정부	0.304	0.000
지방정부	0.235	0.000
시민단체	0.216	0.000
국회	0.162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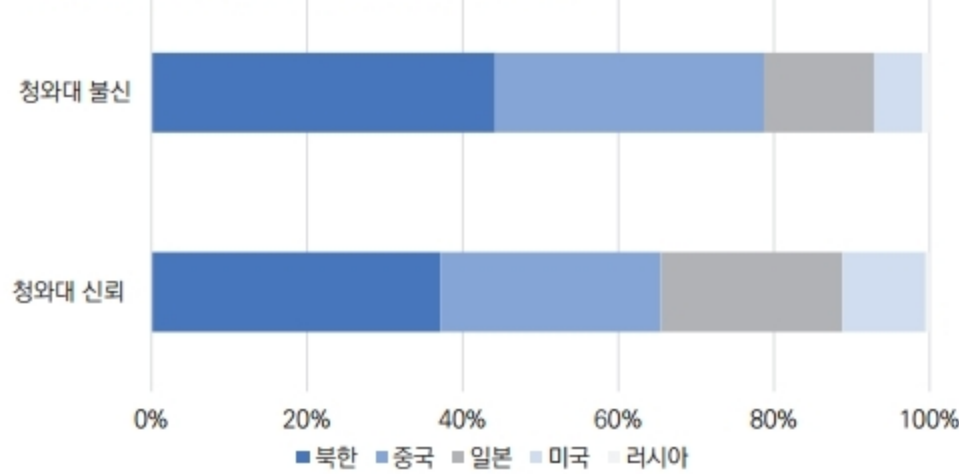
- 정부에 대한 신뢰와 대북 정책 만족도는 긴밀한 상관관계
- 통일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청와대, 중앙정부 신뢰와 가장 관련도가 높음.

4. 한국 사회의 신뢰와 주변국 인식 정치 감정

- 주변국 위협 인식에서 위협의 크기는 분명하게 북한, 중국, 일본, 미국 순이지만
- 청와대를 대체로 신뢰하는 사람보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북한,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조금씩 큼. 청와대를 대체로 신뢰하는 사람이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보다 일본, 미국 위협인식이 조금씩 큼
- 청와대에 대한 신뢰는 정치적 긍정/부정 감정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희망(0.201) 기쁨(0.179) 감정과 긍정적 상관관계, 불안(-0.165) 감정과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임

정부에 대한 신뢰와 주변국 위협인식

(질문)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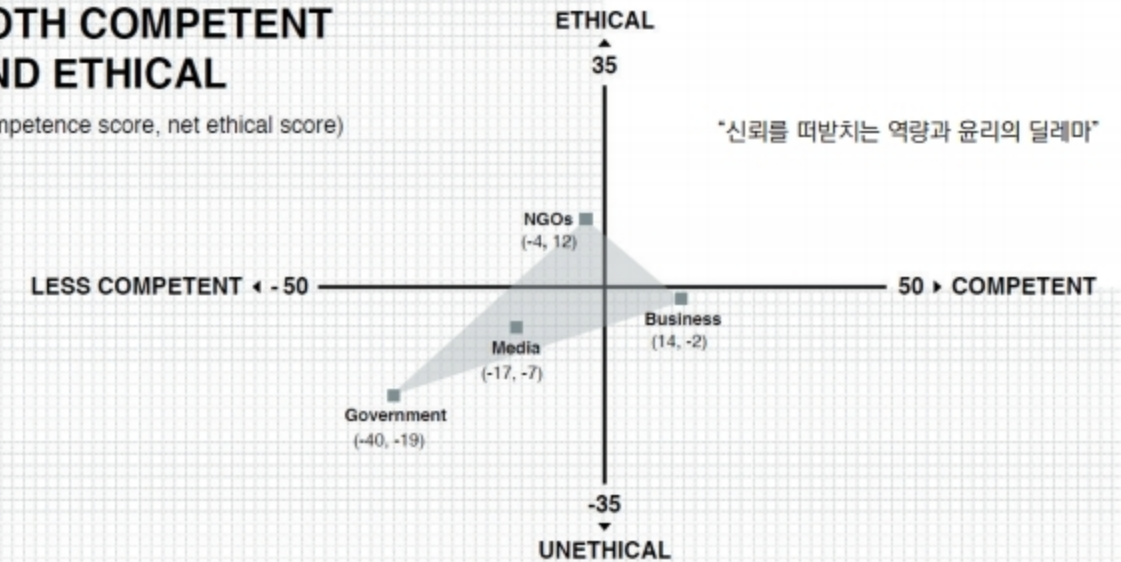
- 한국 사회의 신뢰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역, 세대, 지지정당과 도-농 격차, 정치성향의 영향을 받음
- 신뢰의 격차에 있어서 세계적 추세와 관련된 교육-소득수준은 아직 크게 차이 없고, 지역, 세대, 정당지지, 도-농 격차 순으로 정부 및 사회기관 신뢰/불신 차이가 나타나고 거기에 소득, 교육격차, 이념이 연결되어 있음.
- 사회기관 신뢰와 통일 정책 만족도, 북 정책 만족도/통일여론/북한인식/낮은 관용/주변국 위협인식 모두 통계적 상관관계가 발견됨. 즉 신뢰는 정책 방향과 결과에 매우 중요.
- 신뢰는 반대되는 감정들과도 연결되고 있음. 국가간 불신, 국민들 사이의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 무엇을 위협으로 느끼는가에 관한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체제 생존, 코로나 위협, 국가간 경쟁, 실직 위협, 변화에 대한 두려움)

6. 결론

- 신뢰는 역량과 윤리의 결합으로 향상되며, 제로섬 게임을 막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수적임
- 일반적으로 신뢰는 자신감(실력)과 윤리(공정, 정당, 정의)의 축으로 구분. 기업은 실력, NGO는 윤리가 높은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미디어, 정부는 다소 낮게 평가됨, 새로운 도전들에 맞서기 위해 기업-학자/전문가-정부-시민단체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
- 정부의 신뢰는 **response**(필요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 **reliability** (변화를 예상하고 시민을 보호) **openness**(시민들로부터 듣고, 자문하고, 설명), **integrity**(힘과 공적 자원을 윤리적으로 사용), **fairness**(모든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
- 분단문제에 대응하는 역량과 사회문제를 푸는 역량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제한된 역량으로 이 문제들을 동시에 대면하기 위해서는 타협없이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을 예방하고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과 사회 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야 함.

NO INSTITUTION SEEN AS BOTH COMPETENT AND ETH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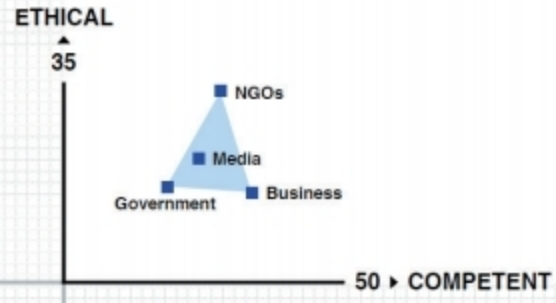
(Competence score, net ethical score)



2020 Edelman Trust Barometer. The ethical scores are averages of acts based on [INSTITUTION]_PER_DIM r1-r4. Question asked of half of the sample. The competence score is a net based on TRU_SD_[INSTITUTION] r1. Depending on the question it was either asked of the full or half the sample. General population, 25-min avg. Data not collected in China, Russia and Thailand. For full details regarding how this data was calculated and plotted, please see the Technical Appendix.

BUILDING TRUST FOR THE FUTURE

- Pay fair wages
- Focus on education and retraining
- Embrace an all-stakeholders model
- Partner across institutions



- response 대응: 필요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
- reliability 의지할 수 있는: 변화를 예상하고 시민을 보호
- openness 공개: 시민들로부터 듣고, 자문하고, 설명
- integrity 윤리: 힘과 공적 자원을 윤리적으로 사용
- fairness 공정: 모든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

© 2020 Edelman Trust Barometer. For details regarding how this model of trusted institutions, please see the Technical Appendix.

감사합니다

<http://ipus.snu.ac.kr/>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